



2012 연차보고서

2013. 3

『2012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보험연구원은 보험을 비롯한 경제·금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2월에 개원하였으며, 보험업계 및 정책당국의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2010년 11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보험연구원은 보험·금융과 리스크관리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역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와 소통구조 확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전문연구기관에 걸맞은 유연한 고용 및 성과시스템 아래 유능한 연구인력을 계속 확충하였고,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한 재임용제도와 성과보상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 연구기관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외부기관 및 연구자와의 교류와 함께 원내 소통구조도 강화해서 협력적인 연구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연구사업계획 수립시에 사원사나 유관기관, 정책감독당국의 연구수요를 조사해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연구진행과정에서도 연구수요자의 의견반영 및 연구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내부 연구과제세미나 개최시 외부 지정토론자 및 전문가 자문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사원사 임직원에게 내부 연구과제세미나 참석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연구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세미나,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금융연구기관 공동 컨퍼런스, 금융·보험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통해 연구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와 의견 청취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연구포럼을 정례 개최하고 정부 주도의 위원회, 테스크포스(T/F), 연구용역 등에 참가해서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정책당국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험연구원은 법인 설립 이후 짧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합금융서비스 환경하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으며, 이번엔 발간되는 연차보고서는 보험연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기울인 이러한 노력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3년에도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빠르게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험산업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성장·저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금융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와 소비자신뢰 회복이 보험산업 지속성장의 중요한 경영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사업관행,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고객신뢰 저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만족을 지향하여 가치사슬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험산업은 저축성보험 위주로 성장하여 왔으나 겸업화가 진전되고 다른 금융업권의 상품과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어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역할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인구구조 고령화라는 노후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합한 보험산업의 기회요인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비자중심경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보험산업의 향후 비전과 역할에 대해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발간되는 연차보고서가 보험연구원의 다양한 연구활동과 보험산업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보험연구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3월

보험연구원장 김 대 식

김 대 식

I . FY2012 주요 연구

1. 보험·금융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14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25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에 대한 소고
- 26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동향과 시사점
- 27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망보장보험의 성장전략
- 28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변화와 시사점
- 29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의미와 시사점
- 30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정책과 연준의 QE3 : 의미와 시사점
- 31 일본 보험산업의 저금리 경험과 시사점
- 32 OECD 국가의 퇴직연금감독체계 특징과 시사점

2. 보험산업 성장 비전 구축과 경쟁력 강화

- 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36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39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41 임산물재해보험 확대·도입방안 연구
- 43 자연재해보험 진흥을 위한 기본연구용역
- 45 보험과세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 47 주요국의 법률비용보험(LFI) 현황 및 시사점

3.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 50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 5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54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56 고령화대비 공·사 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
- 58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4. 소비자 보호 및 규제의 선진화

- 62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64 보험지주회사의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66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방식 개선방안
- 68 독일의 보험유통시장 현황 및 규제

5.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 72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74 자동차보험 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76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6. 금융·보험 이슈 연구

보험금융연구

- 80 즉시연금보험의 특성과 가입자 선택행동 분석
- 80 자동차보험의 확률론적 통합보험리스크 실증분석
- 81 생명보험시장에서 광고가 가격민감도에 미치는 영향
- 82 흡연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건강보험에 대한 시사점
- 82 확률모형을 활용한 교통사고 유자녀 수 추정
- 83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보험영업 효율성 분석 :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중심으로
- 83 음이항회귀모형을 이용한 보험설계사들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 84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가격효과 : 사업비율을 중심으로
- 85 집단위험모형을 이용한 성장추세에 있는 실손의료보험리스크 측정
- 86 일반화 로짓과 대응분석을 이용한 GA사업모델 방향에 관한 연구

CEO Report

- 87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88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89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90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KiRi Weekly 이슈

- 91 국내 금융회사의 국경 간 M&A 역량 강화 필요성
- 91 영국의 보험모집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정 논의와 시사점
- 92 변액연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진단과 시사점
- 92 농협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 92 보험산업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시사점
- 93 일시납 변액형 즉시연금상품 현황과 시사점
- 93 노인본인부담의료비 보장 사각지대 완화방안

Contents

94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95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 개혁 동향 및 시사점
95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개혁과 정책적 시사점
96	FY2011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원인과 시사점
96	온라인 생명보험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97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98	ING그룹의 보험사업 부문 매각의 시사점
98	농작물 재해보험으로서의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사례와 시사점
99	일본의 지급여력제도 변화와 시사점
99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방안
100	포괄수가제(DRG) 도입과 민영실손보험시장에 대한 영향
101	복지국가 스웨덴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101	풍수해보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10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 선정논의와 시사점
102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과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103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방향
103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체계적이고 전사적으로 대응해야
104	손해보험의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필요성 검토
104	중국 자동차보험제도와 시사점
105	베이비붐 세대의 생명보험 가입 및 노후준비 실태 비교와 시사점
106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동향과 시사점
107	영국의 보험판매채널 규제개선 동인과 영향
107	미국과 EU 보험중개사의 정보 공개 기준 강화의 배경과 시사점 : Contingent Commission과 이해 상충
108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참여방안
109	수익률 논란 계기로 본 변액연금시장의 구조적 변화
109	손해보험의 보험위험액 산출방법에 관한 소고
110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배분과 투자성과
110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현황과 시사점
111	이혼시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향
111	후취형 변액연금상품도입에 따른 추가적 위험과 관리방안
112	저성장·저금리 환경하에서 보험회사의 판매전략
11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의 규제방안과 시사점
113	공사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 : 프랑스 자연재해보험 사례
114	주요국의 지급결제수단 규제분석과 시사점
114	한미FTA의 보험업에 대한 영향: 미국 정부의 시각 및 시사점
115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필요성 : 재보험신용리스크의 위험과 규제 공백
116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선 방향
116	생명보험회사의 ALM 동향과 시사점

- 117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본조건
- 117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 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내용
- 118 증권업 수익구조 현황 및 시사점

KiRi Weekly 포커스

- 119 일본국채 위기설 평가
- 119 미국 잠재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
- 119 가계부채의 현황 및 평가
- 120 프랑스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 120 표준이율과 보험료 조정,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
- 120 골드먼 삭스를 통해 본 금융회사와 소비자 신뢰의 문제
- 120 제19차 개정 「상법」의 영향 :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를 중심으로
- 121 하트포드 그룹의 변액연금사업 중단 결정과 시사점
- 121 지니계수를 통해 본 소득불평등
- 121 일본 사회보장 개혁 방향과 시사점
- 122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 경감을 위한 관련 제도 강화 필요
- 122 프랑스 정권 교체와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기조 변화
- 122 운전습관을 보험료 차등화 요소로 도입하는 방안 필요
- 122 일본 신용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과 요인
- 123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필요성
- 123 일본의 민영 건강·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 신설 주요내용
- 123 서민금융의 현황과 발전방안
- 124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전략
- 124 생애자산배분 측면에서 목표기간펀드 확산이 주는 시사점
- 124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필요성
- 125 공통감독체계 2차년도 보고서의 의미와 시사점
- 125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과 보험회사 시사점
- 125 가계, 기업, 정부부채의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 126 보험회사의 모바일 기술 도입 현황과 시사점
- 126 고의성 없는 고지의무 위반 감소 방안
- 126 저소득계층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교육 IRA 검토 필요
- 127 경제성장을 둔화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
- 127 낱씨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 127 재보험거래 당사자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와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 127 보험료 카드결제 의무화 법안발의 문제점
- 128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 설립에 대한 소고
- 128 EU의 유니섹스 요율제도 도입을 통해 본 위험변수 및 위험세분화의 조건
- 128 무인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시장의 미래

Contents

129	2012 글로벌 연금지수와 우리나라의 과제
129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도의 정치적 남용과 사마리아인 딜레마
1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최근 논의 내용
130	2012년 일본 생명보험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130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 도입 추진
130	사망률견인(Mortality Drag)에 대한 소고
131	최근 칠레의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131	재보험신용리스크 특징과 접근 방법
131	사이버리스크와 사이버보험
132	변액보험 펀드의 규모별 수익률과 시사점
132	기술진보에 따른 보험판매채널의 변화 방향과 시사점
132	퇴직연금서비스중심의 환경변화와 과제
133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평가
133	영국 선임대리인 제도의 특징
133	국제서비스협정의 동향과 시사점

Ⅱ . FY2012 주관 행사

1. CEO 세미나

138	보험산업 비전 2020
140	글로벌 보험산업 Trend 및 Challenge
141	201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43	보험산업의 미래와 나아갈 길

2. 정책세미나

146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현안과 과제
149	변액연금의 소비자보호 강화방안과 상품기능 개선방안
152	캡티브 도입 및 운영방안
154	소비자 중심의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
157	보험과 통계
159	날씨보험 활성화 및 기상·기후산업과의 연계방안
161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방안
163	저금리시대, 보험산업 영향과 과제
165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종보험대리점 도입방안
167	보험정보 집중체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국제세미나

- 170 한국의 보험산업 및 배당상품 현황, 대재해보험 소개
- 172 한국 보험산업 및 자유화 현황
- 174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 178 새 금융질서에 따른 보험산업의 신성장 방안

4. 사원사 연구직원 및 출입기자단 세미나

- 186 민원동향과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 187 보험산업의 현안과제와 향후 정책방향
- 188 보험산업 발전방안과 보험연구원 역할

5.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190 SIFI 논의와 국내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 191 보험사 선진리스크 관리전략
- 192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체제의 선진화 방안

6. 기타 연구행사

- 194 보험분야에서 신용정보 활용현황과 이슈
- 196 지급능력 및 시스템위험 대응 관련 IAIS 주요 현안
- 198 정책토론회

Ⅲ. FY2013 주요 연구 계획

1. 경영 효율화

- 202 거시계량모형 개발
- 203 지속성장을 위한 금융상품 수수료 체계 연구
- 204 저성장·저금리 시대 금융산업 대응전략
- 205 보험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2. 리스크관리 선진화

- 208 경영정보의 생산 및 공시 체계 개선방안

3. 고령화와 신성장

- 210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금융산업의 역할제고 방안

Contents

- 211 소득수준을 고려한 연금세제 연구
- 212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위한 의료보장체계 연구

4. 금융보험 법제개선

- 214 보험법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 215 보험고객정보 처리 범위와 절차 연구

IV. FY2012 연구 관련 활동

- 218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 219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 220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221 고령화리뷰
- 221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 223 보험·금융 도서 정보제공

V. 일반 현황

- 226 경영비전
- 226 연혁
- 227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228 임직원 현황
- 228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 232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 2012년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연구보고서

경제·금융·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시

정책/경영보고서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경영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

조사보고서

금융·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상품·정책·시장 측면의 조사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발간

CEO Report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이슈·포커스

웹 주간지 『KiRi Weekly』의 일부분으로 경제·금융·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I.

FY2012 주요 연구

보험·금융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보험산업 성장 비전 구축과 경쟁력 강화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소비자 보호 및 규제 선진화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금융·보험 이슈 연구

Chapter

보험·금융산업 전망 및 동향 분석

-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에 대한 소고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동향과 시사점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망보장보험의 성장전략
-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변화와 시사점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의미와 시사점
-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정책과 연준의 QE3 : 의미와 시사점
- 일본 보험산업의 저금리 경험과 시사점
- OECD 국가의 퇴직연금감독체계 특징과 시사점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 보고서

14

연구배경

2013년에도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될 경우 세계경제 회복 지연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멕시코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서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 문제, 유로존의 경제 개혁정책 이행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신흥 국가의 낮은 성장률 등을 세계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꼽은 바 있다. 최근 들어 국내경제도 수출과 소비가 동시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다른 현상으로 국내경제의 장기 저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며,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본격화되며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는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 하에서 보험산업은 2013년 다양한 제도 및 감독환경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부채 적정성 평가제도의 시행으로 저금리의 영향은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과 변액보험 제도 개선 등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감독 측면에서는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 및 표준이율 인하, 리스크 중심의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등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둔 보험회사의 경

영 건전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국내외 경제상황과 전망을 전제로 생명보험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적 이슈 및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전망

IMF는 2013년 세계경제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다소 회복됨에 따라 2012년보다 0.3%p 높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선진국은 유로지역의 플러스 성장에 힘입어 2012년보다 0.2%p 높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신흥국은 경기부양과 해외수요 증가에 힘입어 2012년보다 0.3%p 높아진 5.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하방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며, 이는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함께 경기침체와 정부부채 상승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의 소폭 상승에 따라 세계무역량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소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다소 회복될 것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어 2012년보다 0.4%p 높은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교역량 증가로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수출 증가에 따라 수입도 유사한 규모로 증가하여

2013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다소 회복될 것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어 2012년보다 0.4%p 높은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지는 2012년보다 10억 달러 늘어난 약 29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교역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설비투자가 회복되지 못할 전망이다, 과도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 부진 지속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3.5%)을 여전히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본격화되며,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2013년 소비자물가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원화 강세로 인해 수입물가도 하락하여 2012년(2.2%)대비 0.3%p 높은 2.5%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3년 원/달러 환율은 연간 1,05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제도 변화 2013년 보험산업이 직면하게 될 주요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회계 및 계리제도 상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2013년부터 회계연도가 3월 마감에서 12월 마감으로 변경됨에 따라 FY2013 회계연도는 2013년 4월~2013년 12월까지 9개월 간으로

단축된다.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여 준비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 평가 시 적용하는 공시이율을 상품 판매 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이율과 일관되도록 결정하는 표준이율제도가 변경되며,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준비금 적립 시 보험회사가 자체 추정한 시나리오로 산출한 보증수수료율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적립률 중 높은 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표준책임준비금 계산 시 사용하는 표준위험률 조정이 추진되며,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제고 및 보험소비자 상품선택폭 확대 등을 목표로 2010년 4월 도입된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가 2013년 본격 도입된다.

개별 보험 상품에 대한 제도 변경도 예정되어 있다.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보험료 갱신 기간 단축, 보험기간 현실화,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 마련, 의료비 청구서식 표준화, 자기 부담금 선택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이 마련되고, 2002년 전면 개정 이후 10년 만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전면 개정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내용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사유 재고, 면책조항에 대한 피보험자 개별적용 확대, 약관 설명의무 강화, 보험금 지연지급에 대한 불이익 부과, 보상과정에서 불성실 행위에 대한

2013년부터 회계연도가 3월 마감에서 12월 마감으로 변경되며, 표준이율제도와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제도가 변경된다. 표준위험률 조정,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가 본격 도입되며,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이 시행되고 10년 만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전면 개정된다.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도 축소되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변액보험 제도 개선도 예정되어 있다.

제재 등이다.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지급 안내 강화 및 지급 시스템 개선, 보험금 지급계좌등록 등 자동차보험금 지급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 이는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퇴직연금신탁과 고유계정 간 거래한도가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한편,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비인정 한도는 2013년 15%, 2014년 10%, 2015년 5%, 2016년 0%로 매년 5%p씩 축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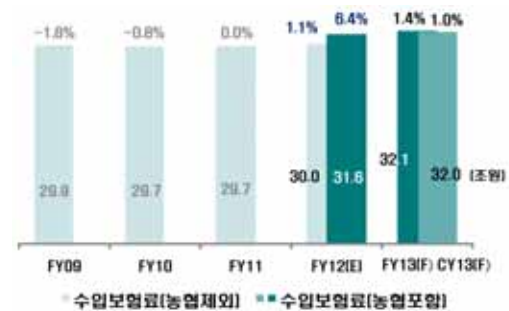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상품개발, 판매단계부터 보험사기 가능성 최소화 노력, 민관 및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활성화, 보험사기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경제적 불이익 부과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개선되며,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공시, 핵심상품설명서 제시, 펀드 운용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한 수수료 부담 경감 유도, 사업비 부과방식 다양화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액보험 제도 개선도 예정되어 있다.

보험산업 전 망

생명보험

FY2013 보장성보험은 안정적인 계속보험료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축성보험의 고성장으로 저축성보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생명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노력으로 초회보험료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FY2013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종신보험의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FY201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1.4%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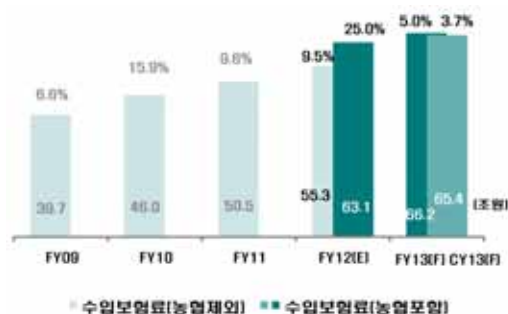


주: FY2013(F)는 2013년 4월 ~ 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보장성보험은 1.4%, 저축성보험은 5.0%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FY2013 생명보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3.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 단체보험은 퇴직연금에 계속보험료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5.3%의 수입보험료 증가가 전망된다.

FY2013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의 성장세 둔화와 변액저축성보험의 저성장으로 5.0%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FY2013에도 저금리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일반저축성보험의 금리 경쟁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세제혜택이 있는 저축성보험의 반사이익도 예상된다.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FY2013(F)는 2013년 4월 ~ 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그러나 일반저축성보험의 고성장을 견인한 생명표 개정, 세제개편 등의 효과가 작아지면서 일반저축성보험의 성장세는 크게 둔화될 것이며, 변액저축성보험은 유럽재정위기 지속,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

대로 저성장이 전망되나 기저효과 등으로 FY2012에 비해 성장세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FY2013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성장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의 증가세가 기저효과로 인해 크게 둔화되면서 3.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FY2013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 계약의 퇴직연금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계속보험료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5.3%의 증가가 전망된다. FY2013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 등의 긍정적 요인과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시장악화 및 임금상승률 둔화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6.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FY2013(F)는 2013년 4월 ~ 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FY201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이 금융시장 회복 지연과 제도적 요인 소진 등으로 저성장하고 단체보험 또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3.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IRP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둔화에 따라 고용증가세와 임금상승률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반단체보험은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에 FY2013에도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보면 FY201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이 금융시장 회복 지연과 제도적 요인 소진 등으로 저성장하고 단체보험 또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3.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개인보험은 보장성보험이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저축성보험의 성장세는 FY2012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보장성보험은 유지율 개선에 따른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과 함께 종신보험과 암보험 등 신상품 출시에 따른 수요확대도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종신보험의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제도적인 요인의 소진으로 큰 폭의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며 변액저축성보험 또한 금융시장 회복 지연으로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 단체보험은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계속보험료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체보험 수입

보험료 증가율도 이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FY2013(F)는 2013년 4월 ~ 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손해보험

FY201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유입에 따른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나 저축성보험 신규판매 증가세 둔화로 증가율은 12.1%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수입 확대 전략이 지속될 것이나 손해보험회사의 금리 부담과 공시이율 관련 제도 강화 움직임 등 신규판매 제약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FY2011 보다 11.4%p 낮은 22.7% 증가가 예상된다.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시행¹⁾

1) 단독상품 출시, 갱신주기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2013년 1월 1일부터

FY201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유입에 따른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나 저축성보험 신규판매 증가세 둔화로 증가율은 12.1%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연금부분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의 양호한 증가세에 힘입어 FY2012와 비슷한 16.1% 증가가 전망된다.

에 따른 신규수요 확대 효과보다 보험료의 축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율이 7.7%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재물보험은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고성장세에 대한 기저효과로 8.6%로 둔화될 것이다.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FY2013(F)는 2013년 4월 ~ 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FY2013 연금부분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의 양호한 증가세에 힘입어 FY2012와 비슷한 16.1% 증가가 전망된다. 개인연금의 경우 인구구조 고령화로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마케팅 측면에서 세제 혜택의 장점이 부각됨에 따라 23.6%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장기주택마

시행될 예정임.

련저축의 소득공제혜택 만료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있고, 2013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3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20%에서 15%로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축소²⁾, IRP 시장 확대 등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대부분 완료³⁾되어 증가율은 6.7%에 그칠 전망이다.

연금부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1	FY2012(E)	FY2013(F)	CY2013(F)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개인연금	38.8	43,537	27.0	53,815
퇴직보험	-84.2	-	-	-
퇴직연금	34.6	34,910	9.8	37,265
합계	24.8	78,448	17.3	91,080

주: FY2013(F)는 2013년 4월 ~ 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FY2013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뚜렷한 보

- 2)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이 매년 5%씩 축소되어 2016년에는 완전히 폐지됨. (2011년: 25%, 2012년: 20%).
- 3) 2011년 12월 말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4.6%로 추정됨(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FY2013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경기부진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뚜렷한 보험료 인상 요인도 존재하지 않아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증 및 특종보험 중심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증가율은 FY2012보다 소폭 하락한 7.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험료 인상 요인도 존재하지 않아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큰 폭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손해율 안정화로 보험료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동차보험 손해율⁴⁾은 정률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 이후 발생손해액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나 보험료 인하 및 할인형 상품⁵⁾ 판매 증가로 경과보험료도 줄어들어 FY201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FY2013(F)는 2013년 4월 ~ 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단, 수입차 확대에 의한 고액 담보물건 증가와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 효과 등

4)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5) 주행거리 연동특약,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블랙박스 할인 특약 등이 있음.

이 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FY2013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증 및 특종보험 중심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증가율은 FY2012보다 소폭 하락한 7.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 확대 효과로 소폭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다른 보험종목으로의 물건이탈 추세가 지속되면서 1.3% 증가에 그칠 것이다. 해상보험은 물동량 소폭 증가에 따른 적화보험 저성장과 선박수주 규모 축소 등에 의한 선박보험 부진이 전망된다. 보증보험은 통신요금 관련 신용 보증보험의 양호한 성장세와 건물 및 토목 건설 관련 이행 보증보험 시장의 소폭 회복으로 6.0% 증가가 예상된다.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FY2013(F)는 2013년 4월 ~ 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FY20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중심의 장기손해보험 및 연금부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며 10.3% 증가가 전망된다. 보험산업 전체를 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장률이 모두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종보험은 상해보험, 책임보험, 기타 특종보험의 양호한 성장세로 9.6% 증가가 전망된다. 특히, 특종보험 가운데 종업원 복지확대를 위한 기업의 단체상해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배상책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책임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타 특종보험은 휴대폰 관련 보험 등의 성장에 힘입어 20.9% 증가가 예상되나 증가율은 전년에 비하여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FY20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중심의 장기손해보험 및 연금부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며 10.3% 증가가 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중심의 저축성보험, 재물보험 등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나 증가율은 전년에 비하여 둔화된 12.1%가 될 것이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주: FY2013(F)는 2013년 4월 ~ 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개인연금에 세제혜택이 마케팅 측면에서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23.6% 증가가 전망되고,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전환 수요의 소진 이후 신규가입 확대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6.7% 증가할 것이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 자동차 내수 시장의 위축 등으로 2.8% 증가가 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통신 및 휴대폰 관련 시장 성장에 따른 보증 및 특종보험의 양호한 성장세로 7.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 종합

FY2013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장률이 모두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침투도 추이 및 전망



FY2013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총보험료/명목GDP)는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

FY2013 생명보험 산업의 경영과제로 첫째, 기회요인으로서의 인구고령화 활용, 둘째, 위험전가의 효율화 및 다양화, 셋째, 저금리에 대한 대응으로, 저금리 환경 하의 시나리오 경영과 자산운용전략 수립,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제시한다.

율이 명목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3.2%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명보험 침투도는 FY2012와 동일한 7.7%, 손해보험 침투도는 0.3%p 상승한 5.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FY2013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총보험료/총인구수)는 367만 6,000원으로 FY2012보다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명보험 밀도는 FY2012에 비해 3.4% 증가한 212만 9,000원, 손해보험 밀도는 9.8% 증가한 154만 7,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밀도 전망

(단위: 천 원)

구분	FY2010	FY2011	FY2012(E) 농협제외	FY2012(E) 농협포함	FY2013(F)
생명보험	1,698	1,765	1,871	2,059	2,129
손해보험	1,069	1,225	1,363	1,408	1,547
전체	2,767	2,989	3,234	3,468	3,676

주: FY2013(F)는 2013년 4월 ~ 2014년 3월 실적이고 CY2013(F)는 2013년 1월 ~ 2013년 12월까지이며, 증가율은 모두 FY2012대비 증가율임.

주요 경영과제 FY2013 생명보험 산업의 경영과제로는 첫째, 기회요인으로서의 인구고령화 활용, 둘째, 위험전가의 효율화 및 다양화, 셋째, 저금리에 대한 대응으로, 저금리 환경 하의 시나리오 경영과 자산운용전략 수립,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제시한다.

첫째, 퇴직연금 시장과 건강보험 시장을 인구 고령화의 기회요인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한계를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높고 인구 고령화로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됨에 따라 퇴직연금 모집인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본체 중심의 영업에서 보험설계사 및 투자권유대행인 등을 통한 개인영업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변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향후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를 예측하면서 보험설계사를 퇴직연금 전문모집인으로 적극 육성·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2년 8월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13년부터 실비보장만을 위한 단독상품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독상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으면서 의료비 보장을 원하는 고객에 특화될 수 있도록 기존 통합상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업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중대질병 유병률과 사망률의 지속적 하락은 정액형 건강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이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 중대질병들에 대한 통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한계를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높고 인구 고령화로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유 및 출재 전략 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보유이익을 증대해야 한다. 또한 보유 및 출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위험분석능력을 제고하고 보유 및 출재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및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합보장, 소득보장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분리·조합한 상품개발로 소비자의 차별화된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위험전가의 효율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최근 거대재해가 빈발하면서 재보험 수요 대비 재보험사의 담보력 부족으로 인수기준이 엄격해지고 요율이 높아지는 등 재보험시장이 경성화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 재정위기, 저금리 기조 등으로 투자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재보험사는 보험영업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인수기준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유인을 가지게 되었다.

정교한 위험분석에 기반한 위험전가보다는 위험회피 목적으로 과도하게 출재하는 보험회사는 상기 재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유 및 출재 전략 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보유이익을 증대해야 한다. 또한 보유 및 출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위험분석능력을 제고하고 보유 및 출재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및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 위험전가 방식으로는 대형화 및 다양화된 리스크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위험증권화, 보험파생상품 등 대체위험수단(Alternative Risk Transfer)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금리 환경 하의 시나리오 경영과 저금리 환경에 대응한 자산운용전략 수립이 필요

하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보험회사의 이자마진은 줄어들고 수익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금리 수준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급격한 금리 변화가 보험회사 수익성과 자본 안전성을 훼손할 것임은 확실하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관리 가능한 단순한 상품 위주로 상품구성을 변화할 필요가 있고,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은 유용한 상품 개발 여건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보유계약의 준비금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저금리 환경이 세계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보험회사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하였는데, 향후 다양한 금리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금리하락에 따른 부채 가치의 상승을 만회하기 위해 위험자산의 비중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 세계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산업도 경영전략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에 따른 규제수준이 기존 보험업법의 영업행위규제 수준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판매채널이 다변화되고 영업행위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회사들은 법규준수 위험(**compliance risk**)에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공시제도에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현행 공시체계상 비표준화 되고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공시정책과 보험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테마진단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에 대한 소고

황진태(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2년 봄호

이상기후가 직접적인 물적·인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냉난방산업, 빙과산업, 의류산업, 레저산업 등의 경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날씨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기상현상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날씨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날씨보험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날씨보험시장이 이처럼 미미한 이유는 수요측면에서 보면 피보험이익이 있는 보험수요자의 날씨리스크 헤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 날씨변화에 따른 기업의 매출 및 이익 변동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 또한, 지수형 날씨보험의 경우 일상적인 날씨변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상품이므로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비해 사건발생 빈도가 높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액에 해당되어 각 경제주체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공급측면의 이유를 보면, 보험회사의 다양한 날씨 관련 지수개발 미비로 인해 소비

자 니즈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공급하는 데 부진하고,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날씨 관련 손해분석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수형 날씨보험은 특정기간 동안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날씨지수를 이용하여 날씨변화에 따른 재무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며, 손해사정이 필요 없어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없는 등 실손보험의 형태인 전통적 날씨보험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최근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지수형 날씨보험은 농작물 관련 보험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대 보급되고 있는 중이다. 그 중 캐나다는 가뭄에 대비한 사료용 작물을, 멕시코는 가뭄 및 초과 강우량에 대비한 농작물을 대상으로 지수형 날씨보험을 보급하고 있다. 이들 해외사례를 통해 볼 때 지속가능한 지수형 날씨보험시장을 위해서는 날씨지수 산출 전문기관의 확보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적합한 상품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전통적 날씨보험의 대안으로서 날씨리스크 부보를 위해 중요성을 가진다. 그리고 지수형 날씨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활동, 날씨지수 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상품 표준화와 고객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절충할 수 있는 상품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동향과 시사점

사회적 책임 이행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실증연구들이 있었는데, 분석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기존 연구들과 비교할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보험산업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

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행 방안 중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해당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망보장보험의 성장전략

이경희(연구위원)·김세중(선임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2년 여름호

사망보장보험의 성장성을 대리할 수 있는 종신보험의 초회보험료 규모는 FY2001 8,421억 원에서 FY2002 1조 92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FY2003에는 8,974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FY2010 초회보험료 규모는 최고 성장세를 보였던 FY2002 대비 41.0%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2011년 2월 보험연구원의 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망보장보험의 가구당 가입률은 49.5% 수준으로 추정되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미국(44%)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FY2010 기준 사망보장보험 건당 가입금액은 4천 8백만 원에 불과하여 보장수준의 충실도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사망보장보험의 저성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 경기침체에 따른 가입여력 축소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사망보장보험의 주력 가입 계층이라 볼 수 있는 25~50세 계층의 인구는 감소국면으로 진입하였으며, 40~50대 연령계층의 사망률 감소, 1~2인 가족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도 사망보장보험에 대한 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할 여력도 낮아지고 있으며, 사망보장보험에 대한 니즈는 존재하지만 가입여력이 낮아 실제 구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계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사망보장보험 시장은 가입률 지표로만 보면 성장여력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보장의 충실도(건당 가입금액)를 감안하면 성장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입여력을 개선시켜 고객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사망보장상품의 성숙단계를 연장시킬 수 있고, 신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망보장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생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순자산 기준으로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세부 시장에 적합한 상품과 채널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가격에 민감한 중저소득층을 위한 정기보험 활성화, 건강상태에 따른 위험 세분화, 여성고객에 특화된 상품 개발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로는 장기유지 보너스, 자녀의 정기보험 특약, 가입금액 증액 권리 부여, 적립금의 연금전환 특약, 자선단체 기부 특약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고객기반 확대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확대할 수 있는 사망보장보험의 보험료 규모는 연령계층별로 5%(50~59세)~20%(25~29세) 정도가 신규 가입하고 가입금액을 5천만 원으로 설정한 정기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4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에도 사망보장보험의 주 수요층이 되는 인구 집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므로 보험

회사는 확대 가능한 잠재시장의 인구 구조와 소비자 선호의 변화 등을 이해하고, 변화에 부합하는 사업모형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변화와 시사점

변혜원(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2년 여름호

인구고령화, 기대수명 연장 등 인구구조적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판매채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미국의 판매채널 변화와 변화의 동인이 되었던 요인들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판매채널 전략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의 가족 생계 보장에 대한 니즈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자 성격을 가지는 보험상품이 등장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제시할 수 있는 독립채널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미국경제는 1991년부터 2001년 초까지 경기확장기를 보였으며, 1990년대에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준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연금상품이 활성화되었으며, 주식시장 활황으로 보험시장에서는 변액연금에 주력상품으로 판매되었다. 한편,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보험회사들은 1980

년대에 판매했던 금리확정형 상품으로부터 발생된 금리역마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리연동형 유니버설(UL)보험, 실적배당형 변액종신보험 등의 상품 비중을 확대시켰다. 또한 상품의 복잡화, 전속채널 유지비용 상승, 불완전판매 관련 책임 완화 노력 등으로 인해 독립채널의 판매비중이 전속채널의 판매 비중을 앞지르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 의해 금융다각화가 가속화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노년기 대비를 위한 상품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면서, 변액연금상품, 특히 보장옵션을 가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고소득 소비자들은 세금을 포함한 재무설계 서비스를 원하는데 독립채널이 이러한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어떠한 상품을 어떤 목표시장에 판매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판매채널 전략을 달리하고 있으며, 전속채널을 주로 사용하는 회사, 전속채널과 독립채널을 적절히 활용하는 회사, 전적으로 독립채널만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존재한다.

경제환경 및 목표시장 측면에서 판단할 때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2000년대 상황과 흡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기존 판매채널이 상품 판매에 중심을 두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상품과 함께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매채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계사 채널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변화하

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전속채널의 전문성 제고, 자회사 형태로서의 판매전문회사 활용, 외부 독립채널의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의미와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2년 가을호

경제최근 국제 3대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S&P, 그리고 피치는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각각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였다. 지난 8월 27일 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상향조정 이후 S&P 및 피치도 싱글 “A+”에서 더블 “AA-”로 각각 상향조정하였다. 금번 등급 상향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 속에서 상향된 것은 이례적이다. 신용평가등급체계는 신용평가사별로 상이한 등급기호를 갖고 있으나 크게 투자적격 등급과 투기등급으로 분류된다. 투자 적격 등급은 BBB-(무디스 사는 Baa3) 이상을 갖는 등급을, 투기등급은 BB+(Ba1) 이하에 해당되는 등급을 각각 의미한다.

국가신용등급이란 신용평가회사가 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채신용등급은 정부가 발행한 채무증서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직면한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또한 국가신용등급은 자국통화 또는 외화통화표시로 정부발행 채권의 신용상태를 국별로 비교하여 점수화한

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 결정 시 정부의 채무상환능력보다는 채무상환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은 정부의 신용평가 개선이지 국가등급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정부를 비롯해 민간회사(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해외자금조달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신용등급 격상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신용등급도 상향조정됨을 의미하므로 해외 채권 발행 시 조달금리가 하락하여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된다. 또한 국가신용등급이 높아지면 CDS프리미엄이 낮아져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자금 조달비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의 유지와 추가적인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거시안정정책, 구조개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방만한 예산집행과 공기업 및 가계부채 급증으로 정부 우발채무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정책과 연준의 QE3 : 의미와 시사점

윤성훈(선임연구위원)·전성주(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2년 가을호

30

유럽 중앙은행(ECB)과 미 연준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각 국채매입프로그램과 1, 2차 양적완화정책(Quantity Easing, QE)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2012년 9월에도 국채의 무제한 매입과 3차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하는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본고는 유럽 중앙은행과 미 연준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의미를 유럽 및 미국의 경제상황, 중앙은행제도 및 대차대조표 위험과 연결하여 살펴보고 향후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경기회복이 더디며 유럽과 미국 고용시장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경우 정부부채 수준이 위험수준을 넘어서 재정지출보다는 통화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책금리가 이미 1%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고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유럽 중앙은행과 미 연준이 채택한 중앙은행제도를 고려할 때 대차대조표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9월 들어 유럽 중앙은행은 재정위기국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결정하였고, 미 연준도 양적완화정책이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속될 수 있음을 밝히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시각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재정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유럽 중앙은행과 미 연준이 채택한 통화제도(중앙은행제도)를 고려할 때 이번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중앙은행과 미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안정(Tail Risk 축소)에는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유로존과 미국의 경기회복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물가상승률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둘째,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더라도 확대된 대차대조표 위험으로 유럽 중앙은행과 미 연준은 적극적인 통화정책(금리 인상)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따라 저금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셋째, 유럽 중앙은행과 미 연준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주요국의 유동성공급을 확대시켜 환율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가시화될 경우 금융산업과 보험산업은 특히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실질금리가 0% 또는 마이너스 수준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자산운용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 보험산업의 저금리 경험과 시사점

김해식(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2년 겨울호

1986년 이후 전개된 1차 저금리와 1991년 이후 전개된 제2차 저금리에 대한 일본 보험산업의 임기응변적이고 뒤늦은 대응은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39%가 파산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실제로 생명보험시장에서는 1차 저금리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18개 보험회사 중 7개사가 이차역마진으로 파산하였고, 손해보험시장에서도 1개사가 장기손해보험의 이차역마진으로 파산했다.

이러한 보험회사 파산의 이면에는 1985년 플라자합의로 나타난 저환율-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의 대응이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대응에 그친 반면, 저금리의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치명적으로 드러났다는 데 있다.

실패한 일본 보험회사들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저환율-저금리 환경에서도 낙관적 시장 전망을 유지하면서 높은 예정이율의 보험상품 판매를 지속하는 한편, 자산시장에서도 자산 가격의 상승 추세에 기댄 투자 패턴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시장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과 특정 상품에 집중한 성장전략을 취하고, 보험영업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위험투자 중심으로 저금리에 대응하여 외부 경제 환경에 취약한 사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생존한 일본 보험회사들은 상품구성, 판매채널,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강화 등 전

부문에 걸쳐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저금리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1, 2차 저금리를 거치면서 생존한 보험회사들은 공통적으로 투자(자산운용)는 물론 부채(상품)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수행하여 투자수익률 제고와 조달금리 하향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 보험회사들은 신계약의 금리연동형 상품 판매를 늘리고 보장성 비중을 높이는 등 상품 구성을 바꾸어 준비금의 평균적립이율을 낮추고 영업이익에서 보험영업의 비중을 높였다. 한편, 자산구성에서도 부채의 만기구조에 대응하여 장기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여 부채중심으로 자산을 재구성함으로써 파산한 보험회사들보다 낮은 투자수익률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익률을 유지하였다. 또한 생존 보험회사들은 내재가치 등 장기수익성 보고를 통해 경영진이 단기성과 및 외형성장보다 위험관리와 수익경영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 구조를 구축하였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보험산업이 저금리에 대한 상당한 대응력을 지니고 있으나, IMF는 글로벌 경기침체나 더블딥 시나리오에서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자본의 30~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비관적 시나리오에 대비한 위험관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저금리의 악영향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극복할 수 있으며, 일본의 사례는 뒤늦은 대응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를 잘 보여준다.

OECD 국가의 퇴직연금감독체계 특징과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2년 겨울호

32

최근과 같은 저성장·저금리 현상으로 인한 연금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연금운용관련 리스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연금감독체계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주요 국가의 리스크중심 연금감독 변화와 특징 등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연금과 다른 감독기구를 통합한 통합형 연금감독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특화형 연금감독체계를 띄고 있는데, 연기금 규모, 정부예산 지원, 위원회 설치 등에 따라 연금감독체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nz & Mataoanu 등의 조사에 의하면 연금감독유형에 상관없이 대체로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되고 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이르는 경우 허가 및 인가 등과 같은 적격성 관련 감독보다 리스크중심 감독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리스크중심 감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OECD 주요 국가들은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차원에서 리스크중심 연금감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마다 리스크감독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리스크관리 내부규준을 제정하고 리스크 중심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거나 리스크 점수(Risk Scoring)

제도 등으로 연금운용 리스크를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연금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는 원칙(규정)중심 연금감독에서 탈피하여 국제연금감독기구의 리스크 중심 감독원칙에 기초하여 점진적으로 리스크 중심 연금감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설정과 리스크관리계획 등을 수탁자의 책임으로 규정함과 더불어 신호등 체계, 리스크점수제도 등을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상시 평가·감독하는 리스크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Chapter

2

보험산업 성장 비전 구축과 경쟁력 강화

-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임산물재해보험 확대·도입방안 연구
- 자연재해보험 진흥을 위한 기본연구용역
- 보험과세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 주요국의 법률비용보험(LI) 현황 및 시사점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진 익(연구위원)·오병국(연구위원)·이성은(인턴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현재 우리 보험산업은 내외부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성장을 뒷받침해 온 성장동력이 소진됨에 따라 향후 지속성장을 달성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전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에 기여할 것을 요청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우리 보험산업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변화로써, 금융소비자들의 행동주의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만족·보호”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또한 정치권은 국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였으나, 그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공적 안전망 중심의 현 사회안전망 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험산업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여 전체적인 사회안전망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유럽,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회안전망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주체를 다원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제도화 되어가고 있다. 공·사보험의 장점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연계를 설계함으로써, 복지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체제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의 분야에서 공·사 안전망 연계가 시작되었고, 그러한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 금융산업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사실 현행과 같은 공적 안전망 위주 체제는 적지 않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 안전망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확대와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임계수준(80~100%)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용대상, 보장범위, 보장수준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생산적인 사회안전망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보험산업이 사적안전망 역할 확대를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성장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OECD 국가들에 비해 GDP 대비 비율 기준으로 약 4.8~9.7%p 낮은

사회보험의 장점인 공공성과 민영보험 장점인 감시기능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 체제를 개선하여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성장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보험산업이 국민들과 정책당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를 위한 선결과제이다.

수준이다. 만약 보험산업이 사적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면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GDP)가 약 11.6%에서 약 15~20%까지 상승하고, 보험산업 규모는 현 수준 대비 약 1.5~2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사실 보험산업은 사적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결과의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금융산업이다. 다양한 보장상품·서비스를 통해 공적 안전망을 보충적·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저축·투자의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장점인 공공성과 민영보험 장점인 감시기능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의 부담비용 대비 보장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독점 형태의 사회안전망 가입·전달체계를 관리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고위험·저소득 취약계층이 보험산업의 사적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공성 요건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즉, “사회적 민영보험(social-private insurance)”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공적안전망 확대가 여의치 않은 분야에서 사회적 민영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는 정책당국이 기존의 수요 창출 정책, 즉 세제혜택, 홍보·교육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 장기저축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사회적 민영보험과 같은 제도·인프라 개선을 기초로 안전망 상품·서비스 생산원가를 낮추는 공급 측면의 정책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적은 비용 부담으로 보다 많은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보험산업이 국민들과 정책당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 민영보험과 같은 사적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사적안전망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만족과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는 사업모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금융 역량 축적, 보험회사 의사결정구조 개선, 보험회사들 간 이해상충 조율을 위한 자율규제기구 도입 등이 요청된다.

결론 보험산업에 있어 사적안전망 역할 확대는 우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지속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과 보험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사회안전망 체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기승도(수석연구원)·조용운(연구위원)·이소양(연구원) | 보고서

연구배경

최근 국내 자동차대수 성장률 추이는 연간 약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률 추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 대형 손해보험회사(삼성, 현대, LIG, 동부)는 1995년부터 일찍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들 회사 중 최근 현대해상과 삼성화재가 베이징과 상해에서 각각 자동차보험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손해보험회사뿐 아니라 외국회사들도 중국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중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시장 전체, 중국자동차보험 시장에 대한 문헌연구와 중국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자계 회사가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중국시장을 마케팅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시장 전체 분석과 및 중국 소비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

국시장 전체분석은 자동차보험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인구수, 대당인구수 분석, 각종 제도분석)과 경쟁수단분석(상품 및 요율 수준, 채널구조 등)을 실시하였다.

우선 중국 시장 전체분석에서 인구측면을 보면, 인구규모가 크고 경제성장률이 매년 8% 수준에 이르는 등 중국시장 잠재력은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은 금융산업의 한 분야로 중국 정책당국의 규제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중국정책당국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중국당국은 자국 인민(소비자)을 중요시 하고 있고, 중자계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99%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자계 보험회사들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 보험시장이 발달하지 않던 상황에서 중자계 보험회사의 선진화를 위해 만들었던 각종 진입장벽들은 중자계의 경쟁력이 확인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광대한 지역과 인구가 많은 국가이므로 국가를 체계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중앙(북경)에서 제도의 전체 체계(틀)를 만들거나 수정하지만 세부적인 행정권한은 지역별로 이양된 모습이다. 그러므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자계 보험회사는 중국의 어느 지역으로 진출할지를 파악한 후 해당지역의 경제여

중국의 자동차보험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은 상위 4개사의 지배력이 큰 시장이면서 회사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다. 직판 채널과 대리점 채널이 주요 판매채널이나 향후 주력 판매채널은 직판채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인가기준, 중국소비자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자동차보험 성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자동차대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동차를 구매할 인구수도 2012년 현재 약 13억 4천만 명이며, 2010년 기준으로 총인구수를 자동차대수로 나눈 대당 인구수는 22.6명으로 계산되었는데, 2010년 기준 중국의 대당인구수를 여러 선진국과 비교하면 현저하기 많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현재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은 상위 4개사의 지배력이 큰 시장이면서 회사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다. 상위 4개사(PICC, Ping An, China Pacific, China United)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2009년 기준으로 71.7% 수준에 이르고, 다수의 시장참여자들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상품 측면에서 중국시장을 보면, 현재 중국시장에서는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SALI)과 상업자동차보험 A, B, C라는 구조로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상품과 요율을 사용하는 보험회사들 간 보험료 및 상품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에서 자동차보험 채널의 경우를 보면, 중국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직판채널과 대리점

채널이 주요 판매채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판채널은 대도시 및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 계층에게 적합하다. 대리점 채널은 주로 지방 도시에 적합한 채널이고, 대리점 채널 중에서 4S는 신규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채널이다. 향후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주력 판매채널은 직판채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실적을 보면,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예정손해율을 58%로 가정할 때 실적손해율이 60% 이하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 중국자동차보험 시장은 수익성이 있는 시장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개괄적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대상지역은 성장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중국 3개 지역, 베이징, 광주, 상하이로 선정하였다. 분석모형은 CART모형이다. 그 결과 다음의 4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중국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 상품(또는 회사)을 선택하는데 “회사의 지명도”, “회사의 신뢰도”, “회사의 안전도”, “회사의 이미지”가 상품 및 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 자동차보험 소비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

외자계 보험회사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이미지 제고전략이 중요하다. 신규시장에 4S조직으로 진출한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직판상품으로 대응하는 진출 후 유지전략과 가격자유화를 이용한 상품 및 가격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 측면에서 종합손해보험회사를 지향하여야 한다.

협료 수준을 자동차보험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광주를 제외하고 상해 및 북경의 소비자는 보험료가 높은 상품(예를 들면,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상품)을 구매할 경우 충성도가 낮은 것이다. 네 번째 시사점은 소득수준이 상해, 북경 및 광주의 전체모형을 볼 때 소득수준이 높은 시장에 속한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그렇지 못한 소비자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중국시장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분석과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미지 제고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보험회사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신규시장 진출 후 유지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은 신규시장이 매년 20%내지 30%의 고성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 신규시장에 4S조직으로 진출한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직판상품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가격자유화를 이용한 상품 및 가격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2년 2월 23일 발효된 자동차상업보험 조례 및 요율관리강화 관련 통지에 따라 가격 및 상품자유화가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는 시장점

유율이 낮은 외자계 보험회사의 시장진입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로 이 장벽을 극복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장기적 측면에서 종합손해보험회사를 지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만 전업으로 할 경우 사회적 영향으로 손해율이 높는데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업사는 경영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 종합손해보험회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본 보고서가 중국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보험회사 또는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손해보험회사들에게 중국자동차보험 시장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조재린(연구위원)·황진태(연구위원)·채원영(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날씨리스크는 날씨변화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을 통칭하며, 광범위한 산업이 날씨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해 각 경제주체들은 해당 리스크를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상품인 날씨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풍수해 보험 등 일부 정책성 보험만 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날씨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지수형 날씨보험이 확대 보급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지수형 날씨보험을 통한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능력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최근 들어 이상기후 현상이 늘어나면서 날씨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기후조건에 민감한 농업은 물론, 건설, 교통, 물류, 가전, 의류,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파, 폭설, 폭염, 황사 등 이상기후에 따른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과 2006년에 각각 전통적 날씨보험과 지수형 날씨보험이 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

유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수요 측면에서는 날씨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인 및 기업을 포함하는 경제주체들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정부 역시 대재해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출 뿐 경제주체들이 직면한 날씨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전통적 날씨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날씨변화에 따른 손해액 추정이 쉽지 않고 손해 정도에 대해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분쟁의 소지도 있다는 점이 활성화를 가로막는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수형 날씨보험은 지수개발이 아직 미비하고 상품개발에 필요한 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점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날씨보험 중 지수형 날씨보험의 경우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날씨리스크 관련 부보능력 확대가 가능한 상품으로 보인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와 실제 관측결과 간 차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없고 손해사정이 불필요하며 적정 수준의 요율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적절한 지수만 구성할 수 있다면 상품설계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으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상청이 기상 관측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기

여러 형태의 날씨보험 중 지수형 날씨보험이 우리나라에서 날씨리스크 관련 부보능력 확대가 가능한 상품으로 보인다. 지수형 날씨보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적정 요율 산정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경험데이터 축적과 신뢰성과 다양성을 모두 갖춘 날씨지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잠재적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을 홍보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상품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초 인프라는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지수형 날씨보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적정 요율 산정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경험데이터 축적과 신뢰성과 다양성을 모두 갖춘 날씨지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잠재적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을 홍보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상품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부는 지수형 날씨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규제를 정비하고,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가 날씨파생상품을 업무의 일환으로 취급함으로써 날씨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리스크 측정 및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이미 축적하고 있는 만큼 날씨파생상품시장의 육성을 위해 보험산업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결론 지수형 날씨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는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날씨지수 개발, 잠재적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및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상품개발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법령 및 규제의 정비와 판매된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날씨파생상품을 취급함으로써 날씨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산물재해보험의 확대·도입 방안 연구

이기형(선임연구위원)·송윤아(연구위원)·이승준(연구위원)·황진태(연구위원)·김경환(수석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연구용역

연구배경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상 고온, 한파,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졌으며, 그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의 증감 폭이 커져 농가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농가소득안전망 장치로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는 과거 재해로 인한 생산량 증감에 따른 피해보상 정책을 시장중심, 생산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로 바꾸어 나가며, 개별 임가 단위에서 재해로 인한 위험에 대한 총체적 관리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임산물재해보험은 대상 품목이 소수로 한정되어 있고 가입률도 낮아 실질적인 임가 소득안전망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며 임목에 대한 재해보험도 미시행 되고 있기 때문에 임가의 종합적 재해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의 제도적, 기술적 재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 상에 임산물재해보험이 명시되어 있지만 임산물 중 일부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판매상품은 운영주체인 산림조합이 시스템이 구비된 이후에 이관을 검토하고 제한적인 시범적 보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의 효용성과 보험실시가능성을 각 작물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제도의 도입은 2015년부터 하되 임목에 대해 우선 실시하며, 2017년에는 기존 보험상품을 이관하여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임산물재해보험의 운영체계는 농산물재해보험과 유사하게 될 것이며, 산림조합이 재해보험 사업자로서 상품개발, 추진, 손해평가 전반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산림작물의 기대소득을 주된 담보로 하며, 재해로 인한 비용손해도 기본담보로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임목의 경우 벌채비용이나 잔존물 제거비용도 추가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위험담보방식은 산림재해보험의 경우 기본담보위험은 화재로 국한하는 열거위험담보방식이 바람직하며, 작물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포괄위험담보방식을 채택하되, 손해율의 안정성이 낮거나 신규로 도입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열거위험담보방식을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포괄위험담보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지급방식은 임산물재해보험이 재물보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실손보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언

현재 운영 중인 임산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이 소수로 한정되어 있고 가입률도 낮아 실질적인 임가 소득안전망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며 임목에 대한 재해보험도 미시행 되고 있기 때문에 임가의 종합적 재해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의 제도적, 기술적 재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라이팅과 손해사정을 위해 임목표준금액표를 작성하여 보험가액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험요율의 경우 임산물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일반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위험요소별 등급요율을 기본요율로 적용하고, 개별 위험상태에 따라 할인·할증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자는 위험분산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책임준비금을 매기 적립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재보험의 담보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률적인 180% 초과손해를 재보험방식을 도입하기 보다는 임산물별 위험을 분석하여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재해보험제도 정착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풍수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단계별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업정책자금 수혜자에 대하여 임산물재해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은행권 대출자에게 임산물재해 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정착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해복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자발적인 위험관리관행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임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결과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확대를 위한 핵심자료로 보험제도화 및 확대시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확대 시 임업경영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 재해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존함에 따라 임가의 소득안전망을 개선하고 산림경영의 안정과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또한 산림보험제도 도입 시 탄소거래시장 확대에 기여해 이상기후로 인한 글로벌 문제 해결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재해보험 진흥을 위한 기본연구용역

이기형(선임연구위원)·송윤아(연구위원)·김소연(연구위원)·장동식(수석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 | 연구용역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복구비 지원과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험제도는 농작물재해보험(2001년), 풍수해보험(2006년), 양식재해보험(2008년)이 있지만 크게 확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중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이나 운영방식도 상이하다. 또한 보험목적물에 따라 소관부서가 다르고 보험제도 간의 업무영역 중복 등으로 일관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하는데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자연재해보험제도가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자연재해 리스크관리의 핵심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역할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보험제도가 국가 재난관리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역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보험제도의 기본방향, 단기적 개선방안,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자연재해보험제도가 재해복구정책의 기본인프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은 완전한 민관협력보험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행 풍수해보험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미국과 같이 자연재해위험도가 높은 가구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처럼 위험도에 상관없이 전체 가구의 보험가입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프랑스와 같이 재물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연재해를 의무적으로 부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추가하여 국영보험방식에서 필요했던 손실보전준비금제도를 국가재보험제도로 전환하여 보험시장원리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제도는 단계적으로 줄여 경제주체 스스로 자연재해리스크관리 인식을 제고해야 하며, 일반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폭을 확대함으로써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되, 소득이나 재산상황에 연계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의 부보 목적물이 주택과 온실에 한정되어 있어 재해복구 기능수행에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상물을 선진국과 같이 공공시설물, 소상공인건물과 동산 등의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자연재해보험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집적이나 위험분석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수행할

자연재해보험제도가 재해복구정책의 기본인프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대상물을 공공시설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연재해보험제도에 대해 정부의 역할은 국가재보험의 제공으로만 한정하고 경제주체 스스로 재해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자연재해보험제도에 대해 정부의 역할은 국가재보험의 제공으로만 한정하고 경제주체 스스로 재해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험료 지원은 극빈층 등에만 허용하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의 자연재해보험제도의 공통적인 업무를 종합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 우리나라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사유 재산 보험보상율은 9.4%로 유럽 국가의 31%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가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풍수해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제도가 향후 자연재해 리스크관리의 수단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모델(operation scheme)을 구축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법규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풍수해보험제도의 운영모델은 중장기적으로 프랑스와 같은 완전한 민관협력보험모델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과세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오병국(연구원) | 기초연구

45

연구배경

국내 금융산업은 인구증가, 경제성장, 자본자유화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 이러한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조세정책을 들 수 있다. 특히, 보험에 대한 주요 조세정책수단은 소득공제, 비과세, 저율분리과세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인구구조변화, 복지확대 수요 증가, 금융권역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보험과세제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종목을 크게 보장성보험, 장기저축성보험, 연금저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적용세제에 대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평가함으로써 보험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험과세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장성보험에 관한 주요 쟁점으로는 현행 보험료 납부액 중 100만 원 한도 공제 규정에 따라 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충분한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료 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하여 각 보험종류별로 공제한도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와 같

은 세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제수준을 현실화하고, 개인의 위험보장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보험가입목적에 따른 위험보장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저축성보험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은 중도인출에 대한 과세와 보험차익 비과세기준기간의 설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는 조세정책 흐름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설 및 확대와 연계되어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현재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의 형태와 상관없이 저축성보험 소비자가 10년 이내에 중도인출을 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 증권 등 타금융권역과의 수평적 과세형평성 확보, 장기계약유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중·저소득층의 생활비 마련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을 줄이게 될 경우 정부 세수증대, 10년 이상 장기저축률 증가에는 긍정적이지만 10년 이상 유지 중·저소득층의 생활비 마련 기회 확보에는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관한 주요 쟁점으로는 연금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금 소득 분리과세 한도 확대, 장기연금수령 유인

우리나라의 보험세제는 사적보장의 역할, 경제환경의 변화, 사회형평성 등을 고려해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향후에도 인구구조변화, 복지확대 수요 증가, 유사상품 취급으로 인한 금융권역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 장기저축성보험, 연금저축 등에 걸쳐 각각에 적용되는 세제가 시대 부응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을 위한 세제방안 설계, 장기연금수령 유인을 위한 연금수령 요건의 개선방안 검토 등이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공청회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세제당국은 2012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금저축세제를 대폭 변경하였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기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연금수령에 대해서 단기연금수령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연금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최소연금수령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러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원으로서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저축의 역할이 이전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금저축세제 개혁과 관련하여 개인의 보다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도모하기 위해 연금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연금저축가입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금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조정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겠다. 또한, 공사적 연금연계방안으로서 연금저축 등이 국민연금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세제개선안이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시 사 점

우리나라의 보험과세제도는 사적보장의 역할, 경제환경의 변

화, 사회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유무 및 한도 설정, 보험차익 비과세 유무 및 기간설정, 연금세제 도입 및 개혁 등이 논의되거나 실행되어 왔다. 향후에도 복지수요의 증가, 금융통합화, 인구고령화, 경제민주화 등으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과세체계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세제당국, 조세정책연구 등에 주요하게 참조되어 보험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국의 법률비용보험(LEI) 현황 및 시사점

박정희(선임연구원) | 기초연구

47

연구배경 법률비용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보험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법률비용을 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동 보험은 일반인들이 쉽게 제공받을 수 없는 법률서비스를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공동체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반인들의 사회적 건강함을 보호해 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법률비용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은 정확한 상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법률비용보험의 보험료가 비쌀 것이라는 선입견과 변호사가 보험사건은 열심히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변호사 수는 적고 사건은 많아 변호사와의 상담이 어려운 점 등도 법률비용보험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게 하는 한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에 비해 변호사 수의 부족, 수입료의 비정량화,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문제점 등의 이유로 인한 법률시장 인프라 측면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인, 자영업자, 기업, 자동차 운전자 등의 주요 고객층을 중심으로 대중성이 있는 보험상품이 될 수 있는지 수요잠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법률비용보험은 유사개념 상품으로 1990년대 검토한 바 있으나, 자동차보험에의 악영향, 시장개혁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후 2001년에 접어들어 동양, 삼성, 현대, LIG 등의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영미약관을 모델로 하여 보험상품의 특약형태로 운영, 미국이나 독일에서와 같이 법률서비스만을 담보하는 형태의 보험제도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2008년 설립된 DAS법률비용보험(주)은 아시아 최초로 법률비용보험 전문회사로서 한국에서 출시된 최초의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국내보험회사로는 LIG가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자동차보험특약, 운전자보험특약, 각종 배상책임보험특약에서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비용보험 시장은 양적인 면에서 관련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요인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우리나라 소송사건의 중요한 부분은 교통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 및 제조물사고 분야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법률비용보험의 활성화 여부는 이들 사고에 대한 소송당사자 간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어떻게 하면 동 보험의 주된 계약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둘째, 법률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위험관리 의

우리나라는 변호사 수의 부족, 변호사 수입료의 비정량화,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문제점, 판검사의 전관예우 관행 등의 이유로 인하여 법률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 맞는 현지화전략, 수익지향, 특화시장 개척, 성장시장에의 진출에 초점을 둔다면 법률비용보험이 일반손해보험시장의 새로운 개척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식이 강화되어야 하며, 법률비용보험의 객관적 활성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바, 동 보험의 활성화 여부는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보험수요자 측의 인식 정도에 달려 있다. 보험수요자 측의 인식은 산업사회가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한편 보험자의 보험수요자 측에 대한 홍보태도에 따라 변화기도 하는데, 전자의 방법에 의한 보험수요자 측의 인식 변화는 속성상 많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셋째, 동보험이 활성화되려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약관체계나 담보위험 또는 기타 제반조건에 있어서 보험수요자의 필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하는 한편, 보험마케팅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만, 법률비용보험 가입에 따른 소송증가 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법원 업무부담 증가 및 소송만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독일, 미국 등과 같이 피보험자에게 법적분쟁 발생소지가 있거나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적분쟁 발생 또는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 사 점 국내에서 독립된 전문 법률비용 보험 상품은 1개 존재하지만, 주로 자동차보험특약, 운전자보험특약, 각종 배

상책임보험특약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특약의 경우 보장한도가 낮고 보장범위가 좁아서 현실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변호사 수의 부족, 변호사 수입료의 비정량화,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문제점, 판검사의 전관예우 관행 등의 이유로 인하여 법률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 시장에 맞는 현지화전략, 수익지향, 특화시장 개척, 성장시장에의 진출에 초점을 둔다면 법률비용보험이 일반손해보험시장의 새로운 개척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비용보험은 변호사와 로펌이 풍부한 경험과 협상력이 있는 선진 보험회사와 상대하게 되어 수입비리, 높은 변호사 수입료 등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본인소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률비용보험의 활성화는 소송비용의 납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부담금 설정, 보험회사와 사전에 승소가능성의 검토 등이 필요하며, DAS 법률비용보험회사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진출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Chapter

3

고령화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고령화대비 공·사 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
-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김대환(연구위원)·황진태(연구위원)·이창우(연구위원)·이상우(수석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50

연구배경 건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기업, 국가 차원에서 살펴보면 먼저 동일한 소득을 버는 사람일지라도 건강한 사람은 저축률 및 소비가 높아 투자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다(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2011).

한편, 2012년은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도 있는 정치 격변기이다. 이 때문인지 무상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무상복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았던 우리나라 의료 및 건강보험체계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비 지출, 건강보험 지출 그리고 정부의 복지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반복적인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인하되고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변화와 달리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체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사건강보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동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좀 더 낮은 비용으로 활용하

는 한편,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인해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과 정부의 공조방안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파급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해 판단할 때 장기적으로 공사건강보험 중 하나의 건강보험에 의료비 보장기능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공조체계를 통해 국민의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접근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공사건강보험 역할체계를 정리해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근로 연령층은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노인층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이 현재보다는 좀 더 역할을 하고, 일부 의료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편, 인구고령화로 전 국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보장률 강화가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증가시키는 선별적 보장강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이 현재보다 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일부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사건강보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 에 집중하고, 나머지 계층은 민영건강보험을 활용하여 스스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수 의료라고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보장성 구조를 상이하게 설계하기보다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공사건강보험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료비의 경감을 위해 국민들 또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의료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의 관리가 중요하다. 급증하는 의료비 및 보험료를 관리하고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공적건강보험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대부분 보장해주거나 의료비의 일부를 공적건강보험이 보장하고 나머지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전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체계를 지향하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보험금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기보다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사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만이 아닌 공사건강보험을 통해 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가능한 낮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제도적인 허용 여부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여 손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나 상품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의미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건강상태가 개선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

결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이 더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장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스스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낮은 비용으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 풀을 확대하고 상품의 비교용이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공조와 노력이 필요하며,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어떻게 정립하든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유인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라고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대현(연구위원)·이상우(수석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7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퇴직연금의 적립금규모가 급증하고 가입률이 증가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은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의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고 퇴직연금 이해관계자를 감시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참여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정에서 거의 배제되어 근로자의 제도선택폭이 제약되고 있으며 제도운영에 대한 수탁자책임이 미흡하고 운용에 대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시기능 미흡으로 유용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이해관계자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 지배구조상에 나타나고 있는 제반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OECD 수준에 부합한 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지배구조체계를 유지하되 최대한 가입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또는

계약형 퇴직연금지배구조를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현재 은행에 대한 예외적인 자행예금 운용 허용조치의 영향으로 퇴직연금시장이 공정경쟁이 아닌 불공정경쟁으로 변모하고 있어 퇴직연금시장의 경쟁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차원에서 신탁계약 기존취지에 부합하도록 자행예금의 허용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번들(Bundle)형 서비스체계중심에서 언번들(Unbundle)형 서비스체제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서비스의 차별화 및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운용 및 자산관리 각각의 전문사업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각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자간 자율적인 상호견제 및 감시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퇴직연금 관련법에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적격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한 사업자만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기준,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퇴직연금시장은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근로자의 선택폭이 제약되고 있다. 또한 제도 운영에 대한 수탁자책임이 미흡하고 운용에 대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이해관계자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지배구조상에 나타나고 있는 제반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선진국수준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 있는 기준 등이 설정되어 이 기준에 부합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제고 차원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미국 등 선진국처럼 별도의 연금계리사 제도가 도입되어 연금계리사로 하여금 연금재정의 적정성이 검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영미식 연금계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사업자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는지의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ERISA법처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연금계리사의 기능과 의무 등을 명문화하여 감시자로서 연금계리사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연금계리사 및 공인회계사 선임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거나 또는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의무적으로 자산관리기관 등 사업자가 연금계리사 및 공인회계사 등을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연금재정 및 연금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감시하고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가입자 또는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감시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진 후 가입자의 제도선택권 증대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지배구조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일본식, 미국식, 영국식 순으로 지배구조의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일본식 지배구조형태는 계약형, 기금형 중에서 하나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복수형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어 영미의 지배구조 형태보다 가입자의 제도선택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퇴직연금 운용시스템을 지니고 있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혼란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퇴직연금 지배구조 체계 개선은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여 사적연금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이상우(수석연구원)·오병국(연구원) | 보고서

54

연구배경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370만 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약 54조 원이 적립되는 등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장에서 11%의 사업장이 가입하고 영세사업장 가입률이 6%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보편적인 퇴직연금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연금제도가 잘 발전된 일본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가운데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적 노력을 지속적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이 정착되어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연금제도의 백화점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양한 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경제·사회·인구·고용관계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최근에는 종전의 고도 경제성장기형의 연금모델에서 저성장 경제구조에 적합한 21세기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보다 앞서 선진형 제도로 전환한 일본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체계와 특징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일본의 퇴직연금 모델에 대한 국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일본은 1962년에 세계 적격퇴직연금제도와 1966년에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한 후생연금기금제도를 각각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축소, 거품경제 붕괴로 인한 연금 수익률 악화와 급격한 적립부족 현상 초래, 퇴직급여회계제도 도입으로 퇴직급여채무 급증과 기업 부담 증가, 능력과 성과주의 중심으로 고용·급여관계 전환, 다양한 고용형태 등장 등 고용환경 급변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시행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개혁을 2001년에 추진하였다. 즉, 신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기업연금과 확정각출연금, 개인형 확정각출연금법)의 시행, 미적립분 회계 및 연금자산의 시가 평가 등의 퇴직급여회계제도 도입, 기존의 후생연금기금을 존치하는 가운데 기금의 공적연금 기능 폐지 및 정부 환원(2002년) 결정, 적격퇴직연금 종료(2012. 3) 결정, 퇴직급여 충당금 손비인정 폐지, 신 제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통산장치 강화, 후생연금기금연합회의 명칭 개정 및 통산센터 역할 수행 허용 등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개혁정책에 따라 기존 퇴직연금시장은 쇠퇴기에 접어들어 2010년 말 기준으로 33.4%의 비중으로 축소된

일본은 1960년대에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 이후 2001년 퇴직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현재 신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가입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 퇴직연금제도의 특징은 DB형과 DC형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입자 다양한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금형과 규약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사연금 역할을 부담차원에서 공적연금의 일부 기능을 퇴직연금에서 대행하고 지급보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제도가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일시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일시금 지급청구 숙려기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특징이 존재하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신 퇴직연금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확정각출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부담금을 상향조정(2010년)하고, 확정각출연금에 종업원의 매칭 기여를 허용(2012년부터)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의 퇴직연금 제도는 적격퇴직연금제도가 종료된 가운데 후생연금기금과 확정급부기업연금, 확정각출연금, 개인형 확정각출연금 등 신·구(新·舊)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여 시행되고 있다. 신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확정급부기업연금(DB형 제도)은 종전의 후생연금기금(DB형)제도 원리를 계승하되 문제점을 개선한 제도로 확정급부기업연금법의 독립적인 법률에 근거한다. 동 연금은 사용자가 기금형과 규약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200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확정각출연금(DC형 제도)은 우리나라의 확정기여형제도와 유사하며, 개인형 확정각출연금제도도 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과 유사하지만 확정각출연금법의 독립적인 법률에 근거한다.

결론 일본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조사결과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는 일본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DB형과 DC제도를 각각 개별법 형태의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둘째, 일본은 기업의 공적연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일부분을 기업에 위탁 운영하는 영국식 적용제외제도를 채택한바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분리(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와 소득비례 기능 확대 정책 추진시 기업의 부담 증가에 대비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일본의 DB형 제도에서는 퇴직연금의 공공성 부여와 가입자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 공익법인 형태의 연금기금기구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기금형 제도를 시행중이다.

넷째, 일본은 자산운용의 사후적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법정 수탁자(기업, 금융회사 등)의 책임이 강화되고 후속조치로 자율기능을 대폭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신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시금 지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연금지급 5년 후 일시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일시금 청구 숙려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화 대비 공·사 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방안

김대환(연구위원)·황진태(연구위원)·이창우(연구위원)·이상우(수석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위원) | 연구용역

연구배경

2012년은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도 있는 정치 격변기이다. 이 때 문인지 무상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무상복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크고, 복지 지출 중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가장 큰 상황이다. 그동안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았던 우리나라 의료 및 건강보험체계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비 지출, 건강보험 지출 그리고 정부의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반복적인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인하되고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변화와 달리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체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제안들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정치(精緻)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政治)적으로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사건강보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동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좀 더 낮은 비용으로 활용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인해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과 정부의 공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파급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해 판단할 때 장기적으로 공사건강보험 중 하나의 건강보험에 의료비 보장기능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공조체계를 통해 국민의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접근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공사건강보험 역할체계를 정리해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근로 연령층은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노인층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이 현재보다는 좀 더 역할을 하고 일부 의료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편, 인구고령화로 전 국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보장률 강화가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증가시키는 선별적 보장강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층에 대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공사건강보험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기보다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사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보장성 구조를 상이하게 설계하기보다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공사건강보험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료비의 경감을 위해 국민들 또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의료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의 관리가 중요하다. 급증하는 의료비 및 보험료를 관리하고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공적건강보험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대부분 보장해주거나 의료비의 일부를 공적건강보험이 보장하고 나머지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전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체계를 지향하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보험금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기보다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사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만이 아닌 공사건강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건강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가능한 낮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제도적인 허용 여부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여 손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나 상품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의미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건강상태가 개선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

결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이 더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장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스스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어떻게 정립하든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유인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라고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동경(선임연구위원) | 연구용역

58

연구배경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2043년 GDP의 50% 수준에 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도 사적연금으로 정착시 국민연금과 유사한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거대화되면서 연금 운용방향에 따라 국가경제 전반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향후 연금의 급격한 소진시 금융시장의 충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사연금의 역할과 기능, 연금지배구조 및 규제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연금자산 운용방향에 대해서도 금융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연금규제 및 감독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에 의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원화되고 분산된 규제 및 감독체계로 인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수준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 거대화에 따른 자본운용의 왜곡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공사연금이 유기적 소득보장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이루어지기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사적연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연금감독의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및 각계대표로 구성된 공사연금 정책협의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공사연금 정책협의체를 두고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공사연금의 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방향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공적연금기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운용의 전문성, 수익성, 독립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원칙을 전문성, 수익성, 독립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역할이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안건을 사전심의하고 기금운용성과 평가를 비롯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를 비상설기구에서 공식적인 상설기구로 변경하고 안정적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적연금의 실제 운용은 공단의 기금운용본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운용의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에 의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요구됨에도 다원화되고 분산된 규제 및 감독체계로 인해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수준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 거대화에 따른 자산운용의 왜곡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공사연금의 유기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이루어지기 위해 연금규제 및 감독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적연금 운용회사를 설립하여 정부와 거리를 두고 운용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운용회사의 이사회가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별도의 공적연금 운용회사를 도입하여 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규정중심 감독체계에서 탈피하여 사전적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맞춘 리스크중심 감독을 적극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기금형 지배구조로의 전환 등이 적극 고려되어 연금 또는 수탁기관의 리스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일천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독립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 감독비용의 효율화측면을 감안하여 일원형·통합형 중심 감독체계를 지향하되, 리스크중심의 감독은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법정퇴직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중간정산자금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여 퇴직연금가입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둘째,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간정산의 요건을 엄격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사적연금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정부의 고령화리스크는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사연금의 규제 및 감독체계 개편은 연금자산의 거대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Chapter

4

소비자 보호 및 규제의 선진화

-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보험지주회사의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방식 개선방안
- 독일의 보험유통시장 현황 및 규제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이기형(선임연구위원)·임준환(선임연구위원)·김해식(연구위원)·이경희(연구위원)·조영현(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변액연금보험은 노후의 불안정한 소득에 직면할 생존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적립 기간 동안의 사망위험과 최소한의 투자위험도 보장하며 10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므로 소비자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결과, 변액연금보험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변액연금보험을 둘러싼 최근의 수익률 논란은 소비자 인식 악화와 시장 위축을 초래했다. 실제로 변액연금보험은 실효수익률이 인플레이션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성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아 금융상품 중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상품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최근에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시제도와 상품설계 측면에서 소비자가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 공시 방안과 사업비 후취 및 다양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설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지난 5월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과 여기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근거들을 보강하고 다듬은 것이다.

주요내용 먼저 소비자 상품공시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소비자에 대한 변액연금보험 상품공시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전문상담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비교공시가 상담기능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직접공시와 더불어 비교공시에 대한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고서는 상품(보장)정보와 펀드정보의 통합과 펀드수익률 이외에 상품수익률도 제시하는 3가지 비교공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개선안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과 기대되는 보장 정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비교공시의 현행 형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상품수익률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공시할 것인지에 따라 3개안이 서로 구분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험회사 등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부담할 비용이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험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액보험이 설계될

최근에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시제도와 상품설계 측면에서 소비자가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 공시 방안과 사업비 후취 및 다양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설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비부과방식과 보증기능의 다양화와 그에 걸맞은 시장 선택과 채널 운용을 제안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사업비를 선취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상품만 시장에 공급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다. 후취방식은 타 금융권의 유사상품에서 활용하는 방식인데 비해 선취방식은 사업비 체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아 투명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사례도 변액연금보험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비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 부과방식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납입방법, 유지기간, 투자수익률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선취냐 후취냐의 절대적 선택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월납 계약의 누적 사업비 현가는 초기에는 선취상품이 높지만 기간 경과에 따라 점차 하이브리드상품 영역과 교차되고 있으며, 일시납 계약도 초기에는 선취상품이 후취상품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지만 적립금 증대에 따라 점차 후취상품의 사업비 부담이 더 커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다양한 리스크 회피도와 주관적인 할인율을 고려하여 현행 선취상품과 더불어 후취상품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후취방식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리 및 회계제도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보증 측면에서도 변액연금보험상품의 경쟁력이 제고되려면 투자와 관련한 하방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장수리스크 관리 기능도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층 및 2층 연금제도가 불충분하여 개인 차원의 장수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매우 높고, 월지급식 펀드와 같은 타금융권의 경쟁상품이 등장한 상황에서 종신중도인출최저보증옵션(GLWB: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이 제공된다면, 계약자는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실적배당형 운용을 통해 초과수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변액연금보험은 금융전문가로 양성된 전문채널에 적합하므로 종합적인 금융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여 상품 특성에 적합한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동 시장에 집중하는 상품-고객-채널 매칭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보험지주회사의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승준(연구위원)·김해식(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배경

2008년 세계경제를 휩쓴 금융위기는 대형화, 겸업화 된 글로벌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에 있어 감독자간 공조 및 정보교환 등 그룹단위 감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그룹의 감독체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글로벌 보험그룹도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금융의 복합화가 금융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세계 금융산업의 변화 추세에 따라 금융복합화의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권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감독체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그룹감독에 대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의 개선방향을 건전성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룹단위감독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향후 우리나라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그룹감독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이제까

지 단일보험회사에 국한되었던 규제 및 감독에서 출발하여 보험지주회사 자회사에 대한 단일회사 감독에서 발생하는 규제의 사각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그룹단위감독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공동포럼(Joint Forum)의 금융그룹감독원칙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그룹단위감독체계를 소개하고 현재 논의 중인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ComFrame)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어 유럽 솔벤시 II의 그룹단위 건전성 규제의 내용과 최근에 시행된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5)의 시사점을 평가하고, 미국의 건전성규제개선작업인 SMI(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와 일본의 그룹감독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어 우리나라 보험그룹 감독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감독이 보험그룹 또는 보험지주회사 감독에 적용될 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보험그룹에 대한 그룹단위 감독의 맥락에서 모색해 보았다.

결론

국내 보험지주회사의 감독체계 개선은 금융위기 이후 제고된 그룹단위감독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보험그룹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룹단위감독체계를 도입하여 보험그룹을 경제

금융위기 이후 제고된 그룹감독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그룹단위감독체계를 보험그룹 감독에 도입하여야 한다. 유럽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룹단위 감독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보험 지주 회사 등 보험그룹에 대한 분산효과를 고려한 그룹단위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적 실체로서 감독하고, 분산효과를 고려한 그룹단위 자기자본규제의 개선 및 그룹단위 자본의 계층화 등 그룹특성을 반영한 건전성 규제를 통해 규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상시 감독으로서 ORSA를 도입하여 보험그룹의 자율적인 전사적리스크관리(ERM) 체계를 보험 그룹감독과 연계시켜야 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방식 개선방안

임준환(선임연구위원)·김용환(선임연구위원)·전용식(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 연구용역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시장중심에서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금융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어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하에서 금융소비자와 정책당국자를 중심으로 서민금융 자금조달수단으로서 보험계약대출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보험계약에 내재된 옵션으로 보험계약대출 행사가능성의 가치는 특히 불황기에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확정금리형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계약자 관련 신용위험의 부재, 유사대출계약의 존재, 자금조달 원가 등을 감안해 볼 때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용역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를 제고하는 관점에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출방식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보험회사의 자금조달비용(은행예금 또는 MMF금리)과 부대비용을 고려해볼 때 가산금리는 과다한 수준이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산스프레드는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높은 대

출금리가 부과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는 회사별, 보험계약대출금리 유형별, 재원조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회사별로 볼 때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생명보험회사 대출금리보다 낮다. 금리유형별 특징으로 금리연동형 가산금리가 확정금리형 가산금리보다 낮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대출재원을 해약적립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회사는 MMF 등 유동성자금 보유에 의해 조달한다. 보험계약대출재원을 유동성자금으로 조달하는 보험회사가 다른 자금조달원(준비금)을 통한 회사에 비해 낮은 가산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이 확정금리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1) 유지관리비용, 2) 금리리스크 프리미엄, 3) 유동성 프리미엄, 4) 정책 마진(policy margin) 등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명확한 논리적 근거 없이 회사마다 상이한 산출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부분 보험회사는 보험업무 특성상 항상 현금유입상태를 유지하고 동 자금으로 보험계약대출의 재원을 조달하므로 별도 금리위험 또는 유동성위험프리미엄 부과는 불필요하다는 사실이다(금리리스크와 유동성 프리미엄은 불필요). 마지막으로 시장금리가 장기간

현재 확정금리형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계약자 관련 신용위험의 부재, 유사대출계약의 존재, 자금조달 원가 등을 감안해 볼 때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지위를 제고하는 관점에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출방식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하락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스프레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 따라서 잉여현금에 의한 보험계약대출 재원 마련, 보험계약자 관련 신용위험 부재, 낮은 자금조달 원가 등을 감안해 볼 때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판단된다. 특히, 확정금리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수준은 현 수준보다 최대 50%까지 인하될 여지가 있다. 현재 확정금리형 가산금리가운데 두 항목(유동성 보유 및 금리위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 제안에는 보험회사의 순현금유입 존재 또는 단기 외부차입가능 두 조건이 가능한지의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부 중소형 또는 신설 보험회사는 잉여현금상태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단기 외부차입수단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단기 외부 차입수단으로서 단기어음 발행이 허용되어야만 한다.

독일의 보험유통시장 현황 및 규제

채원영(연구원) | 기초연구

68

연구배경

독일에서는 보험상품이 전속채널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보험 판매채널이 다양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보험판매채널 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독일 보험 판매채널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보험 판매채널과 주로 비교, 연구되고 있는 시장은 미국과 영국 시장인데 이들 시장은 전속채널이 급격히 쇠퇴하고 독립채널(재무설계)과 방카슈랑스 중심으로 재편되어 우리나라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보험 판매채널과 재무설계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보험판매채널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독일 보험시장의 2011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2,450억 달러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시장이며 EU 국가 중에서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러나 독일의 보험 밀도는 2,967 달러로 미국 3,846 달러, 일본 5,169 달러보다 낮으며 보험침투도는 6.8%로 미국 8.1%, 일본 11.0%보다 낮다. 독일 생명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2011년 기준 867억 유로이며 전체 보험시장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손해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2011년 기준 566억 유로이며 전체 보험시장의 31.8%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손해보험의 손해액은 2011년 약 437억 유로이며 손해율은 79.4%로 나타났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 59조는 보험중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험중개조직의 기본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보험중개자는 “보험대리인”과 “보험중개사”로 나뉜다. 또한 별도로 보험상담사를 정의하고 있다.

독일의 생명보험은 과거 전속대리점을 중심으로 판매되었으나 최근 방카슈랑스, 보험중개사와 독립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 중 개인보험은 전속대리점(Tied-Agent)을 중심으로, 기업보험은 보험중개사(Broker)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대리점(Agencies)은 전속계약을 맺은 회사의 개수에 따라 전속대리점과 다자간 대리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자간 대리점은 여러 회사의 상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보험중개사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험중개사(Broker)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보험계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험요율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서 계약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전문직업인으로 정의된다. 생명보험 시장에서도 보험중개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IFA는 완전한 금융자문을 제공하는 중개업자

독일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 개인보험은 주로 전속 설계사, 손해보험 중 기업보험은 보험중개사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 전속설계사 중심의 보험판매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며 두 시장 모두 연금 및 복합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판매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다. 두 시장 모두 IFA, 독립법인대리점 등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분리 추세에 대응하는 판매채널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의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들로 자산관리사로도 알려져 있다. 생명보험 시장 내에서 IFA의 시장점유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나 성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연금 상품 등 복합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둘째, 독일의 대형 보험회사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전속 설계사 조직의 비용 증가와 마진 축소로 이들 조직을 축소하고 대형 IFA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직판채널은 보험회사가 보험중개조직을 거치지 않고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생명보험 시장에서 직판채널을 통한 판매는 2006년 기준 약 6.5%, 손해보험 중 개인보험은 2008년 기준 10%로 나타났다.

은행을 통한 생명보험상품의 판매 비중은 2009년 APE 기준 20.6%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독일은 일대일 대면방식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중개사와 전속 채널이 방카슈랑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 이는 첫째, 우리나라의 보험중개사 제도 도입이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둘째, 우리나라의 보험계약자들이 위험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장받길 원하기 보다는 보험료가 싼 상품을 찾는 특징이 있어 비대면 채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생명보험은 주로 전속대리인, 보험중개사와 독립대리점을 통해 판매되지만, 우리나라 생명보험은 주로 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또한 독일 생명보험 판매시장에서 IF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생명보험 시장에서도 독립법인대리점(GA)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분리 추세에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와 독일 모두 연금 및 복합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독립법인대리점 또는 IFA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분리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사 점 우리나라는 보험중개사를 통한 손해보험판매 비중이 0.7% 수준인 반면, 독일의 경우 개인보험은 10%, 기업보험은 80% 이상이 보험중개사를 통해 판매되고

Chapter

5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보험 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이창우(연구위원)·윤상호(연구위원) | 보고서

72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의학 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에 의해 자살률이 크게 늘어났음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특히,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살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다. 생명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면책기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살을 유인하는 효과가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자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실제로 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보험가입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실제로 자살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 가입 후 면책기간 후 자살의 최고점(peak)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Cutler-Gleaser-Norberg(CGN) 지표(Cutler, Gleaser and Norberg 2010)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GN지표를 지역 대신 경과보

유기간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임의로 선택된 생명보험가입자가 자살할 확률은 경과보유기간에 관계없이 p 가 될 것이다. 만약 특정한 경과보유기간에 자살의 집중도가 존재한다면, 그 경과보유기간의 자살률과 평균적 p 와의 차이는 과다변동성으로 표출될 것이다. 따라서 CGN지표의 적용으로 경과보유년도별 자살의 상대적 집중도를 측정할 수 있다.

CGN지표를 지역대신 생명보험 경과보유기간에 적용하여 각 경과보유기간의 자살률의 상대적 집중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살기간의존지수(Suicide-period dependency index)를 사용하였다. 결과는 자살기간의존지수(SPDI)의 계산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3년차에서 유독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즉, 다른 기간과 비교하여 3년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적어도 다른 기간에 비해 3년차에 상대적으로 심한 자살의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결과가 강건성(Robustness)을 가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생명보험가입자의 특성을 통제하여 자살기간의존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결과는 모두 3년차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보험가입자들은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반응한다는 결

실증분석결과 보험가입자들은 보험회사가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자살을 감행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령, 소득, 성 등 자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였을 때도 동일하였다.

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보험가입자들은 보험회사가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자살을 감행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연령, 소득, 성 등 자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였을 때도 동일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보험가입자들이 면책기간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면책기간의 조정 혹은 폐지가 자살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실증분석에 근거한다면 면책기간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에는 자살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채원영(연구원) | 보고서

74

연구배경

2001년 8월 자동차보험 완전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수지는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보험회사들의 신규 진입과 이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가 원인일 수 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이하 온라인사)들의 진입 이후 자동차보험 영업수지는 FY2010년 87억 원 적자에서 FY2010년 1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격자유화와 온라인사 진입으로 인한 보험료 경쟁심화가 자동차보험영업이익 적자에 대해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요율조정과 보험료 경쟁 측면에서 보험영업수지의 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자유화 전후의 자동차보험 요율조정에 대한 과거 손해율의 영향을, 그리고 요율조정과 경쟁이 요율조정 이후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비교하여 가격자유화와 경쟁심화가 요율조정과 손해율(보험영업수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2000년대 접어들어 본격화된 자동차보험회사들의 보험료 경쟁이 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라고 한다. 자동차보험 요율자유화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FY2001년

이후 자동차보험 전업사들의 진입과 기존 손해보험회사들의 채널 다변화 전략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가 확대되었다. 온라인사들은 사업비 절감을 통한 저가격 유지 전략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온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 억제는 인수주기(underwriting cycle)상에서의 국면전환, 즉 고수익 상황에서 저수익 상황으로 전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업비 경쟁력에서 시작된 보험료 경쟁은 손해율 조정에 따른 요율조정 억제로까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보험영업수지 적자가 심화되었을 수 있다. 요율조정에 대한 위험도 반영 크기가 보험료 경쟁심화로 줄어 들었을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손해액 예측에 부합하는 요율조정과 경쟁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가설이 검증된다면 보험회사의 요율조정과 경쟁전략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의 목적은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국내 자동차보험산업에서 승자의 저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모형에서 요율조정에 대한 과거 손해율의 영향력이 가격자유화를 전후로 변했는지를 분석하고, 두 번째 모형에서 경쟁과 요율조정이 요율조정 이후 손해율(보험영업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2001년 8월 자동차보험 완전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수지는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보험산업은 승자의 저주 현상에 빠져있으며 요율결정에서 리스크요인보다는 경쟁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영업수지 적자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승자의 저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고객충성도 제고 등 비가격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요율산출에 사용되는 자료의 분포가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율조정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요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수주기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첫 번째 모형에서 요율조정과 리스크 요인, 경기요인, 경쟁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자동차보험산업은 승자의 저주 현상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손해율모형 추정결과, 경쟁과 요율조정의 손해율에 대한 영향은 담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책임보험에서는 손해율이 안정화된 것으로, 그리고 대물담보에서는 손해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격자유화 이후에 요율조정이 손해율을 악화시켰다는 점은 요율조정 시기에 다음 기 손해액에 대한 예측오차가 커졌음을 의미하고, 손해액 예측 오차가 커졌다는 분석결과는 다음 기 손해액을 과소추정하거나 경쟁으로 요율인상폭을 억제한다고 볼 수 있다.

자차 담보를 제외한 모든 담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수주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쟁요인 이외에 요율인상 억제와 관련된 규제시차도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분석결과, 가격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 온라인사들의 진입과 요율경쟁 심화로 요율결정에서 리스크 요인보다는 경쟁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영업수지 적자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승자의 저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고객충성도 제고 등 비가격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미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보험회사들은 고객만족도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요율조정방법 개선 측면에서는 1998년 이후 사고발생률, 대당손해액이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요율조정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요율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요율체계 개선으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회사는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시장에서 보험료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장동식(수석연구원)·김경환(수석연구원) | 보고서

76

연구배경

감독당국은 감독목적에 위하여 상시감독 기능, 시장규율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부터 보고받는 경영실태평가 관련 정보, 위기상황 분석 정보, 영업전략·자산운용·내부통제 관련 정보 등의 개선을 통해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감독당국은 공시 정보의 개선을 통해 시장규율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감독당국은 최근 제도개선 과정에서 솔벤시 II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감독당국은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 내부모형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 등에서 솔벤시 II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나타냈었다.

이를 고려할 때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제도에 대한 고찰은 감독당국의 정책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모범사례전략이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찰은 감독당국의 제도 개선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솔벤시 II의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는 보험회사의 투명성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솔벤시 II의 한 개 축

을 이루고 있다. 먼저 보고제도는 감독당국 점검과 관련된 정보를 감독당국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다음으로 공시제도는 시장참여자들이 시장 감시 및 영향력 행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두 제도는 솔벤시 II의 1층(양적 감독) 및 2층(질적 감독)을 보완하는 기능과 더불어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회원국 간 비교, 회사 간 비교 등을 위하여 솔벤시 II의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에 대해 다른 부문과 달리 규칙중심 감독 특징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이를 바탕으로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에 대하여 구조와 항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정보이용자와 정보이용 목적의 차이를 감안하여 동일한 구조·항목 하에서도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및 수준으로 관련 정보를 달리 서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고제도 하에서의 보험회사는 공시하지 않는 정보라도 감독당국 점검 및 재무건전성 감독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즉,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 감독목적에만 부합하는 경영 목적 및 전략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고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감독당국은 원칙 중심 감독 하에서도 비교가능성을 위해 어느 정도 규칙 중심 감독을 보고제도와 공시제도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은 상장회사의 수준으로 보험회사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은 최소한의 시장규율 기능을 위해 공시하지 않은 사실과 공시하지 않은 이유를 공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국제적 정합성 및 모범사례 적용을 위해 최종 제정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과 이유만을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솔벤시 II의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솔벤시 II의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는 새롭게 도입한 ORSA 및 내부모형과 관련된 내용, 변경된 요구자본 산출 내용 등을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모범사례를 참조하여 보고 및 공시 수준을 높였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재무회계기준의 경영진설명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서술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리스크 프로파일 및 자본관리에 대해서 국제회계기준(IFRS 4, IFRS 7 및 IAS 1)보다 더 많은 내용을 서술하여야 한다.

이 같은 솔벤시 II의 보고제도 및 보고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고 및 공시 요건을 다루고 있다. 먼저 솔벤시 II는 우리나라와 달리 적시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일관성, 접근성, 포괄성 등을 보고 및 공시 원칙으로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솔벤시 II는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조 및 요건들을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솔벤시 II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제도(예, ORSA 및 내부모형)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결론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보고제도 및 공시제도 관련 권고안은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감독당국은 원칙 중심 감독 하에서도 비교가능성을 위해 보고제도와 공시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칙 중심으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공시 수준을 상장회사의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은 공시하지 않은 사실과 공시하지 않은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시장규율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최종 제정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모니터하여 국제적 정합성, 모범사례 적용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Chapter

6

금융·보험 이슈 연구

- 보험금융연구
- CEO Report
- KiRi Weekly 이슈
- KiRi Weekly 포커스

보험금융연구

80

즉시연금보험의 특성과 가입자 선택행동 분석

이경희(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1호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즉시연금보험의 특성과 지급옵션에 대한 가입자의 선택행동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비록 미시 데이터가 담고 있는 개인 특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지급옵션의 선택에 대해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실제 개인이 선택한 행동을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전형적인 즉시연금 가입자는 60대 후반 여자이며, 평균 보험료 규모는 1억 8천만 원(중앙값 1억 원), 종신형의 월 평균 연금급여는 1,120천 원(중앙값 594천 원)이다. 전체 가입자 중 종신형을 선택한 비중은 18% 수준에 그치고 상속형 선택 비중이 7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즉시연금의 기능이 장수리스크 관리 측면보다는 세제혜택을 활용한 효율적 자산관리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증 분석 결과, 기대여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리스크 회피 성향과 같은 전통적인 종신연금 선택 가설이 표본 데이터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보험료 규모가 크고, 여자·고연령 계층일수록 확정형에 비해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종신형 선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전환 과정에서 근시안적인 가입자행동이 발견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즉시연금 판매량은 주식시장 성과와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보험회사의 즉시연금 상품개발, 마케팅, 상품믹스 측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확률론적 통합보험리스크 실증분석

조용운(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1호

최근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위원회를 두는 등 시스템 리스크의 관리를 위하여 애쓰고 있다. 파생상품을 통하여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체계적 리스크와는 달리 시스템 리스크는 파생상품화되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 규제와 감독을 통해 위기상황의 발생을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후에는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규제, 사후적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금보험(deposit insurance) 규제, 책임준비금 규제(reserve requirements)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자본적정성 규제에 관한 연구 중의

하나이다. 자본적정성 규제를 위해서는 리스크 양의 추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데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최근에 권장되고 있는 방법론인 확률론적 접근을 하였으며 시스템 리스크와 체계적 리스크를 불확실성 모수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리스크양을 추정함과 동시에 세 가지를 통합 리스크양을 추정하여 비교 평가함으로써 통합 추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와 체계적 리스크 중에서 어느 것이 리스크양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추정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서 사고 건당손해액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시스템 리스크 즉, 보험사고건수의 변화를 줄이는 노력이 리스크양을 감축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리스크 계수의 절대적 크기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확률론적 통합추정을 통해 적정 자본량의 산출을 위해 리스크의 분산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체계적 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를 반영하는 불확실성 모수의 추정방법이 다르면 리스크 계수의 절대적 크기는 달라질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불확실성 모수추정 방법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학계에서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스크양을 확률론적으로 통합 추정하면 분산효과를 통해서 리스크양이 줄어드는 것은 합의된 바이고 분명하다.

감독자는 RBC표준모형의 리스크계수 산출 시 통합 측정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각 보험사가 적용할 경우 이러한 통합 측정방법은

자본적정성 확보,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RBC내부모형’으로 승인해 줄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시장에서 광고가 가격민감도에 미치는 영향

최영목·김동겸(선임연구원) |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3호

생명보험회사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신계약을 확대하고 기존 계약의 해약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다양한 마케팅 활동 중에서 특히 광고비지출은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광고비지출의 증가는 보험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어 수입보험료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히 광고비지출을 확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광고비지출이 수입보험료 및 해약률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민감도를 확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감소시킬 것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시장에서 광고비지출이 수입보험료와 해약률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광고비지출이 소비자의 가격민감도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는 설득적 관점과 소비자의 가격민감도를 확대시킨다고 주장하는 정보적 관점에 대한 검증이다. 첫째, 수입보험료를 종속변수로 하고 보험가격 및 보험가격과 광고비지출의 교호항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는 보험

가격의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나타낸 가운데 교호항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나타내어 설득적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해약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는 보험가격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나타낸 가운데 교호항의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나타내어 설득적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회사가 상품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광고를 통해 가격민감도 확대를 이용한 가격차별화 전략 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자 로열티를 높이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흡연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건강보험에 대한 시사점

김대환(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2호

비만은 개인의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를 증가시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를 수반하기 때문에 비만을 초래하는 원인들을 밝히려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흡연이 비만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흡연변수에 존재하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샘플을 비흡연자로 한정하고 간접흡연 여부를 활용해 흡연이 비만을 감소시킴을 증명하였다. 즉, 비흡연자이지만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비흡연자이면서 간접흡연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비만이 될 가능성이 0.66배로, 흡연이 비만율을 감소시키거나 금연이

비만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흡연이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거나 식욕을 저하시켜 비만율을 낮춘다는 의학적인 논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때문에 금연정책이 흡연율은 낮추겠지만 비만율을 증가시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및 개인 의료보험의 손해를 개선에 미치는 순효과(net effect)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비만율 증가가 흡연 감소의 영향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고 비만율은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연확대 정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보다는 편익이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비만율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본다.

확률모형을 활용한 교통사고 유자녀 수 추정

조재린(연구위원)·김해식(연구위원)·하형태 |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2호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해당 가정의 빈곤과 유자녀의 양육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 중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소득능력 상실로 인하여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거나 범죄 등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녀(이하 유자녀)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교

통사고 유자녀 수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추산에 머물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부정확한 추산이 인구학적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은 데다 단순한 추산방식을 적용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사고 피해자의 성별, 교통사고 사망자 연령패턴의 변화, 출생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한 확률론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정확한 교통사고 유자녀 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그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3만 3,957명의 교통사고 유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선행연구의 추정치보다 작은 규모로서 출생률의 저하와 교통사고 피해자의 연령대가 상승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버지인 유자녀들이 전체 유자녀의 87%에 달하고, 2009년 한 해만 봐도 2,126명으로 추정되는 유자녀들 중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유자녀 수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한 유자녀 수의 4.5배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가구의 남성 가장 소득의존도를 볼 때, 피해 가구가 받는 경제적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보험영업 효율성 분석 :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중심으로

서대교·황진태(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3호

본 연구는 외환위기 발생 이후인 FY1998부터 FY2008까지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확률적 프론티어 방법론을 이용하여 생명보험 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추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액보험과 방카슈랑스제도의 도입이 생명보험 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생명보험산업은 기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효율성 수준은 높아지나 기술진보 수준은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 개선에 대한 공헌도는 기술개선이 더 큼에 따라 전체적인 생산성 개선 정도는 기간의 흐름에 따라 둔화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방카사와 비방카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FY2003 이후 방카사의 기술진보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변액보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로 FY2003 이후 생명보험산업은 외형적인 면에서 발전을 이루었으나, 보험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시장환경의 악화로 전반적인 생산성은 저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방카사보다 비방카사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이향회귀모형을 이용한 보험설계사들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전희주·안철경(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4호

본 연구는 보험설계사의 소속별 회사 및 채널 영역, 인구통계 영역(성별, 연령대), 조직에서 설계사 근무경력,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월 평균 교류회수, 조직몰입, 이직만족도, 직무만족도, 채널경영만족도 등의 요인들이 설계사들의

조직성과변수인 설계사의 보유고객과 설계사의 월 평균 신계약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음이향회귀모형을 통해 확인하고 모형적합을 시도하였다. 보험회사의 조직성과변수로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해 온 보험설계사의 소득 대신 설계사의 보유고객 수와 신계약건수를 사용하고, 동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음이향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설계사 보유고객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채널경영만족도,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월 평균 교류회수, 설계사 근무경력, 이직 후 만족도 순으로 결정되었다. 설계사의 보유고객 수는 이직만족도가 클수록,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월 평균 교류회수가 많을수록, 채널만족도는 낮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설계사 신계약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회사별 채널 영역, 성별, 이직 후 만족도, 조직몰입, 직무만족도, 채널경영만족도, 연령대 순으로 결정되었다. 설계사의 신계약건수는 이직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채널만족도가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회사채널 영역과 성별이 설계사의 신계약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가격효과 : 사업비율을 중심으로

서대교·황진태(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1호

본 연구는 1999년 1/4분기부터 2012년 1/4분기까지 우리나라 14개 자동차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인터넷) 영업이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동차보험상품의 가격 대리변수로 개별회사의 사업비율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온라인 영업을 한 경우가 온라인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업비율이 9.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프라인 손해보험회사(겸업사)가 온라인 영업을 개시한 시점을 전후로 사업비율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영업과 사업비율과는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영업 이후 사업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오프라인 겸업사 대(對) 온라인 전업사, 그리고 온라인 겸업사 대(對) 온라인 전업사와의 사업비율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전업사의 사업비율이 각각 오프라인 겸업사보다 38~40%, 온라인 겸업사보다 32%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격분산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겸업사가 온라인 영업을 했을 때가 이전보다 가격분산이 크며, 온라인 전업사의 가격분산이 온·오프라인 겸업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위험모형을 이용한 성장추세에 있는 실손의료보험리스크 측정

조용운(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1호

최근 여러 나라들은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를 위해 내부모형승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자본적정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양의 측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리스크양의 측정 방법마다 다른 리스크 수준을 산출하고 있어서 어느 수준이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모형오류 리스크(model error risk)가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방법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모형을 이용하여 리스크 승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모형오류 리스크를 줄이고 자본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FY2006년부터 FY2010년까지 대형 4개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상품 판매 및 보험금지급 실적을 전수 조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리스크 승수를 측정하였다. 집단위험 모형(CRM; Collective Risk Model)을 적용하였고 이 모형에 필요한 불확실성모수를 실적의 연도별 변화를 이용하는 고전적인 방법(Meyers and Schenker 1983)과 손해율과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는 국제계리사회(IAA 2004)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고전적인 방법은 불확실성 정도를 관찰된 데이터 내부의 변화로부터 측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리스크요인이 모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추세를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보험종목에 대해 적용할 경우 현실 적합성이 의문스럽다. 대부분 보장내용의 보험사고건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이 추세로 인해 불확실성모수는 크게 추정되게 된다. 더욱이 실질값으로 변환한 위험보험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규모를 보정하게 되면 추세는 심화되고 불확실성모수는 더욱 크게 추정된다. 그들의 모형은 데이터가 확률변수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유도된 방법이기 때문에 추세가 있는 경우에는 적합한 방법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리스크승수를 측정하는 목적이 적정자본량을 알기 위함이라면 명목값과 실질값을 이용한 방법 모두에서 과도한 자본량을 요구하게 된다. 추세가 있는 경우 이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모형오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IAA(2004)의 방법을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리스크 요인은 외부에서 찾아야 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외부요인을 이용하여 리스크승수를 측정하고 있다. 리스크 요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어 체계적 리스크(혹은 경제환경 리스크)를 잘 반영하고자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심도의 불확실성 정도가 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보충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 이러한 사실들은 모형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정책변화는 급격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감독규정에 따르면 리스크의 측정은 6개월 단위 이내 혹은 1년 단위 이내에 반복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매월 리스크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 리스크는 측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IAA(2004)의 방법이 보다 적절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를 위한 내부모형승인 제도는 각 보험회사가 리스크양에 상응하는 자기자본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적정 리스크양을 측정하는 것이 동 제도의 핵심이다. 리스크양의 측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각 리스크양의 측정방법에 따라 그 양이 다르게 측정된다면 어느 방법에 의한 결과가 적절한 양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감독자는 각 방법의 특징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이 어느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험회사는 물론 감독자가 적절한 방법에 대한 지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반화 로짓 대응분석을 이용한 GA사업모델 방향에 관한 연구

전희주·안철경(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24권 제1호

본 연구는 GA들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GA의 사업모델 방향에 미치는 영향들인 GA의 경영전략 방침, 보험대리점의 판매상품 선택 기준, 보험유통에서 개선해야 할 정책(감독) 과제, GA 발전의 저해 요소, GA 시장

의 성장에 위협적인 채널 등과 GA의 사업모델 방향과의 관계를 일반화로짓모형(*generalized logit model*) 적합과 대응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GA 사업 모델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담보대비 가격미, 수수료 지급방식(선지급), GA와의 관계성, 손보 자동차보험의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판매중심형 GA → 재무설계 중심형 GA → 네트워크 중심형 GA 선호로 움직이는 경향이 보이며, 판매수수료 수준, 과거의 상거래 관계, 판매수수료의 분급확대 수준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중심형 GA → 재무설계 중심형 GA → 판매중심형 GA 방향으로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가 높으면 네트워크 중심형 GA → 판매중심형 GA → 재무설계 중심형 GA 방향으로 선호하게 된다. 판매중심형의 GA의 사업모델 방향은 설계사의 신규영업확충, 타사 설계사 유치, 법규준수, 불완전판매 등의 설계사 교육, 직원(설계사) 간의 갈등 관리, 재정관리(설계사 급여) 등 주로 설계사와 관련이 많고, TM, 제휴, 인터넷과 같은 신채널을 위협적인 채널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재무설계형 중심의 GA 사업모델 방향은 재무설계서비스 체제(인적/물적) 구축, 매출(영업) 확대, 설계사의 정착률 관리, 설계사 전문화, 정책 및 감독변화에 대응, 보험회사와 수수료 협상과 관련이 많으며 방카슈랑스를 위협적인 채널로 생각하고 있다. 네트워크형 중심의 GA의 사업모델 방향은 계약유지율 관리, 전산서비스 구축, 지점장 관리, 매니저 육성, 설계사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많으며 보험사 Direct 채널을 가장 위협적인 채널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 Report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조용운(연구위원)·이상우(수석연구위원) | CEO Report

2012년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동 법안은 건강수준결정요인이 건강생활행태(40%), 보건의료시스템 등 사회적 요인(40%), 환경(10%), 보건의료접근성(10%)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문적 생활행태의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생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건강생활서비스는 일부 대형병원의 고급건강검진과 보건소의 각종 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고급 건강검진은 경제적인 이유로, 보건소는 제한적인 서비스로 인하여 일반인이 폭넓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동 서비스의 확대 보급은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비 증가 추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동 법안은 건강생활서비스업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보험산업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보험산업이 건강생활서비스업을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보험가입 등 타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직접 동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고 자회사들 통해서 제공토록 한 뒤 본사와의 정보교류를

차단하면 개인정보는 보호될 수 있다.

그리고 동 서비스업은 보험산업에 적합한 업종이다. 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을 낮추려는 속성으로 인하여 보험산업과 동 제도의 성공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생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보험가입자는 의료이용량을 줄일 것이고 이는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동 서비스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타 기관은 동 서비스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해야하기 때문에 제휴계약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산업보다 제한적일 것이다. 둘째, 보험산업은 타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존 판매조직을 활용하여 시장의 저변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보험산업은 방대한 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여 동 제도의 빠른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동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건강관리 관련 기업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셋째, 최근 급등하는 실손의료보험료의 상승 추세를 완화할 수 있다.

국가정책은 국가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국민 복리 증진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생활서비스업의 활성화 정책은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이다. 보험산업은 경쟁력 있게 그러한 국가정책 목적 달성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생활서비스법(안)은 보험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야한다고 본다.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윤성훈(선임연구위원)외 3명 | CEO Report

88

보험연구원은 2012년 11월 27일(화) 프라자 호텔에서 개원 2주년 기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을 포함하여 학계, 언론계, 보험업계, 보험유관기관, 정책 및 감독당국에서 총 14명이 참석하였고 보험산업 진단 및 미래 비전에 대한 토론과 지난 2년간의 보험연구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이 있었다.

보험산업 진단 및 미래비전과 관련하여 ①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② 소비자보호, ③ 보험산업의 비전과 역할로 주제를 제한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는 보험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참석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계의 경우 부채적정성 평가, IFRS4 Phase II 등의 일련의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저금리 장기화 충격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였다. 업계와 유관기관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이차손을 비차익으로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차익 논란에 대한 시민단체와 언론계의 이해를 기대하였다. 정책·감독당국의 경우 기존 상품의 저금리 위험은 보험업계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판매될 상품의 저금리 위험은 정책·감독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둘째, 소비자보호의 경우 외부에서 바라보는

보험업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소비자보호가 보험산업의 지속성장과 양립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비자보호는 보험사기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심한 보험산업의 특성상 소비자보호 강화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보험산업의 미래비전과 역할에 대해서는 보험산업의 과거 성장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보험산업의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보험산업 성장을 위해 고령화와 관련된 보험산업의 청사진이 필요하고, 보험산업의 “끼리끼리” 문화 혁신과 타금융업권 전문가와의 이중교배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업계와 유관기관은 보험산업이 보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보험이 보험답게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부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간담회 참석자 모두 지난 2년간 보험연구원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보험산업의 현안에 대한 선제적이고 시의성 있는 연구와 함께 연구의 객관성 및 중립성 확보를 요구하였다. 김대식 보험연구원장은 업계와 유관기관, 학계와 소비자, 그리고 정책·감독당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험산업이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보험연구원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이기형(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원) | CEO Report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내세운 정책 공약을 기초로 보험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보험산업별로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수요 측면, 경영전략 측면, 감독정책 측면과 연관시켜 향후 미칠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보험상품 개발 및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영역 확장 등이 생명보험과 제3보험, 손해보험에 미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생명보험시장에는 기초연금의 도입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제3보험시장에서는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농어촌 실태에 부합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개선, 65세 이상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시장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 전면 개편,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녹색복지 구현,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영전략측면에서는 소유 및 지배구조, 모집채널, 공사와 경쟁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며, 금산분리가 강화되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가 근절된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정책은 모집채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60세 정년 연장 및 정리해고 대타협기구 설립 등으로 인력운용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격담합 방지 및 공정경쟁 촉구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집행체계가 개선될 예정으로 공정한 경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감독정책측면에서는 감독기구 재편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에 따른 비용수반 가능성과 금융 및 보험의 신뢰기반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 금융부가 신설되고 쌍봉형 감독기구가 도입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출 소비자 보호 법규 및 금융상품판매법이 도입되고 금융투자상품성과 비교공시체계가 구축되고 금융영업관행을 검토하게 된다.

요컨대 새정부의 보험상품 관련 정책 대부분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공적보험이나 사회보험의 급부확대, 보험료 경감 등으로 이를 대체하는 민영보험의 수요는 일정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가 새로운 보험수요로 보이나 정착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정착되더라도 수익성 있는 보험제도로 운영되기에는 리스크 특성상 제약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감독기구의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규제비용은 상승하게 되고, 보험영업 경쟁정책 강화로 각종 수익성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부합한 사업모형과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정책 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김대환(연구위원)·이상우(수석연구원) | CEO Report

제18대 대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당시의 정강에 본인부담경감제의 개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강화하는 정책을 포함한 공약을 제시한바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소득계층별로 의료비 부담의 상한금액으로 설정하고 있는 현행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최하위 계층부터 소득을 더욱 세분화하여 본인부담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4대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현재의 산정특례제를 개편하여,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비급여 의료비까지 정부가 보장해주는 완전한 ‘무상의료’를 제시하였다.

이에 신정부의 정책공약 중 건강보험과 관련된 공약의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정책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사회적 적합성에도 맞지 않고, 다른 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산정특례제의 기능이 이미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정특례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비급여의 진료비와 진료적정성을 관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를 실행할 경우 보험료만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경감제 개편안을 실행하더라도 예상보다 더욱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한 재원에 대해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경감될 경우에는 의료이용 및 공급이 증가하여 정부 재정과 경제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를 실행할 것이 아니라 중증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재정을 투입하고, 의료비 보장을 정부재정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민영건강보험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새정부의 건강보험정책들이 현실화되더라도 민영건강보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민영건강보험의 보험료가 감소되어 오히려 가입률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급여의료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유용성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정액형 건강보험은 중대질병으로 인한 고액의료를 보장하기 때문에 유용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액형 건강보험의 주요 기능이 의료비 보장과 더불어 소득상실리스크의 보장을 감안할 때 정액형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KiRi Weekly 이슈

국내 금융회사의 국경 간 M&A 역량 강화 필요성

전용식(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71호

해외사업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M&A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은 20년 이상 지속되었으나 현지 금융회사에 대한 인수·합병 부재로 해외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국경 간 M&A에 대한 역량 부족으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E Capital, ING Group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M&A를 통해 성장했으며, 최근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하며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들은 매물로 나온 글로벌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 부족과 명확한 전략 부재, 그리고 M&A 이후 사업통합 역량 부족 등으로 국경 간 M&A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해외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정부의 실질적 노력과 지원이 중요한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M&A 단계별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정부는 해외정보 확보와 공유, 그리고 적법한 선제적 승인이 필요하다.

영국의 보험모집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정 논의와 시사점

송윤애(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72호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1년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계약체결대리권 및 보험료와 고지수령권 존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규정은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 억제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영국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원칙을 살펴보면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한 고지사항의 수령만큼은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간주하여 해당 모집인의 부실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맺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개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게도 고지수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에 고지수령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보험모집 시 계약3권 존부에 대한 설명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를 억제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변액연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진단과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73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적자금 수혈을 받은 미국 Hartford 보험회사 사례를 들어 변액연금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변액연금 제공자는 금융 혼란 시 계약자의 조기 인출에 따른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이나 최저보증 위험관리를 위한 헤징 활동 실패로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국내 보험회사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최저보증에 대한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변액연금 위험관리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헤징에 대한 요구자본 경감을 인정하는 보험감독정책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농협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안철경(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74호

유사보험(공제) 형태로 영위해 왔던 농협의 공제사업이 2012년 3월 2일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면서 농협금융지주회사 내에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으로 보험시장에 진입하였다. 공제로 운영되던 농협보험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업으로 진입함에 따라 민영 보험시장 규모가 10% 정도 증가하면서, 보험시장 내 공정경쟁 체제 구축, 보험회사 간 경쟁 강화 및 금융그룹화 정책 등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보험시장 내 공정경쟁에 대한 기본 틀이 구축되어 향후 타 공제의 감독일원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형사 위주의 과점현상을 완화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이며, 타 금융지주회사 및 대형 보험회사의 금융그룹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두 개사 보험조직 및 전속설계사 채널의 구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지만 직원 및 설계사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과열될 경우 시장질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농협은행(금융점포)의 25% 룰 적용은 결과적으로 기존 보험회사에게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로 나타날 수 있으나, 농협 단위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의 특례로 방카 규제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산업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시사점

변혜원(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75호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극단적 기후현상의 심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농도의 심화가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적응(adaptation)

과 완화(mitig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적응이 기후변화를 주어진 상황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이상기후나 재해 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완화는 기술변화나 대체를 통해 기후변화를 경감시키기 위한 사전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보험회사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에는 탄소 배출 경감유도 상품판매,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개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녹색산업 육성, 기후변화공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 관련 정책 입안 참여, 사회적책임투자, 회사 내 탄소배출 절감 등의 노력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일리지자동차보험, 중고부품활성화보험 등의 상품들이 판매됨에 따라 탄소배출 경감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탄소배출 관련 제도 변화와 관련 이슈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제도 개선제안 등 장기적 안목에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준비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일시납 변액형 즉시연금상품 현황과 시사점

이경희(연구위원)·이경애(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76호

2011년 들어 일시납 즉시연금의 수입보험료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섰으며, 월지급식편드로

의 자금 유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계기로 일시납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선진 시장에서는 부유한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장수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 헤지에 초점을 둔 상품으로 일시납 변액형 즉시연금(SPIVA: Single Premium Immediate Variable Annuity)과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GLWB: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이 판매되어 왔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액형 즉시연금은 종신토록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선진 시장 상품과 달리 가입 후 10년 동안만 특별계정으로 운영되고 그 후는 일반계정의 금리연동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변액형 즉시연금 분야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보험회사도 선진 보험회사와 같이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제공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노인본인부담의료비 보장 사각지대 완화방안

조용운(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77호

본 보고서에서 노인의료비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서 민영실손의료보험이 고령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실손의료보험의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의료비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은 2008년 65세 이상 인구가

지출한 총의료비의 57.5%를 보장하였다. 국민 건강보험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은 60세 이상 인구의 11.8%에 불과하다. 65세 이상은 1% 미만 일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에는 높은 보험료로 인하여 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정작 노후에 의료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비의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보험산업은 노부모, 1세대 후손, 소득자 본인의 통합위험률을 적용하는 「3세대통합의료비 보장보험」 도입을 통해 노인의료비 보장의 사각지대의 해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증가 추세를 볼 때 연간 보장한도의 설정 등을 통하여 과도한 보험료의 인상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가족단위의 가입이므로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가입자의 저변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소액단기보험업의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78호

우리나라는 90여 개 이상의 공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감독이 미흡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기반의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제에 대한 감독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보험업법」에

소액단기보험업을 신설하여 2008년부터 공제를 「보험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하였다.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은 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진입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최저 1,000만 엔으로 크게 낮추었고 등록제를 채택하였으며 상품·자산운용,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 보험회사와는 다른 규제와 감독을 실시하였다. 한편 기존 보험회사들의 경우 특화된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를 기존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하여 보험 서비스 다변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우체국보험과 4대 공제가 「보험업법」상 재무건전성 감독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공제에 대한 감독제도는 미비한 상태에 있다. 공제와 보험회사에 대한 일원적인 규제 및 감독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근거법이 없는 공제나 근거법이 있더라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제를 「보험업법」의 범주에 포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업과 같은 소규모 보험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 개혁 동향 및 시사점

김해식(연구위원)·조재린(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79호

국내 건전성 감독은 유럽연합 Solvency II(EU S2)를 준거 모델로 삼고 있으나 미국의 RBC를 축으로 하고 있어 미국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SMI: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SMI의 특징은 첫째, 보험회사 재무상태에 관한 모든 측면을 고려하며, 둘째, 규제보다는 감독에 초점을 두고, 셋째,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먼저 SMI는 자본규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그룹감독, 회계와 재보험에 이르는 모든 이슈들을 망라한다. 또한 SMI는 RBC 규제보다 상시감독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보험회사의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감독보고(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SMI는 EU S2의 변화를 수용하여 RBC 표준모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실 보험회사 통제수단으로서의 RBC 기능을 강조하고 내부모형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마지막으로, EU S2나 미국 SMI 모두 장기 청사진을 가지고 보험회사가 제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면서 보험회사가 규제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전개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개혁과 정책적 시사점

이상우(수석연구위원)·류건식(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80호

최근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정부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적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지지부진한 공적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공제연금(공무원연금 등)과 후생연금(보수비례 공적연금)을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국회에 상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통합해 하나의 국민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자 부분을 기초연금(또는 국민연금), 후자 부분을 후생연금보험으로 명칭하고 있으며, 일본의 공제연금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유사한 공적연금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일본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하는 공적연금인 공제연금을 2015년 10월까지 후생연금에 통합시키고 국가공무원의 연금요율을 2018년까지 후생연금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향후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 간의 급여격차를 줄여 수급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수직역 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적인 공적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FY2011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원인과 시사점

기승도(수석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181호

FY2011 손해율이 75.5%로 전년 FY2010의 81.1%에서 약 5.6%p 개선되었으며, FY2011의 손해율이 75.5%로 전년도의 81.1%보다 상당 수준 개선되었지만 아직 그 수준이 예정손해율(약 70% 수준으로 가정)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FY2010에 비하여 FY2011 손해율이 개선된 주요 원인은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비례공제방식 자기부담금제도” 도입 등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사고발생률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제도개선으로 자기차량손해 사고발생률은 줄었지만 고급자동차의 증가(또는 평균차량가액의 증가)로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 수준이 높아진 2중 효과로 손해를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손해율이 개선되었음에도 향후(2013년 이후)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개연성도 있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의 효과가 향후에도 지속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손해율 수준(75.5%)이 예정손해율 수준 보다 높고, 손해율이 다소 개선되면 자동차보험요율을 인하하라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요율을 내려왔던 과거의 경험 등(실제로 2012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됨)을 볼 때 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손해율 증가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손해보험회사는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대비하여 수익성 위주 경영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2010년 12월 추진된 여러 제도개선 중에서 “비례공제 자기부담금제도” 이외에 자동차보험 수가일원화 및 보험사기 방지 등과 같은 기타 제도개선 방안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부합되면서 손해보험회사들이 창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표준약관의 범위를 책임보험으로 한정하고 요율결정 체계를 책임과 임의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생명보험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황진태(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82호

최근 들어 생명보험업에서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간 손해보험을 비롯한 은행 및 증권업의 온라인상 거래는 활성화되었으나, 생명보험은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생명보험사업이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으며, 일본도 2008년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인 SBI AXA(현 Nextia Life)와 Lifenet이 설립되어 판매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과 저소

득층을 주고객층으로 하여 정기 및 의료보험 등 표준화된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생명보험이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경우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생명보험상품에 대해 사업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온라인 생명보험의 경우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불완전판매 문제가 상존할 수 있고, 보험료 전적, 건강검진, 청약, 계약체결 등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므로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한편, 표준화된 상품 위주의 공급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기존 판매채널과의 마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생명보험 사업모형을 설계하는 회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고려가 중요할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김대환(연구위원)·김동겸(선임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183호

그 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비용 대비 편익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4.9%로 OECD 평균 2.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9년 64.0%에서 2010년 62.7%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고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을 책자 및 인터넷상에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효성은 높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료소비자 중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15.8%이며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도 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동일한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별로 고지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비교·평가하기가 어려워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본인에게 필요한 진료행위가 무엇인지 의료기관 방문 이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지제도로만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의료기관 간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들의 진료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코드화하여 명칭을 통일해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급여 의료의 기준가격이 될 수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의료기관 간 큰 차이가 발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의료를 심사하고 있는 만큼 심사 대상을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는 비급여 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개인의료보험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ING그룹의 보험사업 부문 매각의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임준환(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84호

은행업과 보험업을 겸영하는 글로벌 복합금융 그룹인 ING그룹의 보험사업 부문 매각 원인은 2008년 들어 확대된 보험사업 부문의 악화가 은행사업 부문으로 전이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ING그룹은 지주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자회사인 은행과 보험회사에 자본으로 투자하는 구조, 즉 이중레버리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은행, 보험사업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버퍼기능인 자본이 취약해졌을 수 있다. 또한, 그룹 내 자회사들과의 서비스·자본 거래로 높아진 상호 의존성이 외부 충격을 확대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ING그룹의 사례는 겸업화·대형화를 추진하는 국내 금융그룹의 자본구조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국내 금융감독 체계에서는 리스크 분산효과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중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지주회사의 자본조달 유연성이 악화될 수 있고 경영환경 급변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 이중 레버리지 관리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ING그룹 사례는 사업모형의 단순화, 투명성,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 국내 금융그룹들이 겸업화·대형화를 추진할 때 신중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서의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사례와 시사점

조재린(연구위원)·채원영(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86호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봄동상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손실을 실손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손해사정인의 비전문성과 손해사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농가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손해를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근래에 인도,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도입한 지수형 날씨보험은 특정기간 동안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측정 가능한 기상정보를 지수화 하여 사전에 정한 지수와 실제 관측한 지수의 차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지수형 날씨보험은 손해사정과정 없이 보험금 지급 과정이 신속하고 간편하며, Event Trigger 발생 시 미리 협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등 기

존 농작물 재해보험의 단점으로 거론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지수가 개발과 보험료 및 보험금 산출을 위한 전문 인력과 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한다면 장기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작물과 보장 재해, 가입 기간 등이 다양해져 보다 효율적인 손해를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지급여력제도 변화와 시사점

장동식(수석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187호

일본 금융청은 금융위기 경험 등을 토대로 자본산업의 엄격화, 리스크 측정의 엄격화,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성 확보 등을 목표로 지급여력제도를 개정하였다. 가용자본과 관련하여 일본 금융청은 이연법인세자산의 불산입금액, 부채성 자본 및 보험료적립금등 잉여금의 핵심자본 한도, 장래이익의 불산입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계상 방법을 개정하였다. 요구자본과 관련하여 일본 금융청은 상향된 신뢰수준(95%) 및 최신 경험실적 기준의 위험계수, 신설된 신용스프레드리스크, 변경된 신용리스크 및 가격변동리스크 계상 방법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계상 방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일본 금융청은 자산·부채의 경제적 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필드 테스트를 통해 국제 동향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의 협력, 명확한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고 보험회사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일본 금융청의 노력은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에게 정책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자본계층화에 대한 국제기구 및 유럽의 권고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회사의 경험실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가치 기반의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중기과제로 설정하고, 아울러 국제 동향 모니터링,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방안

박선영(연구위원)·이혜은(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88호

보험회사의 참여로 인해 질병관리서비스의 고급화가 초래되고 건강정보가 보험 인수여부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입법 계획 중인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는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보험회사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은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리스크 수준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건강정보의 활용으로 그동안 인수하기 어려웠던 고위험자의 리스크 수준에 적합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여 인수범위가 확대되고 언더라이팅 및 보험사기 비용이 감

소될 수 있다.

건강정보의 활용으로 보험접근성의 저하가 염려된다면 보험회사가 자사의 보험가입자 중 건강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정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업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타 기관과 달리 고객의 건강을 유지·개선시켜 손해율이 충분히 감소된다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인도 발생하는 등 동질의 서비스를 더욱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포괄수가제(DRG) 도입과 민영실손보험시장에 대한 영향

이창우(연구위원)·조용운(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189호

정부는 진료비의 적정성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4회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제까지는 요양기관의 참여가 자발적이었지만 금년 7월부터는 7개 질병군에 대해서 모든 요양기관에 당연히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으로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하므로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7개 질병군에서 평균 21%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공급자들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 선택권 박탈, 고난도

의술이 필요한 환자를 서로 떠넘기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본고는 포괄수가제의 확대 적용으로 예상되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고 민영의료보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포괄수가제는 이론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의 유인요소가 존재한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속한 질병군에 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상관없이 정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의료공급자는 진료비용을 줄일 유인이 발생하며 환자진료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포괄수가제가 적용 가능한 의료서비스가 한정적이어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 부분으로 의료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이 전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비용편차에 따른 진료비 보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료공급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비를 보상하는 질병군의 진료와 처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정해진 포괄수가를 통하여 전체 진료비의 관리가 가능하다. 상기한 의료서비스 분야의 변화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시장이 받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의료서비스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장기적 확대 적용은 비급여 보험시장을 급격히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포괄수가제의 적용을 받는 의료서비스에서는 소비자의 의료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서비스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포괄수가제의 적용은 의료공급자의 경제적 유인을 변화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유인이 존재하므로 해외 의료

이용 보험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국가 스웨덴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90호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였다. 공적연금 개혁의 내용은 첫째, 기존의 법정소득비례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기여와 급여가 비례하는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연금과 개인계좌형태의 수익연금을 도입하였다. 둘째, 기초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보증연금을 도입하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제도는 사무직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중앙정부공무원, 지방정부공무원 등 4개 직군별로 다양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공적연금의 확정기여형 도입에 맞추어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였다.

인구고령화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현실에서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통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장기능에 입각한 근본적인 연금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민연금

의 역할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의 보완조치로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최저보증연금제도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김소연(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91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 풍수해보험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4년의 기간이 지났다.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지만, 국가 재난시스템의 유기적 일부로서 역할이 크므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를 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소방 방재청은 풍수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국민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시행했다.

이러한 정부의 개선안 시행과 더불어, 풍수해보험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정부의 무조건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난위험지도는 풍수해보험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재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빠른 완성과 더불어 주기적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풍수해보험은 사고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리스크의 분산이 어려운 만큼, 계약기간을 5년, 10년 등으로 늘려 보험의 재해리스크를 시차적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수거절을 할 수 없는 정책보험의 특성상, 소수의 최상위 위험집단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비중이 전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바, 이들 집단에 대한 피해 예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자체 차원에서 강력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 선정논의와 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92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금융안정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 (G-SII,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관련 규제 초안을 제시하였고 핵심내용은 G-SII의 선정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보험회사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는 대형보험회사 파산이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손실로 정의된다. G-SII는 지표기준 측정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IFS 측정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선정된다. 대형 보험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규모, 상호연계성, 글로벌 영업행위, 그리고 비전통적·비보험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IFS 측정방법에 의해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비전통·비보험 영업활동 비중에 가장 높은 가중치(40%~50%)

를, 다음으로 상호연계성(30%~40%), 규모 및 글로벌 영업활동의 순으로 부여된다. 이러한 가중치부여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은행방식과 차별화된다.

국내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G-SII에 해당되는 국내 보험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비록 국내보험회사가 G-SII 선정대상이 되지 않을지라도 향후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될 대내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D-SII) 선정기준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D-SII 선정 방식은 G-SII 선정 방식과 달리 각국 감독자에게 자국 내 금융시장 및 경제에서 보험이 기여하는 역할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각국별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D-SII 선정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과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조영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93호

보험산업은 금융산업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불만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보험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험모집과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서비스와 소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보험가입 시 설계사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할수록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금 지급 시 가입 당시의 설계사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설계사가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미지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가입자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할수록 보험회사의 이미지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보험모집 시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방향

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대환(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94호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근퇴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마련되어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된 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 있다. 첫째, 퇴직연금가입자가 55세 이전에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받은 퇴직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동가입 되도록 규정된 반면, 법정퇴직금제도

하의 퇴직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연금재원이 조기소진될 수 있다. 둘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바로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이 55세 이전 퇴직자로 한정되어 있어 55세 이후 퇴직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의 자동가입 대상을 법정퇴직금제도하의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퇴직적립금의 10%를 원천징수하는 미국처럼 해지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증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에의 자동가입연령을 5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체계적이고 전사적으로 대응해야

김해식(연구위원)·김소연(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95호

금리 하락 시 부채의 증가가 자본의 증가보다 크게 나타나는 보험회사는 자본의 실질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금리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특히 장기보험에 대한 영향은 저금리로 하락한 투자수익률이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금리보다 낮아지는 역마진으로 나타나며,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회사의 규제 준수비용은 늘어나고 자율적인 보험료 결정권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산운용에서 만기 조정이나 금리 상승 시기를 염두에 둔 투자전략으로 수익성 제고와 위험 완화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영업과 보험영업의 통합 관점에서 금리위험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영업에서 가장 유연한 저금리 대응은 신계약 판매를 통해 준비금의 부담금리를 낮추는 것이며 상품구성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예측분석과 시장분할을 통해 그룹별 수익성과 유지율을 목표가격결정에 반영하여 저금리에 대응하고 있는 미국 보험회사들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금리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면 소통의 기존 채널보다는 모바일 등을 활용한 다면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의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필요성 검토

황진태(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96호

신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사회제도도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의 니즈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회사들의 장기상품 위주의 영업과 일반 손해보험상품 판매 유인 부족으로 일반손해보험 판매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들어 상거래 현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와 함께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판매가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이러한 보험상품은 주로 단체보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단체보험은 제품이나 서비스 제조 또는 판매업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고객이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계약으로 손해를 관리와 소비자보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보험상품의 현장판매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기존 판매관행의 단점을 극복하고 판매채널의 명확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반 기업이 본업과 연계하여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후 구매현장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이다. 해당 기업의 업종에 따라 다양한 단종보험대리점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며, 보험대리점 등록 시 해당 요건과 시험 및 교육이수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업행위규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다른 판매채널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중국 자동차보험제도와 시사점

기승도(수석연구원)·이소양(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197호

중국 자동차보험은 크게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3자배상책임보험, 차량손해보험, 절도손해보험, 탑승인원손해보험 및 부가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자동차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은 모든 차량관리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나머지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 보험을 제외한 보험상품은 보험협회에서 발표한 3가지 조례(조례 A, 조례 B, 조례 C)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이들 3가지 조례에 근거한 보험상품(3배상책임보험, 차량손해보험, 절도손해보험, 탑승인원손해보험 및 부가보험으로 구성된 상품)을 상업자동차보험 A, B, C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들 상업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 및 요율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인가과정에서 요율수준 등이 유사하도록 조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상품 내용과 요율수준에 회사간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중국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 또는 기존 진출회사가 중국자동차보험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할 때 중심 경영전략은 채널전략과 언더라이팅 전략이 될 것이다.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채널전략은 대리점, 브로커, 직판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직판채널이 최근 중국자동차보험 시장의 중심채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채널별 접근 대상 시장에 차이가 있으므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한 채널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존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하려는 회사는 직판채널을, 종합손해보험회사로 진출하려는 회사는 대리점 채널과 직판채널을 모두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자동차보험 시장의 중요한 제도변화는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시장

을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에게도 개방한 것이다. 중국이 이 시장을 외자계에 개방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동 시장의 높은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시장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동 시장의 손해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뜻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시장에 뛰어들려는 외자계 보험회사는 동 시장에서 손해율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생명보험 가입 및 노후준비 실태 비교와 시사점

이상우(수석연구원)·정원석(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98호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들의 건강 및 노후복지 대책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가입 실태조사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생명보험 가입률(87.3%)이 다른 세대보다 현저하게 높고, 주로 질병보험(83.7%), 사망보험(28.6%), 연금·저축성보험(25.3%)에 가입하고 있으며, 향후 1년 이내에 26.9%가 생명보험에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를 위해 공·사연금의 가입이 가장 적합한(68%)것으로 응답한 반면, 자녀의 지원은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0.8%)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에서 응답자 본인의

노후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대비 월 평균 저축액은 32.1만원으로 다른 세대의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 노후비용의 45.2%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공·사연금 가입률은 90.2%, 공·사연금 납입보험료 수준은 월 평균 2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결과 우려되는 것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기·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61~63세)까지 국민연금 미수급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은퇴교육 확대를 통한 은퇴 준비와 함께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연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보험가입이 대부분 보장자산에 집중하고 있어 은퇴자산으로 분산하여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식 전환과 함께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세제적 납입기간(10년)의 탄력적 조정 및 세제체계 개선 등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고 연금화 하여 퇴직금이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자영업 진출 확대 등 창·폐업에 따른 자산 소진으로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2017년 적용 예정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용을 조기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셋째, 이들이 향후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상당수가 10년 이상 가입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으므로 연금 수급권 확보 차원에서 가입기간과 이에 따른 세제혜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시적 조치가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동향과 시사점

조영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199호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변동 및 만기 도래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구조 개선 정책으로 은행권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적격대출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도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MBS와 커버드본드 등 유동화 증권 발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확대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MBS와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 되면 장기 채권에 대한 초과수요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 채권의 수익률 변화에 주목하여 채권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국고채 투자 비중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증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

으로써 안정성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운용수익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도 수익성 강화 측면에서 적격대출의 취급 및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보험판매채널 규제개선 동인과 영향

이기형(선임연구위원)·정인영(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200호

영국 FSA는 소매투자형상품 판매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2012년 말 “소매투자형상품에 대한 판매채널 개선을 위한 제도(RDR: Retail Distribution Review)”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RDR은 자문자가 상품 공급자의 판매전략이나 소비자의 적합성에 관계없이 높은 수수료의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판매과정을 자문(advice)과 판매(sale)로 구분하여 자문자의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자문비(fee)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국 보험시장은 RDR 시행으로 인해 소매금융상품과 관련한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 판매과정상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가 줄고 계약유지율이 개선되어 소비자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제공받는 자문의 종류와 비용의 비교를 통한 상품구입이 가능하게 되며, 판매채널은 직접적으로 금융투자형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독립금융자문자(IFA)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향후 영국과 같이 판매채널을 자문형으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높일 경우 투자형상품의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고, 보험 본연의 보장 및 연금기능이 강화되어 보험회사가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EU 보험중개사의 정보 공개 기준 강화의 배경과 시사점 : Contingent Commission과 이해 상충

송윤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01호

최근 미국과 EU는 보험판매자의 보수체계·소유구조·역할 등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4년 미국 뉴욕주 검사 Eliot Spitzer가 보험중개사의 조건부 수수료 수수 관행에 내재된 이해 상충과 계약자의 이익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서 시작된다. 보험중개사는 더 높은 조건부 수수료를 약정한 보험회사를 위해 편향된 자문을 하거나, 입찰담합을 하거나, 허위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자의 이해에 반하는 계약의 체결을 유도할 유인이 있다. 이렇듯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조건부 수수료를 받을 경우 계약자와 중개사 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자의 이해가 침해될 여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조건부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국제적으로 조건부 수수료를 금지하기 보다는

중개사의 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 상충 문제를 극복하는 추세이나, 정보 공개만으로는 이해 상충 및 계약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중개사의 정보 공개 범위 및 방법이 미국과 EU에 비해 소극적인 편이다. 현재 조건부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자가 보험중개사의 보수체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요청과 정보탐색이 요구된다. 이로써는 이해 상충으로 인한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참여방안

이창우(연구위원)·조용운(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02호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도입되었지만 예외적으로 보험회사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동안 해외 보험회사는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면서 국내병원과 직접지급계약을 맺는 등 외국인환자유치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보험회사와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전문성 및 해외네트워크 활용, 의료보험에 대한 전문성 등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회사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진출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이에 2012년 8월 정부는 영세 유치업자와 상생하는 방안으로 보험상품과 연계한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고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서 영세유치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외국인환자를 국내 병원에 소개·유인·알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회사는 수수료 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진출보다는 보험상품을 근간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참여방법을 고민해 왔다. 기본적인 사업모형은 해외 글로벌 건강보험회사의 네트워크 자본, 전문인력 등을 이용하여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모형이다. 보험사업 운영은 국내보험회사가 하고 보험상품 판매는 현지 보험회사가 하는 모형이다. 본고에서는 싱가포르의 래플즈병원의 자회사인 IMI와 영국계 Bupa International의 제휴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와 운영방법을 국내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방식에 적용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보험회사는 해외진출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한 상품개발로 글로벌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인 보험가입자들을 국내 의료기관으로 소개·유인·알선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률 논란 계기로 본 변액연금시장의 구조적 변화

전용식(연구위원)·김세중(선임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203호

2012년 4월 금융소비자연맹의 보고서(K-컨슈머리포트 제2012-2호)에서 변액연금상품의 수익률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5월 17일 보험연구원은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후취 수수료 상품의 도입과 소비자 중심의 수익률 공시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금융위원회가 6월 17일 변액연금관련 판매수수료체계 개선, 공시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FY2011 2/4분기 이후 감소하던 변액연금 수요는 수익률 논란 이후에도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해지율도 생명보험 전체 및 변액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수익률 논란이 변액연금 수요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액연금 수요는 성장률, 주가지수, 소비자들의 위험선호도 변화와 이로 인한 일반연금보험과의 관계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변액연금의 수요 감소는 수익률 논란도 영향을 미쳤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의한 소비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와 노후보장이라는 연금의 특성이 강조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생명보험회사들의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할 시점이다.

손해보험의 보험위험액 산출방법에 관한 소고

조재린(연구위원)·김유미(인턴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204호

현행 우리나라의 RBC제도는 손해보험의 보험위험을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위험 산출 시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각 회사의 손해율 및 준비금변동성의 분포가 동일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보험종목 간 분산효과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반면, EU Solvency II 표준모형이나 Swiss Solvency Test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위험요소를 국내 RBC제도보다 세분화하고 있으며, 보험종목 간 분산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Swiss Solvency Test는 확률적 위험과 모수불확실성 위험을 분리하여 모형에 반영하고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위험추정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위험 산출에 있어서 위험 세분화, 분산효과 반영, 확률적 위험과 모수불확실성 위험의 분리를 국내 RBC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RBC는 보험가격위험 산출 시 적용하는 회사별 조정률을 5개 연도별 합산비율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으로써 합산비율의 변동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안에도 검토가 필요하다.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배분과 투자성과

조영현(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205호

국내 생보사는 금융위기 이후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모두 국공채와 특수채의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중소형사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투자성과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위험가중자산비율이 가장 낮은 외국사의 위험조정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긴 기간의 성과를 비교할 경우,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중소형사가 가장 높은 위험조정 수익률을 달성한 것이 관찰되었다. 즉, 국내 생보사의 경우 자산배분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자산의 다변화가 반드시 투자성과를 제고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기의 불확실성이 크고 채권시장의 다양성과 유동성이 낮은 경우에 안정성 위주의 채권투자가 효율적일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생보사의 투자성과가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투자시 일정 수준의 신용위험을 지속적으로 부담함으로써 높은 위험조정 투자성과를 달성하는 미국 생보사의 자산배분 전략은 국내 보험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국내 생보사는 경기가 회복기이거나 호황기일 때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자산배분을 하여 효율적으로 투자수익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미국 생보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채권투자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발달과 보험사의 투자 능력 제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현황과 시사점

박선영(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206호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일부 상품에서 역마진을 겪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와 대체 투자처 발굴을 위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운용자산 대비 3.60% 수준으로 보수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부동산 투자 이익률도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수익률 보다 낮은 3.5%에 불과한데, 이는 오피스시장 평균 수익률 6.9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생명보험회사가 시장평균을 밑도는 낮은 부동산 투자 이익률을 기록한 데는 부동산의 가치 변동성이 커 자본위험 분류시 채권보다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투자전략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효과적인 자산운용 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다. 다만, 보험회사 특유의 자산부채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ment)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위험관리가 더불어 요구된다. 따라서 위험·수익군별로 핵심(Core), 가치성장(Value-added), 기회(Opportunistic) 자산 등으로 부동산을 세분화하고 부동산 투자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 선별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시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향

류건식(선임연구위원)·김대환(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07호

최근 황혼이혼의 증가로 이혼시 분할연금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분할연금제도는 1998년에 도입되어 2007년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 첫째, 이혼 즉시 연금이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이 지급될 때에만 연금분할이 가능하여 이혼 후 배우자였던 자의 상황변화로 인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만 분할을 허용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이전에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 내지 기여금은 분할하지 못하므로 개인의 독립적인 수급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국민연금 이외에 특수직역연금 및 사적연금의 경우 분할연금제도가 없어 연금제도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이전에 연금계정에 기록된 소득 내지 기여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소득분할 형태의 분할제도가 도입되고, 이혼 즉시 연금의

분할을 실시하여 노령·장애·사망 등 제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분할연금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수직역연금에도 국민연금에 준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사적연금에도 분할연금 관련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후취형 변액연금상품도입에 따른 추가적 위험과 관리방안

윤상호(연구위원)·임준환(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08호

금융소비자연맹의 변액연금 수익률 관련 보고서 발표 이후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선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납입보험료대비 수수료를 선취한 후 적립하는 구조로 계약초기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품구조를 갖고 있다. 소비자의 다양한 투자성향 및 유동성 선호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후취형 변액연금상품 도입 시 보험사는 각종 최저보증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외에도 사업비조달에 사용되는 부가보험료의 변동으로 인한 현금불일치 문제라는 추가적 위험에 노출이 된다.

납입보험료에서 신계약비 등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선취형 변액연금상품과는 달리 후취형은 투자적립금에서 수취하기에 미래수입의 변동 및

불확실성에 보험사가 추가적으로 노출된다. 미국 Hartford사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자산의 급속한 상각으로 인해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후취형 변액연금상품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부가보험료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후취형 변액연금상품 판매에 대한 모집수당의 지급방식 다양화를 통해 1차적으로 현금불일치 문제의 심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후취형 변액연금상품 판매로 발생하는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자산의 실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회계적 기준을 정비하여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주는 영향을 투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변액연금의 최저보증활동에 따른 위험관리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자산의 위험관리에 활용하는 동시에 이연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위험이전을 시도할 수 있다.

저성장·저금리 환경하에서 보험회사의 판매전략

변혜원(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09호

경제성장 둔화 및 저금리 현상은 보험수요 감소와 투자수익 저하를 가져와 보험회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는 저성장·저금리 환경 하에서 보험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판매채널 전략 및 고객접근방법, 상품포트폴리오 재조정 측면에

서 살펴보았다.

첫째,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 채널의 도입을 통해 보험료 인상 효과를 완화하고 새로운 채널에 적합한 신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보험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채널 특성에 적합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목표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예측분석기법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예측분석은 여러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언더라이팅 속도 및 정확도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세분화된 잠재시장 분석을 통해 효과적 판매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측면에서는 저축성 상품의 비중을 낮추고 보장성 상품 비중을 높이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전통적 대면채널을 통한 효과적 보장성 상품판매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대면채널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와의 양방향 정보교환 채널로 사용하는 다중채널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의 규제방안과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10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지난 10월 17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G20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각 금융권역의 시스템리스크 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보험권역의 시스템리스크 완화방안은 IAIS와 FSB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IAIS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를 규제하는 목적이 글로벌 보험회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경감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감소시키는 데 있다고 천명하였다. 특히 G-SIIs의 도덕적 해이를 경감하고 부도 위험과 그 영향의 완화하며 시스템적으로 덜 중요하게 활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일반보험회사의 G-SIIs로의 유인을 낮추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G-SIIs 규제방안은 크게 G-SIIs에 대한 감독강화와 협력, 질서정연한 청산방법, 추가적 손실흡수를 위한 자본부과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FSB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리스크의 경감을 위한 권고안에서 요구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제 G-SIIs의 선정 및 규제방안이 구체화되었으므로 D-SIIs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국내 보험회사 중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의 선정 및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시점으로 보인다. D-SIIs의 경우, 그 선정 및 규제에 있어 국가별 감독당국의 재량권이 크게 부여되어 있는 만큼 국내 보험회사의 부실이 금융 및 실물경제로 미칠 수 있는 파급경로 및 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공사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 프랑스 자연재해보험 사례

김소연(연구위원)·박정희(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11호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로 자연재해 리스크관리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중심이 아닌 경제 주체들의 능동적인 리스크관리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보험제도를 개선·운영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대부분의 손해보험 상품에 의무가입 특약으로 자연재해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자연재해위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정부의 무한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국영 재보험회사에 자율적으로 출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률이 매우 높고, 보험회사의 역선택 위험이 낮아 민영 시장에서 위험 인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목적물의 실제가치를 파악하는 주계약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복구비에 가까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단일요율을 사용하여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취약한 계층도 감당할 수 있는 상품이며, 피해저감 노력을 하도록 계약자의 자기부담금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보험제도가 선진국과 같이 자연재해 리스크관리의 핵심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지급결제수단 규제분석과 시사점

전용식(연구위원)·채원영(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12호

최근 신용카드회사들의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계획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경제의 공평성을 훼손하고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주요국들의 지급결제 수수료에 대한 제도개선·소송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주요국들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상승에 대한 직접적 규제, 소비자들에 대한 수수료 공시 의무화, 가맹점의 가격차별 금지 폐지, 카드회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 책정에 대한 협의 등의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호주에서는 지급결제수단의 균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의 원칙에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지급결제수단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소액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의 보험업에 대한 영향 : 미국 정부의 시각 및 시사점

윤상호(연구위원)·이창우(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13호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FTA는 한미 양국 간 교역의 포괄적인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한미 양국 정부의 추진배경은 상이해 협정문에 대한 해석이 양국 산업 전문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한미FTA를 통해 한국시장 진출 확대 및 점유율을 높이는 것인 반면 한국은 자국 상품의 미국시장 내 경쟁력 제고 및 미국기업의 국내시장진출을 통한 국내시장 효율성 확보와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협정에 임하였다. 본고는 한미FTA가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 정부 및 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며 시사점을 유추해보고자 하였다.

한미FTA와 같은 양자 간 협의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자국의 입장 및 해석도 중요하지만 상대국에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였으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향후 국내 보험시장에 한미FTA가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가 국내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달리 2년간 유예기간의 종료 이후 고객정보에 대한 공유 및 처리가 자유로워지는 시점부터 미국 보험회사들의 본격적인 국내보험시장 진출이 시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내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

미국 보험업계는 금융업종의 규제와 관련해 미국 보험회사의 포괄적 국내 시장 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미FTA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품과 서비스만이 제외되는 포괄적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한미FTA에 대한 양국 전문가그룹 간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은 만일 한미FTA하에서 자신이 예상했던 국내시장활동이 규제 등으로 인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미FTA가 보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필요성 : 재보험신용리스크의 위험과 규제 공백

송윤아(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14호

최근 재보험산업의 높은 집중도와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향 추세는 재보험의 상호연관성 및 재재보험 스파이럴(retrocession spiral)

발생 가능성과 결합하여 재보험신용리스크(Reinsurance Credit Risk, 이하 'RCR'이라 함)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 활용도 및 집중도가 높아 RCR 관리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RCR에 대한 규제와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관심과 자원배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재보험시장의 특성과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 측면의 접근방식, 그리고 미국의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련 법제를 살펴본 결과,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고 국제적 정합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RCR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미수금, 집중도, 리스크 출처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보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적시 통보를 통한 RCR 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재보험거래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규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책임준비금 면제를 이용한 간접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해외 소재 재보험회사를 관리해야 한다. 넷째, 인적·물적 감독자원을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별·종목별·담보별 RCR을 최소화하는 출재 한도 및 비상자본 산출 등 정략적 접근방법의 정교화와 RCR 헤지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선 방향

이상우(수석연구원)·류건식(선임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215호

지난해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이후 가입자의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 선택폭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립금 운용에 대한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가입자 교육을 사용자(금융회사에 위탁 가능)의 책무로 규정하고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퇴직연금 실태조사 결과 가입 근로자의 약 35%가 교육경험이 없는 등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교육체계에서 교육내용 범위, 세부기준, 교육 전문가,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퇴직연금제도가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입자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법령상 가입자 교육내용이 퇴직연금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기능 및 중요성, 다양한 적립금 운용상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노후설계, 운용될 금융상품의 이해, 자산운용 기초지식, 연금운용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법령에서 가입자 교육제공이 명시되어 있지만 신입·경력직원별, 가입자·수급자별, 직급별, 교육연속성 필요 여부별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교육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일본 사례와 같이 세부적인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거나 교육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회사의 영업부 및 컨설팅부서 이외에 퇴직연금 교육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가입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과 같은 퇴직연금 교육전문가 자격 양성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가입자와 사용자·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사용자가 또는 금융회사가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임의로 적립금을 운영할 가능성)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가입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국 사례와 같이 제3의 가입자 교육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ALM 동향과 시사점

조영현(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216호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리리스크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산부채종합관리(ALM)는 금리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써 일반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매칭하거나 파생상품을

활용한다.

생명보험회사의 최근 ALM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사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것을 볼 수 있다. 중소형사와 대형사도 지속적으로 금리리스크 수준을 줄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형사의 경우 아직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수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가 금리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산의 금리민감액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부자산의 듀레이션을 늘리거나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채권시장의 여건과 경영전략 상 여의치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파생상품을 활용한 금리리스크 축소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본조건

이승준(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17호

2012년 12월 18일부터 임산물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에 별도로 규정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임목 등 임산물의 품목을 확대하여 점차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임업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 임업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특히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관리가 필요한 육림업/벌목업보다 단기적인 재배작물의 비중이 높으며, 대부분의 임가에서 겸업의 형태로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임산물재해보험

의 확대는 육림업을 비롯한 장기적 투자에 필수적으로 병행되는 리스크관리를 제공하여 임산물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임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산물재해보험은 국가재보험이 필요한 정책성 보험으로, 임산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가치평가와 손해사정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므로,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우선, 세부적인 통계의 집적과 손해사정 인력의 확충 및 조직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연재해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을 의무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즉, 시장의 기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 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내용

송윤애(연구위원) | KiRi Weekly 이슈

제218호

보험연구원은 1월 21일(월) 여의도에서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 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현재 생·손보험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정보 및 사고정보를 집적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생·손보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집중하고 있다. 한편, 보험정보는 책임보

힘의 피해자 정보, 계약자·피해자·수익자가 다른 계약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 정보, 단체보험 피보험자 정보 등 동의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서는 보험정보의 특수성에 따른 동의예외조항이 없어 법률리스크가 상존하며 질병정보, 치료정보, 범죄정보 등을 포함하는 보험정보가 신용정보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험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에 보험정보 유통·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토론자 대부분은 법률리스크 해소, 개인정보 보호, 보험사기 방지 측면에서 보험정보 관련 규제 및 집중기관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집중기관 일원화에 따른 정보 권력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주요국 증권업에서도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익·비용 측면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수익 측면에서는 위탁매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 수입이 줄면서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핵심역량에 따라 차별화를 추구하며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비용 측면에서는 대형사와 달리 차별화가 쉽지 않은 소형전담 증권사를 중심으로 대형 증권사에게 위탁주문을 넘기거나 증권매매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계층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국내 증권업 역시 위탁매매수입 감소의 구조적 현상을 극복하고자 자본여력과 특화된 전문능력을 갖춘 대형사를 중심으로 사업자간 차별화·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부피끄형 중개전담 소형 증권사의 출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 수익구조 현황 및 시사점

이경애(연구원) | KiRi Weekly 이슈

제219호

주가부진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증권사 수익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거래대금 감소가 위탁매매수수료 수입에 부정적 요인인 것은 사실이나 위탁매매수수료 수입의 감소는 주가 부진으로 인한 일시적(cyclical) 현상이라기보다는 증권업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secular) 현상이다. 위탁수수료 수입 비중의 감소 추세는 미국·일본 등

KiRi Weekly 포커스

일본국채 위기설 평가

이상우(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71호

최근 일본의 금융시장에서 2016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경우 국채가격이 폭락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고, 무역적자의 일시적인 원인이 제거될 경우 중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현재 추진 중인 세계개혁을 통해 정부재정이 개선될 경우 국채가격 폭락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금융시장에서 제기된 국채 위기설은 국가채무 악화에 시그널을 줌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와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잠재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

김세중(선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72호

미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화당 예비후보들과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확대 방안으로 단기적인 정부지출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나, 롬니 후보는 규제완화와 같은 간접적인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국

가부채 감축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적인 재정지출 삭감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롬니 후보는 재정지출 삭감에 반대하고 공화당의 균형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현황 및 평가

이혜은(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73호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도 취약해지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손꼽히며 불안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가계대출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 가계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나, 세계경기침체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거시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가계부실이 확산되면서 복합적으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조정과 적정수준 관리를 위한 가계, 금융기관,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75호

프랑스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수립하고자 2010년 6월 3차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 연금개혁의 주요내용은 연금수급가능연령을 2011년부터 6년에 걸쳐 해마다 4개월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행 60세에서 62세로 높이고 연금기여기간을 2020년까지 41.5년으로 늘리며 완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금개혁을 볼 때 우리나라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준이율과 보험료 조정,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

김해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76호

표준이율은 책임준비금에 적용할 이자율의 상한으로서 사실상 보험료의 최저 수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가격경쟁으로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가격제인 셈이다. 따라서 표준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임에도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보험료 조정을 문제삼는 것은 가격자유화의 취지나 표준이율의

목적과 배치된다. 감독당국은 표준이율을 통한 충분한 준비금 적립과 보험료 조정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골드먼 삭스를 통해 본 금융회사와 소비자 신뢰의 문제

이승준(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77호

골드먼 삭스에서 주식파생상품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 그렉 스미스(Greg Smith)가 회사를 떠나면서 남긴 뉴욕 타임즈 칼럼 “내가 골드먼 삭스를 떠나는 이유”는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와 기업문화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금융업 종사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여 고객의 성공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 과실을 나누는 것이 금융회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공의 지름길이란 사실을 인식하여, 그 전문성을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발휘하는 기업문화를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제19차 개정 「상법」의 영향 :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를 중심으로

김경환(수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78호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기존 회사법의 틀을 상당 부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동 제도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트포드 그룹의 변액연금사업 중단 결정과 시사점

이경희(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79호

하트포드 생명보험회사는 베이비붐 세대의 중신소득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액연금에 최저중도인출금보증(GMWB)을 제공하고 이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2009년 금융위기 시 보증리스크 관리 실패로 자본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변액연금사업의 중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변액연금상품을 공급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우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보증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지니계수를 통해 본 소득불평등

최 원(선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80호

전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도 존재한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우도 지니계수 악화, 상대적 빈곤율 상승, 중위소득자 감소 등 소득불평등 지표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득불평등 심화는 중산층 약화와 빈곤층 확대라는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사회보장 개혁 방향과 시사점

이상우(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81호

일본 정부는 2012년 2월 17일 각료회의에서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 법률안을 채택하였다. 사회보장 개혁 추진은 저출산·고령화 진행됨에 따른 사회보장급부 지출 급증, 정부재정 부담 증가, 정부재정 악화와 국채발행 구조의 악순환, 정치적 압박 등이 주요 배경이다. 급변 개혁은 전면적 개혁으로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이는 한편 저소득층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급여억제와 급여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이에 대비하여 소비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사례는 인구고령화, 사회 양극화, 사회보장의 소외계층 증가, 세대간 내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 경감을 위한 관련 제도 강화 필요

기승도(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82호

매년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이 25%를 초과하는 수준(사고건수 기준 매년 약 450만 건)으로 유지되고 있어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동차 사고발생의 여러 원인들 중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는 그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현재 자동차사고발생 건 중에서 17%인 약 70만 건이 운전 중 주의분산행위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운전자가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를 할 수 있는 요인-휴대폰 보급대수 및 DMB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하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정권 교체와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기조 변화

이정환(선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83호

유로존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재정긴축 정책을 선택하였으나, 재정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욱 심각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단기적으로는 성장지원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높아졌다. 프랑스 등의 선거 결과는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감내하지 못하는 유로존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직은 독일이 주도하는 재정긴축 중심의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기조가 크게 수정되기는 이른 시기이지만, 기존의 재정긴축 목표에 대해 다소의 유연성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습관을 보험료 차등화 요소로 도입하는 방안 필요

기승도(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84호

현행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은 주행거리 총량을 감소시켜 자동차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현행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이 자동차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더욱 진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으로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활성화시켜, 운행정보확인장치(OBD)에서 얻을 수 있는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신용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과 요인

박정희(선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85호

2012년 5월 22일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A에서 A+로 두 단계 강등하였으며, S&P와 무디스도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반기에는 조정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

다. 이번 등급 강등은 일본의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개선의지가 미약하다는 경고이다. 그간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던 일본은 지난해 대지진 여파로 원전가동을 중지, 대체 에너지 수입비용이 급증하면서 향후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고령화로 인한 경제력 약화, 수출여건 개선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추가 강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필요성

송윤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86호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인 지인의 이름으로 또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이른바 명의 도용·차용 진료가 확산되고 있다. 명의 도용·차용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질병정보를 왜곡하여 진료과정에서 개인병력 혼선에 의한 오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명의 도용·차용에 의한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은 향후 피해자의 민영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 수령을 어렵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의 도용 및 차

용 관련 부당진료비의 환수책임을 도용자·대여자와 공유하도록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민영 건강·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 신설 주요내용

이상우(수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87호

일본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 및 간병 보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2012년 민영건강 및 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동 소득공제제도는 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및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과세 소득자에게 연간 6만 8천 엔 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민영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의 보완적 기능을 인정하였다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민금융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혜은(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88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3대 서민우대금융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추진하였다. 이들의 대출 실적이 양호하여 신용공급 확대를 통한 금융 비용 부담 경감과 서민대상 신용대출시장 조성 기반 확보에 기여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중

합대책,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 서민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및 영업부진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은 둔화되고 있으며, 서민금융의 대상 자격 제한으로 신용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다수의 서민들에게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민금융 문제는 금융 측면의 지원과 더불어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기반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전략

기승도(수석연구원)·이소영(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89호

자동차보험의 상품, 가격 및 채널측면에서 중국자동차보험 시장을 평가하면, 상품 및 가격이 CIRC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이들 부분에서 회사별 차별화 전략을 취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차보험에서는 채널전략(특히 채널과 연계된 가격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는 4S를 바탕으로 한 대리점 채널전략과 전화를 이용한 직판채널 전략을 어떻게 잘 구사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애자산배분 측면에서 목표기간펀드 확산이 주는 시사점

이경애(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90호

목표기간펀드(TDF, Target Date Fund)란 목표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주식 등)의 투자비중을 줄여 나가는 자산배분 패턴을 갖는 펀드로 해외의 주요 퇴직연금의 운용스타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적 차원에서 목표기간별 자산배분(target-based asset allocation)이 퇴직연금의 투자원칙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중심 투자(goal-based investing)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도 낮은 편이다. 목표기간펀드를 국내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필요성

이창우(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91호

2012년 2월 정부는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을 재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이 발생함과 동시에 모든 민간부문에 허용되었음에도 의료법은 보험회사만 외국인 환자유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 외국보험사 및 공제 등과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등에 관한 전문지식, 해외 네트워크, 관련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통감독체계 2차년도 보고서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92호

2012년 7월 2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글로벌 보험그룹 감독을 위한 공통감독체계 2차년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공통감독체계의 적용을 받는 국제적 보험그룹은 국제적 영업활동과 규모에 기반하여 결정되며, 감독자의 재량도 그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 아직 글로벌 보험그룹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없으나 장기적으로 글로벌 보험감독체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과 보험회사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93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퇴직연금 모집인제도가 도입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보험사, 증권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모집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약 32만 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적극 활용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영업경

쟁력을 보다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에 특화된 모집인 양성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법규준수에 대한 교육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계, 기업, 정부부채의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채원영(연구위원)·윤성훈(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94호

유로존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위기를 유발하는 부채수준의 임계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가계 및 기업부채가 정부부채로 이전되어 재정위기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부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OECD 주요국의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수준을 비교한 결과, 재정위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경제주체별 부채수준이 임계치를 초과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채의 증가속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수준이 임계치에 근접하고 있고 증가속도도 매우 빠르며, 정부부채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나 증가속도가 낮지 않고 향후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모바일 기술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변혜원(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95호

최근 모바일 기기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모바일 기기 사용 확대는 소비자들의 금융 소비 행태와 금융회사의 판매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판매자들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활용을 중심으로 모바일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데, 판매자, 소비자, 계약자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당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의성 없는 고지의무 위반 감소 방안

송윤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96호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악의 없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사소한 치료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실수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과 캐나다의 생명 및 건강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제출한 청약서 내용을 검토·분석한 후, Medical Information Bureau, IntelliScript, Medipoint 등을 통해 청약자의 고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피보험자의 고의성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또는 계약해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Medical Information Bureau와 유사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계층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교육 IRA 검토 필요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97호

미국은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부터 대학교육비까지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교육 IRA를 도입하여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와 연금 제도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교육 IRA를 설정하는 경우 연금 2,000달러까지 면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교육비에 사용하고 남은 적립금은 다른 형제에게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 IR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의 이전이 자유롭고 수혜자를 계좌의 이전 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자녀의 교육비부담이 노후준비 부족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빈곤층인 에듀퓨어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의 사교육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저소득계층이 미연에 교육비 재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

전용식(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98호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FY2010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과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보험산업 수익성은 과거 IMF,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보험회사들은 거시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날씨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조재린(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199호

우리나라의 날씨금융시장은 날씨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부족과 상품개발에 필요한 인력 및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및 레저산업의 성장 등 날씨리스크에 민감한 산업이 성장 추세에 있으며, 날씨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우리나라 날씨금융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 진다. 이에 날씨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험산업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재보험거래 당사자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와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송윤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00호

그동안 재보험의 국제성과 복잡성 때문에 각국은 재보험거래 당사자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소극적으로 규제하였다. 그러나 최근 주요 보험선진국에서는 계약자·출재사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 공동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중개사의 보수 지급방식, 재보험 중개사와 재보험사와의 관계, 재보험 중개사와 재재보험사와의 관계, 재보험 중개사와 재재보험중개사와의 관계 등에서 기인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및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중개사와 재보험사간 담합,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간 담합, 재보험사와 재재보험사 간 담합, 소수의 시장지배 등 재보험거래 당사자 간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보험료 카드결제 의무화 법안발의 문제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01호

미국 최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동 발의안은 보험회사의 신용카드납 인정 여부에 관해 보험회사에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 및 자동이체를 통한 결제수단은 보험계약자의 현금성 자산인데 반해 신용카드는 보험계약자의 부채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인수 여부는 신용카드 인수자의 자율적 동의하에서만 가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무시한 발의안은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에 대한 지급결제수단으로써 현금과 카드납 간의 선택 여부는 보험업법 개정보다는 이해관계자인 보험계약자, 보험회사, 그리고 신용카드회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한다.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 설립에 대한 소고

황진태(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02호

최근 들어 인터넷 활용을 비롯해 저가형 보험상품 니즈가 확대되면서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저가형 상품 제공과 가입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의 경우 종합보험회사의 신규진입은 제한적인 반면, 인터넷이나 전화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신규진입 및 영업은 사회적 편익에 따라 확대되어 왔다. 이에 유효경쟁 확대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비롯해 가입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 형태의 온라인 전용사 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U의 유니섹스 요율제도 도입을 통해 본 위험변수 및 위험세분화의 조건

송윤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03호

EU는 2012년 12월부터 성별에 의한 보험요율 및 급부의 차등화를 전면 금지한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요율 및 급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분류 시 경제적 효율성이나 집단 관점의 공정성 보다는 개인 관점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위험변수 도입을 통한 요율차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위험변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 관점의 공정성과 집단 관점의 공정성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떠한 가치에 무게 중심을 실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민영보험의 위험세분화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위험의 사회적 연대성을 어느 정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인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시장의 미래

김해식(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04호

무인자동차의 등장은 사람의 인지나 판단 및 동작의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동차의 운행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인자동차의 등장으로 보험료 규모의 정체 내지 감소와 배

상책임과 같은 자동차보험의 담보가 다른 보험종목의 담보로 대체되는 등의 자동차보험의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자동차 관련 제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자동차보험시장에 대한 미래 전망도 보다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2 글로벌 연금지수와 우리나라의 과제

이상우(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05호

호주에서 발표한 글로벌 연금지수(MMGP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종합지수 44.7점, D등급으로 조사대상 18개 국가 중에서 16위를 차지하였다. MMGPI는 국가별 공적·사적연금 시스템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을 평가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평가결과에서 우리나라는 향후 고령자·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사적연금 가입률 확대,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연금의 기능 확대, 퇴직급여제도의 일원화, 수탁자 책임 강화, 가입자와 수탁자의 커뮤니케이션, 제3자 감시기능 강화 등의 개선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도의 정치적 남용과 사마리아인 딜레마

송윤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06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허리케인 샌디가 미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허리케인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또는 대선이 피해복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재난지원제도가 사마리아인 딜레마를 초래함으로써 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도의 정치적 남용과 사마리아인 딜레마 발생을 제한함으로써 재난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무상지원제도 재검토 및 보험제도를 통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최근 논의 내용

장동식(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07호

유럽연합은 최근 은행동맹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유럽은행감독청의 기능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기능에 대한 재조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이 논의는 적용대상과 다른 연방국가 사례,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중앙은행기능 논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은행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내 보험회사들은 은행동맹에 대한 논의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일본 생명보험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박정희(선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08호

2012년 일본 생명보험의 세대가입률(간포생명 제외)은 85.8%로 1994년 95.0%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세대 가입건수는 전회대비 0.1건 감소한 4.1건, 연간납입보험료도 3.8만 엔이 줄어든 41.6만 엔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생명보험시장이 축소되는 원인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생명보험시장 포화 등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질병과 노후자금에 대한 상품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민영보험에 주로 가입하는 이 유로 질병 및 입원(59.6%), 유족보장(51.7%)을 주요 항목으로 꼽은 반면, 노후생활자금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6%에 불과해 장수리스크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자금에 대해서는 74.4%가 불안하다고 응답해 향후 노후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가입의향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1.0%로 전회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생명보험 가입률이 전년대비 1.0%p 감소한 86.3%로 나타났다으며, 주요 가입상품으로는 일본과 같이 질병보장보험(70.3%)과 사망보장보험(23.9%)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추가 가입의향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의향이 있다’

라는 응답이 35.7%로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으나, 전년대비로는 7.4%p 급감해 경제 적 여유가 부족한 상태로 보인다. 생명보험은 고령화 사회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산업인 만큼 노후소득과 질병 등에 대한 다양한 상품가입으로 늘어난 기대수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 도입 추진

장동식(수석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09호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제도(ORSA)에 대한 모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전사적 리스크관리, 리스크 중심 감독, 국제적 정합성 등을 강화하고자 한다. 협의회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ORSA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망률견인(Mortality Drag)에 대한 소고

이경아(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10호

사망률견인이란 연금상품에서 동일 위험집단(annuity pool)의 사망률위험을 결합함으로써 생겨나는 가입자 간 사망률교차보조(mortality cross-subsidy) 효과로 인해 연금가입자가 기대할 수 있는 내재적 연금수익률이다. 또한 사망

물건인은 계리적 위험을 포함하지 않은 금융상품 대비 연금상품의 보험위험프리미엄(insurance premium)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타 금융상품의 유효수익률에 비해 사망률위험으로 인한 사망물건인은 분명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나 연금수익률을 구성하는 매우 주요한 내용으로 보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칠레의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11호

칠레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연금자산의 가치 하락, 재정 악화 우려 등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사적연금 가입률을 보다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적연금제도인 기초연금 및 보충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사적연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였다. 이러한 칠레의 연금개혁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여성 및 저소득근로자의 노후불안을 해소하면서 사적연금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보험신용리스크 특징과 접근 방법

송윤애(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12호

최근 재보험산업의 높은 집중도와 재보험사 신용등급의 하향화 추세는 재보험의 상호연관성 및 재보험 스파이럴 발생가능성과 결합하여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재보험신용리스크는 집중도, 극단 의존성, 상호연관성 측면에서 일반신용리스크와 상이하므로 특별한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재보험신용리스크를 CDS를 통해 헤지하기 보다는 이를 보유하되 최소화하는 접근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재보험요율에 재보험신용리스크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CDS를 통한 위험 헤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리스크와 사이버보험

변혜원(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13호

최근 기업과 개인의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리스크도 확대될 추세이며, 기업의 정보유출 관련 배상책임도 커지고 있다. 사이버리스크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해외 사이버보험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계리데이터의 부족, 사이버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손실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 손실 계량화의 어려움 등 사이버보험 활성화의 장애

요인도 존재한다. 특히 국내에도 사이버리스크 전가 상품은 있으나 담보금액이 낮거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사이버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는 사이버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과 함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는 단계적 의무보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변액보험 펀드의 규모별 수익률과 시사점

조영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14호

변액보험 펀드는 전체의 33%가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의 소형펀드로서 규모에 따른 수익률 차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채권형 펀드의 경우 소형펀드는 대형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뚜렷이 관찰되며, 채권이 편입된 혼합형 펀드의 경우도 소형펀드가 대형펀드에 비해 평균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보인다. 변액보험 계약자는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의 유형과 순자산 규모를 확인하고, 채권이 편입된 50억 원 미만의 펀드라면 보다 큰 규모의 펀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도 계약자에게 채권이 편입된 소형펀드의 저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펀드 위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술진보에 따른 보험판매채널의 변화 방향과 시사점

황진태(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15호

최근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환경으로 국제보험시장의 확대 및 경쟁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디지털화를 비롯한 인터넷 및 모바일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디지털화와 인터넷 확대 등을 토대로 한 보험영업행위 및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상품 개발과 소비자 지향적 경영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래 보험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험산업도 인터넷 채널 등 판매채널 다변화와 관련 상품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서비스중심의 환경변화와 과제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16호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의 영향으로 단기적인 운용성과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 능력 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자의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퇴직연금 서비스 대상 확대, 퇴직연금서비스 관련 규정강화,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서비스 중심의 법률 개정이 근로자가 사업자 선정요인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은퇴설계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적극 개발함과 더불어 다른 금융기관과의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평가

김소연(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17호

2012년 10월 발표된 「재보험관리 모범기준」에서는 손해보험상품의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여부의 평가 방법으로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Expected Reinsurer Deficit)이 1% 이상일 것을 제시하고 있다. ERD는 위험(Risk)을 빈도와 심도의 곱으로 정의하고 이를 재보험료 기대치로 나눈 값이다. ERD는 기존의 위험 측정법(Risk Measure)인 VaR나 TVaR과 비교하여, 리스크를 규정하는 기준이 통계적인 백분위수가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을 고려한다는 점, 심도와 빈도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으로 인해 더 나은 리스크 측정법(Risk Measure)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 선임대리인 제도의 특징

권오경(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18호

최근 특정 리스크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영국 선임

대리인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손해보험 판매채널로 보험매개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행위규제(ICOB, 2005)를 받게 되자 보험매개자의 규모가 축소되고 선임대리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선임대리인은 보험매개자의 행위를 영업할 수 있는 자로 FSA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하고 보험매개자가 선임대리인과 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선임대리인의 행위에 모든 책임을 지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동 제도는 특정한 리스크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채널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서비스협정의 동향과 시사점

김미화(연구원) | KiRi Weekly 포커스

제219호

최근 미국은 서비스 분야 무역 장벽 제거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제서비스협정(International Services Agreement: IS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SA는 보험, 금융, 특급 운송, 통신, 전자 지급, 정부 조달, 환경 및 에너지 서비스 등의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등 20개 국가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SA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국에 대한 진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I.

FY2012 주관 행사

CEO 세미나

정책세미나

국제세미나

사원사 연구직원 및 출입기자단 세미나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기타 연구행사

Chapter 1

CEO 세미나

- 보험산업 비전 2020
- 글로벌 보험산업 Trend 및 Challenge
- 201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산업의 미래와 나아갈 길

보험산업 비전 2020

행사명 : 제36회 보험경영인 조찬회 | 주관행사

138

행사개요

- 일시 : 2012.4.17.(화) 07:30
- 장소 : 조선히텔(소공동) 2층 오키드룸
- 주제 : 보험산업 비전 2020
- 발표 : 진익 경영전략실장(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보험시장에서의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불확실성, 보험산업 사업모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금융겸업화 및 복합화 진전에 따른 금융업권 간 업무영역 조정 등 경영환경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보험산업의 성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였던 경제·사회 환경이 향후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비전을 다각도로 재점검하고 공유하기 위해 『보험산업 비전 2020』을 주제로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

현재의 경영성과(자산성장률 11.9%, ROA 0.9%)를 유지하여, 자산 규모를 2010년 수준 506조 원 대비 약 3.1배인 1,562조 원으로, 순이익 규모를 2010년 수준 6.1조 원 대비 약 2.3배인 14.1조 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보험산업 지속성장 목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투자형 영역(변액, 금리연동형, 연금, 장기손해 등)이 확대될수록 보험산업의 정체성이 약화될 것이고, 타 금융업권 유사 서비스 수준으로 보험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보다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비용부담 경감, 인플레이션 하에서 자산의 실질가치 보전 등)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소비자가 타 금융업권으로 이탈하는 호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2020년까지 자산 규모가 현 수준 대비 약 1.8배인 903조 원으로 성장하는데 그치고 순이익 규모는 약 0.3배인 2조 원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변액보험 운용성과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만족을 제고하려는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현재의 양호한 경영성과에 만족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둔감해지는 “승리의 저주(curse of success)”를 경계해야 하며, 향후 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금리연동형 상품 위주 구성이 오히려 지속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비전의 설정을 통한 보험산업 정체성 회복이 지속성장을 위한 첫 걸음이므로 금융소비자의 소득보장을 지향하는 사적 안전망 제공자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n@sure 4.0”을 지속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비전의 설정을 통한 보험산업 정체성 회복이 지속성장을 위한 첫 걸음이므로 “@sure 4.0”을 지속성장 비전으로 제시한다. 금융소비자의 불만요인인 수수료(사업비) 관련 사업관행을 개선하고, 보험산업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사업모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산업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보다 능동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장 비전으로 제시하며, 비전 실천을 위한 전략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금융소비자 행동주의가 확산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금융소비자의 불만요인인 수수료(사업비) 관련 사업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보험산업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사업모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 금융상품인 연금 영역에 주력하려는 경우, 유사 상품 간 비교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형 판매채널과 인플레이션 하 자산의 실질가치 보전을 지향하는 복합형 운용전략을 활용하여 포괄적 소득보장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사업모형 재구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전례를 참조하여 상품, 기능, 계약자 유형을 기준으로 보험업 인가업무 단위 개선, 보험자문업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적 안전망 역할을 보다 능동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 수준은 2008년 기준 GDP 대비 10.2%로 OECD 국가 평균수준인 19.2%보다 낮아 복지 확대 요구는 크지만 재정부담으로 공적 안전망 확대 여력이 제한적이다. 만약 전체 갭의 절반을 보험산업의 사적 안전망을 통해 대응한다면, 보험침투도가(수입보험료/GDP)가 2010년 기준 11.3%에서 16.3%로 상승하고 지속성장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의 민영 실업보험 사례 등을 참조하여 현재 공적 안전망이 취약한 영역(청년실업, 출산 및 육아, 고용, 소득 크레바스 등)에 대해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안전망 제공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글로벌 보험산업 Trend 및 Challenge

행사명 : 보험회사 CEO초청 조찬회 | 주관행사

140

행사개요

- 일시 : 2012.6.8(금) 7:30
- 장소 : 조신히텔(소공동) 2층 오키드룸
- 주제 : 글로벌 보험산업 Trend 및 Challenge
- 발표
 - o 발 표 : 김연희 대표(보스턴컨설팅)
 - o 사 회 : 안철경 부원장(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조찬회는 성숙기 시장으로 접어든 글로벌 보험산업을 분석하고 이에 관련한 국내 보험산업의 과제는 무엇인지 대해서 세계유수 컨설팅회사의 전문적 진단을 듣고자 기획되었다.

주 제

글로벌 보험산업의 주요 트렌드는 타금융업 대비 보험업 고유의 이점이 감소하고 보험업 내에서는 상품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경험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보험상품 추가구매의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렴한 신규채널이 주력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규제 강화로 인한 리스크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등이 성숙기 시장의 도전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서 성공적인 사업영위를 위해서는 기존 고객 및 자산의 유지가 중요해지

고 고객에 대해 제안하는 가치를 확장 및 다변화하고 채널을 고객에 맞게 다변화하며, 높아진 비용 및 복잡성에 대한 관리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국내외적인 시장성숙기를 맞이한 보험사들은 미래 위너가 되기 위해, 채널, 고객가치, 운영효율화 및 복잡성, 리스크관리 및 ALM 체계 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핵심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도 이미 시장이 정체되고 수익성도 저하되고 있어 성숙기 시장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미래 위너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이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 채널포트폴리오 재구축, 고객에게 제안하는 가치의 재정의, 운영 효율화와 복잡성 관리, 리스크관리 및 ALM체계의 재정비, 그리고 디지털환경 하에서 보험사업의 변화추구 등이 필요하다.

201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행사명 : 제37회 보험경영인 조찬회 | 주관행사

141

행사개요

- 일시 : 2012.11.15.(목) 07:30
- 장소 : 조신포텔(소공동) 2층 오키드룸
- 주제 : 201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발표 : 윤성훈 동향분석실장(보험연구원)

개최배경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며 부동산 경기, 가계부채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향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보험산업의 경우 경기에 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과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 신뢰 문제가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3년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업계 경영자, 정책 및 감독 당국자,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경제 및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주요 경영과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

2013년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2012년보다 0.4%p 상승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고 소비자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소폭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경상수지 흑자 지속,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절상될 것으로 보인다.

FY2013 보험산업은 FY2012과 마찬가지로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 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의 영향으로 생·손보 전체적으로 FY2012보다 10%p 하락한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이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저축성보험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3.8% 증가에 그칠 것이다. 보장성보험은 유지율 개선에 따른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 유지와 신상품 출시 확대로 1.4%, 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 회복 지연과 FY2012 성장을 이끈 제도변화의 효과 소멸로 5.0%, 단체보험은 퇴직연금의 안정적 성장세로 5.3% 성장할 것이다.

한편,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이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여 원수보험료가 10.3% 증가할 것이다. 종목별로는 장기손해보험이 저축성보험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12.1% 증가하고, 연금부문은 노후대비 수요 증가, 마케팅 측면에서의 세제 혜택 부각

FY2013 보험산업은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p 하락한 6.5% 성장할 것이며, 생명보험은 3.8%, 손해보험은 10.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FY2013 보험산업의 경영과제로 ① 기회요인으로서 인구고령화, ② 신성장동력으로서 보유 및 출재 역량 강화, ③ 저금리 환경하의 시나리오 경영, ④ 저금리 환경하의 자산운용 전략 수립, ⑤ 소비자보호에 대한 적극적 인식 확대와 보험회사의 사업 관행 혁신을 제안한다.



등으로 16.1% 증가할 것이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내수시장 부진,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 등으로 2.8%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다. 일반 손해보험은 경제성장을 하락 등으로 FY2012와 유사한 7.9%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라는 시장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신뢰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FY2013 보험산업의 경영과제로서 성장성 측면에서는 ① 기회요인으로서 인구고령화, ② 신성장동력으로서 보유 및 출재 역량 강화, 저금리에 대한 대응으로는 ③ 저금리 환경하의 시나리오 경영, ④ 저금리 환경하의 자산운용 전략 수립, 그리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⑤ 소비자보호에 대한 적극적 인식 확대와 보험회사의 사업 관행 혁신 등 다섯 가지 경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영건강보험의 수요확대와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적연금시장의 성장 추세를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재보험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해 기존의 위험회피 목적의 과도한 출재전략에서 탈피, 보유 및 출재 역량을 강화하여 재보험을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자본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자산·부채의 예

상위험을 전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금리는 보험회사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금리 시나리오하에서 자산 및 상품구성에 예상되는 위험을 전사적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저금리 환경하에서 다양한 금리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부채 가치의 상승을 만회하기 위해 위험자산의 비중을 급격히 늘릴 수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소비자 신뢰, 소비자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므로 보험회사가 생존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하여 법규준수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が必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들의 경영 시스템과 관행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보험산업의 미래와 나아갈 길

행사명 : 보험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 명사초청 간담회 | 주관행사

143

행사개요

- 일시 : 2012.11.27.(화) 11:00
- 장소 : 프라자호텔 오키드홀
- 주제 : 보험산업 진단 및 미래 비전 제시
보험연구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참석자(총 14명)
 -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좌장)
 -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
 - 문제우 손해보험협회 회장
 - 신용길 교보생명 사장
 - 서태창 현대해상 사장
 - 나동민 농협생명 사장
 - 김병주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 오창수 한양대학교 교수
 - 이봉주 경희대학교 교수
 - 정지원 금융위원회 국장
 - 이윤수 금융위원회 과장
 -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위정환 매일경제신문 금융부장
 - 이익원 한국경제신문 금융부장

개최배경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험산업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저성장·저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금융에 대한 불

신이 높아져 소비자보호와 소비자신뢰 회복이 보험산업 지속성장의 중요한 경영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저축성보험 위주로 성장하여 왔으나 겸업화가 진전되고 다른 금융업권의 상품과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어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비자중심경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또한 금융산업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보험산업의 향후 비전과 역할에 대해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개원 2주년 기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토론내용

간담회 참석자 모두는 저성장·저금리 장기화가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IFRS 등 회계제도 변화와 최저보증리스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인해 보험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으며, 이차역마진 확대와 더불어 IFRS Phase II가 도입되면 책임준비금,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쳐 생·손보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에서는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을 위험물차와 사업비차익으로 보완하는 방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학계 및 정책감독당국, 언론사 명사 13인이 보험산업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보험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 2년간 보험연구원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보험산업의 현안에 대한 선제적이고 시의성 있는 연구와 함께 연구의 객관성 및 중립성 확보를 것을 요구하였다.



법이 최선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책·감독당국에서는 저금리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인식 및 공유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내년 정책목표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금융산업의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소비자만족은 보험산업 지속성장의 필요조건이며 소비자신뢰 하락은 생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참석자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였다. 정책·감독당국의 경우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신자유주의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신뢰 회복을 통해 보험산업 성장과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보험회사의 소비자신뢰 제고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지 못한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업계와 유관기관에서는 소비자신뢰 하락이 보험산업의 특성과 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보험산업의 미래비전에 대한 토론에서는 보험산업의 성장 과정에 대한 소회, 향후 성장 가능성 및 성장동력 그리고 보험 산업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보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구조 고령화와 관련된 보험산업의 청사진이 필요하고, 그 동안의 관행과 문화도 타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업계는 국내 보험시장이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노후대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상품의 개발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유관기관의 경우 보험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여 보험이 보험답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과 사회안전망 구축은 보험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감독당국에서도 향후 확대될 복지수요를 보험산업의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보험연구원에 바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보험업계의 현안에 대해 시의성 있고 선제적으로 이슈를 선점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외부와 소통하는 과정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의 현안을 선제적·주체적으로 수행해주기 바라며, 특히 회원사의 경영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외 보험산업의 경험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타금융업권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연구결과의 가치와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Chapter 2

정책세미나

-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 현안과 과제
- 변액연금의 소비자보호 강화방안과 상품기능 개선방안
- 캡티브 도입 및 운영방안
- 소비자 중심의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
- 보험과 통계
- 날씨보험 활성화 및 기상·기후산업과의 연계방안
-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방안
- 저금리시대, 보험산업 영향과 과제
-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종보험대리점 도입방안
- 보험정보 집중체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 현안과 과제

행사명 :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세미나 | 주관행사

146

행사개요

- 일시 : 2012.5.3.(목) 13:3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빌딩 그랜드홀
- 주제 :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 현안과 과제
- 발표 및 토론
 - o 개회사 :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
 - o 사회 : 정호열 교수(성균관대)
 - o 제1주제 : 보험소비자 보호 : 현안과 과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 o 제2주제 : 보험사기 방지 : 현안과 과제
(박세민 고려대 교수)
 - o 제3주제 :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대책 조화방안
(송운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o 토론 : 이운수 보험과장(금융위원회)
안형준 수석검사(서울지검)
한기정 교수(서울대)
김재훈 상무(생명보험협회)
이용주 박사(삼성화재 보험금융연구소)
이진수 박사(수원시정연구원)
조연행 부회장(금융소비자연맹)
위정환 금융부장(매일경제)

개최배경

강력 범죄를 동반한 보험사기가 빈번해지고 그 수법도 점차 지

능화·전문화·조직화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 도입과 소비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추세로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보험사기 방지 대책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조사권 및 개인정보 활용 확대방안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소비자 보호문제와 상충하는 등 보험사기 방지대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 조정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보험사기 핵심이슈인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를 주제로 이해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첫 번째 발제자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바라본 보험사기의 법적 관점”에 대해 발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은경 교수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보험소비자 보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대응하여 계약을 전면적으로 무효로 하거나 보험자의 전체적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부당청구부분만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모집인의 사기적 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험모집인의 사기적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모집인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인보험에도 피보험이익을 요구하여야 한다.

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모집인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대리점의 권한이 보험자와 보험대리점과의 수권계약에서 정해지는 경우 구체적인 수권계약의 내용을 예견하지 못하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현행 상법상의 보험자의 약관 교부 및 명시 의무만으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자에게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약심사 전문인력 육성과 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보험사기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며, 보험가입정보의 공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보험이력에 대한 정보접근 범위 및 방법 등에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공개하되, 중앙정보시스템을 운용하여 중앙의 특정기관에서 통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주제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의 개선책에 대한 고찰”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고려대학교 박세민 교수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특별법에서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개념 정립과 범위, 처벌규정,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요원에 대한 일정 범위 내의 조사권 부여, 보험사기 방지 전담기구, 정보교환 및 공유시스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상법상의 보험계약 해지권 외에도 민법상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상법 제663조 위반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에 대한 취소권 관련 조문을 상법 보험편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복보험과 관련하여 동일한 목적물이나 동일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총액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인보험에도 피보험이익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험업법에 금융위의 사실확인요청권 또는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금감원에 출석요청권 부여, 관련 공공기관 간 공조 및 정보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보험회사의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보험회사의 정보접근성 확대 등 보험사기 적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

보험회사 간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정보공유 허용 등 보험사기 조사체계가 재구축되어야 하며,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은 소비자권익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보험회사도 보험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인수심사 단계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3주제 세 번째 발제자로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조화방안”을 발표한 송윤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보험사기가 개인 또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점, 보험사기의 피해가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전체에 미친다는 점, 그리고 보험사기와 소비자 보호 간 상충관계가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사기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기는 사회구조적 문제의 산물이며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법제를 통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먼저, 보험사기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재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보험회사 간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정보공유 허용, 보험회사의 사기혐의 입증을 위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의

조건부 허용, 금융위원회 행정조사권 강화, 금융위원회 자료제공요청권의 실효성 확보가 주요 과제이다. 옵트아웃 방식은 소비자가 개인 보험정보 공유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는 옵트인(Opt-in) 방식의 반대 개념이다.

또한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은 소비자권익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클레임 처리에 대한 규정을 보험업법에 신설하여 보험회사의 불공정 클레임 관행 및 합리적인 사고조사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소비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일부 희생하고 정부는 감독 및 수사자원을 추가 배분하는 만큼, 보험회사도 보험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인수심사 단계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회사에 인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실질적 동의 확인의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및 수익자 변경에 대한 주의 의무, 보험사기 발생 관련 보험회사의 부주의 및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피보험자 보호 의무 규정을 보험업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변액연금의 소비자보호 강화방안과 상품기능 개선방안

행사명 : 소비자 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세미나 | 주관행사

149

행사개요

- 일시 : 2012.5.18.(금) 09:30
- 장소 : CCMM빌딩 코스모홀 (1층)
- 주제 : 변액연금의 소비자보호 강화방안과
상품기능 개선방안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대식 원장(보험연구원)
 - 제1주제 : 변액연금의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변액연금의 상품기능 개선방안
(이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김재현 교수(상명대학교)
안치홍 대표(밀리만코리아)
이윤수 보험과장(금융위원회)
이익원 금융부장(한국경제신문)
정세창 교수(홍익대학교)
진태국 보험계리실장(금융감독원)
홍원구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개최배경 변액연금보험은 노후의 불안정한 소득에 직면할 생존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적립 기간 동안의 사망위험도 보장하며 10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므로 소비자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데 적합한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변액

연금보험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생명보험 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변액연금보험을 둘러싼 논란은 소비자 인식 저하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변액연금보험은 금융상품 중 소비자민원이 가장 많은 상품, 실효수익률이 인플레이션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소비자가 지불할 가격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소비자 성향에 맞지 않는 판매, 판매 과정의 부족한 설명 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제기된 바 있다.

수익률 논란에서 촉발된 변액연금보험의 상품 선택에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 공시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 사업비 후취 및 다양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설계 개선을 통하여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제1주제 발제자로 “변액연금의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한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은 변액연금과 관련된 소비자보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변액연금은 위험보장과 펀드 투자기능이 복합된 보험상품으로 투자책임을 계약자가 부

변액연금이 일반 펀드투자와 다르다는 특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편하여 시장규율을 유도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 등의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판매관행도 개선하여야 한다.

답하고 예금보험에서 보호되지 않는 것이 펀드와 공통점이다. 그러나 펀드와 변액연금은 위험보장, 연금지급, 세금혜택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변액연금이 일반 펀드투자와 다르다는 특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변액연금은 펀드투자를 통하여 연금재원을 마련하므로 적립금의 변동이 클 수 있으나, 사망보험금과 연금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있어 납입보험료의 원본손실을 보전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변액연금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그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러한 변액연금이 지닌 복합적인 특성을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을 제고시키는 보험회사의 노력이 현재의 변액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인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만 납입보험료는 펀드투자 이외에도 위험보장에 따른 비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펀드투자수익 이외에 위험보장가치를 계량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공시할 때는 위험보장 정보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필수이다.

셋째, 소비자 중심으로 공시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시방식은 정보가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상품 간 차이를 한 눈에 파악하기 곤란한 형태이다. 정보공시는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상품 간 특성을 비교하기 쉽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판매 시 적합성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변액연금 상품에 적합한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권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투자 시 유리한 변액연금과는 맞지 않는 단기투자 성향의 소비자에게는 대안상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2주제

한편, 제2주제 발제자로 “변액연금의 상품기능 개선방안”을 발표한 보험연구원 이경희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이 소비자 행동주의 대두와 확산, 공시제도의 강화 등 소비자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보험회사도 변액연금의 상품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구체적 방

소비자의 유지 기간에 따라 사업비 선취가 유리할 수도 사업비 후취가 유리할 수도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품 기능을 개선하여야 하며,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화하여 위험보장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변액연금을 노후 대비 자산형성 및 연금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에 집중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선취방식의 사업비를 부과하는 상품 이외에 후취방식으로 사업비를 부과하는 상품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선취방식은 장기유지 시 사업비 부담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에 사업비 부담을 회피하고 투자 수익을 높이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위해 후취상품을 병행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후취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경영 인프라 구축과 계리 및 회계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다. 또한 현재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최저적립금보증(GMAB)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후 대비 자산형성 및 연금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에 집중하여 판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 투자 목적의 소비자는 목표시장에서 배제할 때, 완전판매가 가능하며 가입 이후 소비자 만족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채널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변액연금 판매를 위한 교육 및 관리 조직(wholesaler)의 육성도 필요하다.

둘째, 변액연금이 여타 투자상품 대비 강점을 갖는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금개시 후에도 투자수익을 향유하면서 종신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변액연금이 고령화·장수위험에 처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의 제고가 수반되어야

캡티브 도입 및 운영방안

행사명 : 리스크관리학회-보험연구원-제주자치도 공동세미나 | 주관행사

152

행사개요

- 일시 : 2012.5.31.(목) 15:00
- 장소 : 보험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 : 캡티브(자가전속보험) 도입 및 운영방안
- 발표 및 토론
 - 인사말 : 오창수 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
 - 환영사 :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 사 회 : 이근창 교수(영남대학교)
 - 제1주제 : 캡티브 도입 및 운영모델(제주금융포럼 김준호 위원, 김은갑 교수)
 - 제2주제 : 보험업 진입형태 다양화 방안-캡티브규제를 중심으로
(이기형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
 - 토 론 : 오영수 박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유지호 경영기획실장(보험개발원)
이상현 특별자치과장(제주특별자치도)
이순재 교수(세종대학교)
전남득 상무(대한재보험)
정중영 교수(동의대학교)
제종옥 사무관(금융위원회)

개최배경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보험회사인 캡티브가 리스크관리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편리성, 법률, 회계 관련 서비스 및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세계화하고 제주도를 국제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캡티브(자가전속보험) 도입과 활용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제1주제인 '캡티브 도입 및 운영방안' 발표자인 김준호 위원(제주금융포럼)과 김은갑 교수(이화여대, 제주금융포럼)는 2009년 기준으로 세계 1,500대 대기업 중 53%가 기업 캡티브를 설립·운영 중이며, 연간 보험료 규모도 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캡티브를 통한 해외기업의 보험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국내 보험 영업의 형태를 보존하며 재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기업에는 원보험 캡티브를 허용하나 국내기업은 재보험 캡티브만을 허용한다는 원칙하에, 1단계는 해외기업, 2단계는 국내기업 및 공제기관을 대상으로 캡티브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캡티브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해외기업의 보험유치가 가능하고 캡티브를 통한 재보험 참여로 국내보유율 확대가 가능하며, 공제 등 유사보험기관의 캡티브 설립을 유도하여 유사보험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중인 제주도를 캡티브지역으로 육성하는 경우 10년간 총 1,945억 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국내 보험 영업의 형태를 보존하며 재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기업에는 원보험 캡티브를 허용하나 국내 기업은 재보험 캡티브만을 허용하여야 한다. 소규모 보험회사나 캡티브 등 대체적인 리스크 전가시장 조성을 위해 특수보험업을 별도 정의하고, 설립허가요건과 건전성규제범위를 완화하고, 영업종목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주제 제2주제인 「보험업 진입형태 다양화 방안 : 캡티브규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이기형 금융정책실장(보험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1963년 보험업법 제정 이래 보험업의 진입형태(legal form)를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로만 한정하여 캡티브보험 등과 같은 대체위험전가시장(Alternative Risk Transfer)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높은 리스크 전가비용과 일반손해보험 상품혁신 부족, 보험업을 이탈한 유사보험업의 확대 등 부작용이 초래되었으므로 보험업의 다양한 진입형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보험회사나 캡티브 등 대체적인 리스크 전가시장 조성을 위해 특수보험업을 별도 정의하고, 설립허가요건과 건전성규제범위를 완화하고, 영업종목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소비자 중심의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

행사명 : 보험연구원-한국리스크관리학회 공동세미나 | 주관행사

154

행사개요

- 일시 : 2012.7.13.(금) 15:00
- 장소 :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층 코스모홀
- 주제 : 소비자 중심의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오창수 교수(한양대학교)
 - 축 사 :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 사 회 : 허연 교수(중앙대학교)
 - 제1주제 : 공공성 측면에서 본 민영의료보험의 역할(김현수 순천향대 교수)
 - 제2주제 : 민영의료보험의 정책방향(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 제3주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방향(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김기성 상무(생명보험협회)
김성태 교수(연세대학교)
김정동 교수(연세대학교)
김창호 박사(한국소비자원)
박민수 과장(보건복지부)
박종화 이사(손해보험협회)
이운수 과장(금융위원회)
이익원 부장(한국경제신문)

개최배경

실손의료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공적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본인부담액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2012년 3월 기준 약 2,600만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의 민원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영의료보험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순천향대 김현수 교수는 ‘공공성 측면에서 본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은 공적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체계를 기초로 운영되고, 공적보험을 보충해 국민의 건강리스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민영보험보다 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민영의료보험은 의료 약자의 접근성과 상

민영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을 보충해 국민의 건강리스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공공성이 요구된다. 민영의료보험의 공공성 개선을 위해 현행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높은 공공성을 요구하는 국민 민영건강보험상품과 타 민영보험과 동일한 일반 민영의료보험상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의료 실비를 보장하는 단독상품을 마련하고 표준가격제 도입, 상품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개선해야 한다.

품 비교 용이성, 적정한 보험료 수준 및 손해율,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공공성을 강화한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의료보험의 공공성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높은 공공성을 요구하는 국민 민영건강보험상품과 타 민영보험과 동일한 일반 민영의료보험상품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선택권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을 벤치마킹하여, 국민민영건강보험에 부합하는 표준상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험회사는 국민민영건강보험을 단기 경영전략보다 장기적인 국민 의료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가입자의 욕구 충족과 함께 공공성 차원에서 소비자 접근성, 합리적 선택 및 적절한 손해율을 고려하고, 보험가입자가 인식하는 보장범위와 보험계약상 보장하는 범위의 괴리를 축소해야 한다.

한편, 정책당국은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 차단 및 지급보험금 감시, 민영의료보험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제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상호연계성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영의료보험의 정책방향’ 주제발표에서 실비를 보장하는 단독상품을 마련하고 표준가격제 도입, 상품공시 강화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건강보험의 유형은 중복형, 대체형, 보완형, 보충형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완·보충형으로 공보험 보장 이외의 부분을 보장한다. 국민의료비재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총 의료비 중 공공부문 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개인부담 비중이 높아 민영건강보험의 필요성 및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실손보험의 문제점은 상품 가입 시 실비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실비보장만 가입할 수 없는 점과 타 담보와 연결되어 있어 비교해서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초기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인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과장하거나 해지나 재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함 보험사기도 많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비만 보장하는 단독 상품이 나와야 하고, 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해 갱신 주기나 보장 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비급여를 급여화해 비급여 의료

제2주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김대환 고령화연구실장은

비급여를 급여화해 비급여 의료를 관리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코드화해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생애 의료비 중 65세 이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하는데도 고령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정 소득이 있는 젊은 시기에 보험료를 적립한 후 노후에 의료비로 쓸 수 있는 노인 의료비 보장보험 도입이 필요하다.

를 관리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코드화해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제3주제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민영 의료보험의 발전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재정 부담으로 보장률이 저조하고 보장범위 확대도 노인의료비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으며, 국민건강보험이 65세 이상자의 의료비를 충당하는 부분은 60%에 그치고 있다. 또한, 육체적·정신적 활동에 제약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174만 명에 이르지만 이중 보장대상은 18.6%인 32만 명에 불과하다. 특히, 생애 의료비 중 65세 이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하는데도 고령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정 소득이 있는 젊은 시기에 적립한 후 노후에 의료비로 쓸 수 있는 노인 의료비 보장보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노인의료비보장보험은 의료비 사각지대를 완화해 고령화를 대비하고 공제액 이하 의료비를 적립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과잉의료이용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장대상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임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비 구조를 적용해야한다. 보험회사에서도 사업비 후취상품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진료비 청구도 소비자가 병원에 의료비를 직접 지급한 후 요양기관이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보험자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진료비 청구체계인 ‘제3자 청구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험과 통계

행사명 : 보험통계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주관행사

157

행사개요

- ☐ 일시 : 2012.8.28.(화) 13:30
- ☐ 장소 : 보험연구원 대회의실(12층)
- ☐ 주제 : 보험과 통계
- ☐ 발표 및 토론
 - o 사회 : 하형태 교수(가천대학교)
 - o 주제
 1. Credibility and Phase-type Distributions(David Stanford,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교수)
 2. Credibility Theory Based on Trimmed Data(김현태 연세대학교 교수)
 3. 실손의료보험의 가격 결정구조와 비용분담기 법 적용에 관한 연구(정성희 박사, 삼성화재)
 4. The Proper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Deficit in the Delayed Renewal Risk Model(김소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5. Computation of the Aggregate Distribution of a Maximal Markov Sequence(조재훈 영남대학교 교수)

개최배경

보험통계 관련 최신 이론을 보험업계와 공유하고, 보험통계 분야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자 가천대학교 경상대학과 함께 보험통계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It is well-known in the field of greatest accuracy credibility theory that exact credibility occurs when the model distribution in question is a member of the linear exponential family of distributions. That is, the Bayesian premium, which is the optimal premium on a mean squared error basis, reduces in form to the traditional Bühlmann credibility premium, which is a simple linear mixture of the sample average and the manual premium.

The present work considers greatest accuracy credibility theory in the context of phase type distributions, which are widely used to model phenomena in insurance, queues, and other areas of applied probability. Only a small subset of phase-type distributions belong to the linear exponential family, and in general, exact credibility does not arise in such a context. We determine both the Bühlmann credibility premium and the Bayesian premium, and shown that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credibility premium is close to the Bayesian premium. Numerical examples will be presented to illustrate these points.

제2주제

The classical credibility theory proposed by Bühlmann has been widely used in general insurance applications. In

해외 선진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Pricing 시점에서 활용되고 있는 언더라이팅 정보 활용 매카니즘, 할인·할증 시스템에서의 위험흡수방식, 그리고 Deductible, Copayment, Coinsurance, Benefit Limits, Coordination of Benefits(COB) 등 비용분담(Cost-Sharing)에 대한 다양한 옵션 운영 방식과 최근 추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this paper a credibility theory developed from trimming the loss data is proposed. The proposed theory contains the classical credibility theory as a special case and is based on the idea of varying the trimming threshold level to investigate the sensitivity of the credibility premium.

제3주제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이 보험상품에 내재된 위험과 이에 대응하는 수익 간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품의 경우, 판매 시점 시 예상치 못한 위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격 결정 구조 내에 정교한 변동성 흡수장치(Cost Control Components)를 장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Pricing 시점에서 활용되고 있는 언더라이팅 정보 활용 매카니즘, 할인·할증 시스템에서의 위험흡수방식, 그리고 Deductible, Copayment, Coinsurance, Benefit Limits, Coordination of Benefits(COB) 등 비용분담(Cost-Sharing)에 대한 다양한 옵션 운영 방식과 최근 추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기법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리적, 통계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제4주제 The main focus is to extend the analysis of ruin-related quantities

to the delayed renewal risk models. First, the background for the delayed renewal risk model is introduced and a general equation that is used as a framework is derived. The equation is obtained by conditioning on the first drop below the initial surplus level. Then, we consider the deficit at ruin among many random variables associated with ruin. The properties of the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proper deficit are examined in particular.



제5주제 We introduce a computational method for the aggregate distribution of dependent random variables with Markov property. To achieve Markov property, a pool of risks is decomposed into disjoint maximal Markov sequences. For numerical examples applying this method, copulas are used.

날씨보험 활성화 및 기상·기후산업과의 연계방안

행사명 : 날씨보험 활성화 심포지엄 | 주관행사

159

행사개요

- 일시 : 2012.9.6.(목) 14:00
-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
- 주최 : 기상청
- 주관 : 국립기상연구소, 보험연구원
- 주제 : 날씨보험 활성화 및 기상·기후산업과의 연계방안

□ 발표 및 토론

- 개최사 : 권원태 국립기상연구소장
- 축 사 :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 사 회 : 이창수 교수(숭실대)
- 제1주제 : 날씨·기후변화의 영향과 산업
(김백조 국립기상연구소 과장)
- 제2주제 : 날씨보험 시장의 현황과 전망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제3주제 : 날씨보험 시장확대를 위한 기반
연구(이영미 에코브레인 대표)
- 토 론 : 제종옥 사무관(금융위원회)
이동일 과장(기상청)
이준행 교수(서울여대)
황진태 연구위원(보험연구원)
박홍규 팀장(현대해상)
임문재 대표(비건)

개최배경

날씨는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기후현상으로 국민의 재산 및 산업계의 경제적 손실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급격한 날씨·기후변화에 의한 기업과 민간의 손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날씨보험 활성화 및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상과 보험의 협력과 융합을 기반으로 국내 날씨보험 시장 확대와 관련 기상·기후산업 발전을 함께 모색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제1주제

국립기상연구소 김백조 정책연구과장은 ‘날씨·기후변화의 영향과 산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의 2011년 홍수, 뇌우, 폭설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액 627억 달러(약 75.2조 원) 중에서 보험손실(insured loss)이 339억 달러(약 40.7조 원)로 54%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기상재해로 발생한 피해액 7,942억 원(재해연보, 2012) 중에서 날씨관련 보험(풍수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날씨보험)으로 지급된 보상액은 478억 원(손해보험협회)으로 불과 6%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3,700억 달러(약 444조 원) 중 보험손실

급격한 날씨·기후변화에 의한 기업과 민간의 손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날씨보험 활성화 및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기상과 보험의 협력과 융합을 기반으로 국내 날씨보험 시장 확대와 관련 기상·기후산업 발전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이 1,100억 달러(약 132조 원)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날씨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기술을 발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제2주제 보험연구원의 조재린 박사는 ‘날씨보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서울지역의 7~9월 냉방도일(CDD: Cooling Degree Days)에 관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평균 CDD보다 낮은 기준지수 세 사례(450, 450, 400)들에 대해 지수한도를 각각 350, 400, 350으로 두고 최대지급보험금을 1억 원, 5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정하였을 경우, 납입보험금이 최대 230만 원에서 최소 29만 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수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지수개발을 위해 기상전문가와 지속적인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제3주제 (주)에코브레인 이영미 대표는 ‘날씨보험 시장확대를 위한 기반연구’ 주제발표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날씨보험과 관련하여 코리안리서치와 공동으

로 설문조사(민·관·학 165개 기관, 274명, 24개 설문문항)한 결과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적정 날씨보험료로 소속 기업 매출액 대비 2% 미만을 선호(64.2%)한 반면, 적정보상 범위는 피해액 대비 40~80%로 응답(61%)하였다. 그러나 설문응답자 중 66.1%가 여전히 날씨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양한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패널토론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의에서는 기상청, 금융위원회, 보험연구원, (주)비건, 현대화재해상보험 등 관련 기관·학계·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시대, 날씨보험의 역할”에 대해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기상·기후산업과의 연계된 날씨보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상분야는 민간 기상산업자와 함께 다양한 날씨보험지수 개발, 위험기상 손해사정 기준 정립, 기상재해 피해 추정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보험분야에서는 계약자 니즈에 맞는 지수개발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한 상품설계를 위하여 기상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방안

행사명 : 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 공동세미나 | 주관행사

161

행사개요

- 일시 : 2012.11.29.(목) 14:00
- 장소 :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1층)
- 주제 :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방안
- 발표 및 토론
 - 환 영 사 :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 기조연설 :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사 회 : 이순재 교수(세종대학교)
 - 제1주제 :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의 역할(진익 보험연구원 경영전략실장)
 - 제2주제 :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제고방안(권순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
 - 토 론 : 강신욱 박사(보건사회연구원)
권순찬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
김지한 박사(사회적기업포럼)
김현수 교수(상명대학교)
김기성 상무(생보협회)
이석호 박사(금융연구원)
박광춘 상무(손보협회)
함준호 교수(연세대학교)
홍은주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최남수 보도본부장(머니투데이방송)

개최배경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보험과 사보험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은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기능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모색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경제민주화 흐름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지속되고 공·사안전망의 연계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 보험산업은 사적안전망 역할 확대를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안전망 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약 4.8~9.7%p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를 통해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GDP)가 현재의 약 11.6%에서 약 15~20%까지 상승하고, 보험산업 규모는 현 수준 대비 약 1.5~2배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안전망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확대와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적으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임계수준(80~100%)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적용대상, 보장범위, 보장수준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생산적인 사회안전망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험산업은 사적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상품의 복지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장점인 공공성과 민영보험의 장점인 감시기능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민영보험(social-private insurance)”을 도입하여야 한다.



민주화가 지향하는 “결과의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금융산업으로 다양한 보장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공적 안전망을 보충적·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저축·투자의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장점인 공공성과 민영보험의 장점인 감시기능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민들의 부담비용 대비 보장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독점 형태의 사회안전망 가입·전달체제를 관리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고위험·저소득 취약계층이 보험산업의 사적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공성 요건을 설정하는 “사회적 민영보험(social-private insurance)”을 도입하여야 한다.

제2주제 보험산업이 우리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성장잠재력도 있지만 복지기능 수행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보험사 간 차별성 없는 사업모델, 대주주와의 불건전 거래관행으로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이 취약하며, 사업비 의존적인 수입구조, 저축·투자형 상품판매 집중, 공급자 중심의 판매관행, 소비자 보호인식 미흡 및 방카슈랑스·GA대리점 의존도 심화 등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저하의 주요 원인이다. 또

한, 보험상품의 복지기능이 미흡하여 장기 유지율이 낮으므로 보험의 본질적 기능인 장기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상품의 복지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 모집채널 및 자산운용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영진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장기 안정 성장 위주의 경영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비차 위주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신계약 유치보다는 기존계약을 장기 유지시키는 AS 위주의 영업전략으로 전환하는 등 Push Marketing에서 Pull Marketing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불완전판매 근절, 보험상품 공시 확대 및 보험금 지급의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경영시스템도 구축하여야 한다.

보험 고유기능인 보장성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여 타 금융권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공적 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상품 및 사업비 후취형 상품 등 국민복지형 보험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 특히, 암 등 빈발성 질병과 상해 및 연금담보를 조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이렉트 채널로 적극 판매하고,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장수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의 복지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저금리시대, 보험산업 영향과 과제

행사명 : 보험산업 출입기자단 워크숍 | 주관행사

163

행사개요

- 일시 : 2012.12.5.(수) 14:00
- 장소 : 예금보험공사 대강당
- 주제 : 저금리시대, 보험산업 영향과 과제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김대식 원장(보험연구원)
 - 축 사 : 김석동 위원장(금융위원회)
 - 사 회 : 오창수 교수(한양대학교)
 - 제1주제 : 미국/일본 보험사의 저금리 영향과 대응사례
(안치홍 밀리먼컨설팅 한국대표)
 - 제2주제 : 저금리 현상에 따른 보험산업 현황 및 과제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김종선 상무(현대해상)
남창경 상무(한화생명)
노병운 상무(보험개발원)
성주호 교수(경희대학교)
신승현 위원(하나대투증권)
정지원 국장(금융위원회)
권순우 기자(머니투데이)

개최배경

저성장·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보험회사의 이차역마진이 확대되고, 보험수요 위축과 운용수익률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이차역마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금리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1주제 밀리먼컨설팅 안치홍 한국대표는 미국과 일본 보험회사의 저금리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7개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하였다. 버블 붕괴기 급작스러운 자산 부실에 따른 일시적 부담과 이후 저금리기의 보험상품의 마진 감소에 의해 장기적인 부담이 발생하였다. 일본은 6% 이상의 고금리가 형성된 시기가 거의 없었으며 순보험료식 준비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적어 버블의 붕괴로 인한 자산 부실이 파산의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보험회사는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을 보험영업 마진으로 상쇄하는데 주력하였다. 판매채널의 효율화로 사업비를 절감하였으며, 보증이율의 인하와 보험료 인상, 가격경쟁 완화,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 등 상품혁신으로 이차역마진을 극복하였다.

미국도 1980년대 후반부터 저금리가 장기화되

보험영업 측면에서는 상품구성을 다양화하여 보장성 상품 비중을 높이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유배당 상품의 판매도 활성화하여야 한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유지하되 수익 다변화와 병행하여 회사채와 해외채권 등 부채중심 투자를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금리위험 해지를 위한 파생상품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이차역마진으로 1991년 81개 보험회사가 파산한 바 있다. 미국 보험회사는 정교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로 리스크관리에 뛰어나 상대적으로 금리리스크의 영향이 미미하였다. 전통형 상품의 마진 축소를 변액보험 판매 활성화로 보완하면서도 변액보험의 보증리스크 감소를 위해 상품디자인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안치홍 대표는 저금리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상품의 수익성이 감소하여 재무상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것이라며 사업비 절감과 사차익 확보로 마진 하락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제2주제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은 과거에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상품이 생명보험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지금까지는 자본계정의 투자수익을 통해 금리역마진을 보전하고, 금리연동형 보험과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상품구성을 조정하여 준비금 부담금리를 낮추어 왔다. 현행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저금리가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나, 위기상황을 상정할 경우 수익성이 크게 훼손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전사적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금리가 반등할 경우 이차역마진이 줄어들고 그 지속 여부에 따라 이차역마진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으

나,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낮으므로 적극적인 저금리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저금리가 지속되면, 이차역마진이 확대되면서 자본계정 투자수익과 보험영업이익을 통한 역마진 보전이 한계에 달해 이차손이 발생하고 당기손익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현재보다 1% 포인트 이상 하락하여 그 수준이 지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일부 보험사는 당기손실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영업 측면에서는 상품구성을 다양화하여 보장성 상품 비중을 높이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유배당 상품의 판매도 활성화하여야 한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유지하되 수익 다변화와 병행하여 회사채와 해외채권 등 부채중심 투자를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금리위험 해지를 위한 파생상품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건전성감독 강화와 시장의 저금리 대응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준비금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보험회사의 여력에 맞춰 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준비금 적립에 적용되는 표준이율이 시중금리 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파생상품 활용과 관련된 규제와 해외채권 매입에 관한 규제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험상품의 현장판매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판매채널의 명확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단종보험대리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업과 연계된 보험대리점 등록 시 해당 요건과 시험 및 교육이수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영업행위규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다른 판매채널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보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은 실질적인 보험판매가 보험계약자인 제조회사 또는 유통업자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판매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를 관리 및 소비자보호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의 현장판매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판매채널의 명확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는 해당 제조회사 또는 판매업자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현행 무허가 성격의 보험판매 행위를 기존의 모집질서에 맞게 양성화하자는 취지이다. 한편, 이러한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시 판매 책임성 강화 외에도 기존 전업보험대리점보다

저렴한 보험상품 제공, 가계성 일반보험 활성화, 보험시장영역 재정립 등도 기대되고 있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본업과 연계된 보험대리점 등록 시 해당 등록요건과 시험 및 교육이수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은 단말기보험, 제품보증연장보험, 배상책임 종합보험, 결혼보험, 동산종합보험, 골프보험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영업행위규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정보 집중체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사명 :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체계 효율화 방안 세미나 | 주관행사

167

행사개요

- 일시 : 2013.01.21.(월) 15:00
- 장소 : 여의도 CCMM빌딩
- 주제 : 보험정보 집중체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발표 및 토론
 - 환영사 :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 사회 : 정호열 교수(성균관대학교)
 - 발표 : 보험정보 집중체계의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 모색(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
 - 토론 : 권진홍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박종화 상무(손해보험협회)
송윤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
이재용 상무(생명보험협회)
이종환 팀장(금융감독원)
이준섭 부문장(보험개발원)
조연행 부회장(금융소비자연맹)

개최배경

보험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정보의 집중·활용이 불가피한 반면, 보험정보는 질병정보, 범규위반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은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동 법에 근거하여 보험

정보를 집중·활용하는 기관은 법적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수기관이 일관된 원칙 없이 중복하여 집중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행 보험정보 집중·활용체계를 재검토하고 안정적인 보험정보 집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

생·손보협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정보 및 사고정보를 집적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손·생보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집중하고 있다. 보험정보는 책임보험의 피해자정보, 계약자·피해자·수익자가 다른 계약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 정보, 단체보험 피보험자 정보 등 동의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서는 보험정보

신용정보법은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동 법에 근거하여 보험정보를 집중·활용하는 기관은 법적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수기관이 일관된 원칙 없이 중복하여 집중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행 보험정보 집중·활용체계를 재검토하고 안정적인 보험정보 집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의 특수성에 따른 동의예외조항이 없어 법률리스크가 상존하며 질병정보, 치료정보, 범죄정보 등을 포함하는 보험정보가 신용정보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바,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토론내용

토론자 대부분은 보험정보 관련 규제 및 집중기관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집중기관 일원화에 따른 정보 오남용 및 권력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생·손보험회 관계자를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법률리스크 해소, 개인정보 보호, 보험사기 방지 측면에서 보험정보 관련 규제 일원화와 집중기관 일원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집중기관 일원화 시 정보 권력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중기관의 지배구조 및 기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Chapter

국제세미나

- 한국의 보험산업 및 배당상품 현황, 대재해보험 소개
- 한국 보험산업 및 자유화 현황
-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 새 금융질서에 따른 보험산업의 신성장 방안

한국의 보험산업 및 배당상품 현황, 대재해보험 소개

행사명 : 태국 보험위원회-보험연구원 Round Table Meeting | 주관행사

170

행사개요

- 일시 : 2012.5.31.(목) 10:00
- 장소 : 보험연구원(12층)
- 주제 : 한국의 보험산업
- 발표
 - o 환영사 :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 o 사회 : 황진태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o 제1주제 : 한국 보험산업 현황
(윤상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o 제2주제 : 배당상품 현황
(김소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o 제3주제 : 대재해보험
(김소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개최배경

태국 보험위원회(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er, 이하 OIC)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의 MOU 체결에 앞서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보험회사 및 보험산업 유관기관을 견학하였다. 또한, 태국 OIC 위원장은 보험연구원 방문에 앞서 한국 보험산업 현황과 배당상품 및 대재해보험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국가 간 상호 협력의 자리에서 보험연구원은 한국의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글로벌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한국의 보험

산업 현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자료를 제공함과 더불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Round Table Meeting을 개최하였다.



제1주제

한국 금융시장 가운데 자산 규모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이며 전체의 70.5%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산업은 전체의 21.3%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 이후 한국 보험산업의 보험료 성장속도는 명목경제성장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보험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면, 2010년 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은 약 8위, 손해보험은 약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침투도는 OECD 평균인 7.0% 보다 높은 11.4%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험밀도는 OECD 평균인 2,970달러 보다 낮은 2,43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생명보험은 연금과 저축성보험이 55.4%,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와의 MOU 체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태국 보험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국가 간 상호 협력과 글로벌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국 보험산업 현황과 배당 상품, 대재해보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5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축성 보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판매채널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독립대리점과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과거 공급자 중심의 판매채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연금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RBC와 IFRS 도입 등 건전성 관련 규제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제2주제 한국의 배당보험상품과 무배당 보험상품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1992년 이전에는 배당보험상품만이 존재하였으며, 무배당보험상품은 1992년에 도입되었다. 무배당상품은 도입 이후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FY2009에는 배당보험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배당보험상품 비중의 감소는 1991년 주주 배당을 최대 30%까지 허용한 것과는 달리 1998년 이후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최근에는 10%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 추세와 생명보험회사들의 IPO 관련 이슈로 인하여 배당보험상품의 판매는 개인연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3주제 대재해 사건을 담보하는 보험은 사적 보험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낮은 발생빈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이 크고 거래비용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조와 더불어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 대재해보험을 유연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대재해 사건에 대한 적절한 손해사정액 산정과 손해사정인 부족의 해소 문제이다. 둘째는 사적 보험시장이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거나 참여하는 적정 수준의 정부 참여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대재해 사건 발생 시 보상 지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한국 보험산업 및 자유화 현황

행사명 : 태국 보험위원회 세미나 | 주관행사

172

행사개요

- 일시 : 2012.6.11.(월)
- 장소 : 태국 OIC
- 주제 : 한국 보험산업 현황 및 자유화
- 발표 :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개최배경

태국 OIC(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er, 이하 OIC) 위원장은 2011년 5월 한국 방문 시 한국 보험산업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냈으며, 당시 개최된 보험연구원과의 Round Table Meeting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로 태국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희망하였다. 2011년 6월 11일 한국 금융위원회와 태국 OIC와의 MOU가 태국에서 체결되었으며, 체결 직후 태국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 보험산업 현황 및 자유화 과정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주요내용

보험산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변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관점이 필요하며,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은 이러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향후 모습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자유화란 자율보험시장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자율보험시장을 통하여 보험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경쟁적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시장개방이 선행되어야 하고, 규제에 의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대외적인 시장개방은 미국의 통상압력 확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은 「미국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시장개방을 요구하였으며, 손해보험 회사들의 풀(pool) 해체, 생명보험의 시장 개방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1995년 OECD 가입, 1998년 IMF 금융위기 등을 계기로 추가적인 보험시장 개방이 이루어져 보험시장의 경쟁도가 높아졌다.

보험산업의 대외적인 시장개방은 금리자유화, 금융산업 간 경쟁 확대, 금융시장 글로벌화 등 거시적인 금융환경의 변화와 함께 보험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었고, 보험요율, 보험상품, 자산

2011년 6월 11일 한국 금융위원회와 태국 OIC와의 MOU가 태국에서 체결되었으며, 체결 직후 태국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 보험산업 현황 및 자유화 과정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운용, 판매채널, 감독제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보험요율의 경우 시장에 주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적은 보험부터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일반손해보험 요율을 시작으로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생명보험 요율이 자유화되었다. 또한, 사후적인 보험가격인 배당에 대한 자유화가 선행되었으며, 부가보험료, 순보험료 순으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보험시장 개방으로 인가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현하였다. 특히, 1992년 무배당상품의 도입과 2001년 변액보험 판매 허용은 보험상품 다양화에 있어서 큰 변화로 기록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최근 보험상품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보장성보험의 축소와 저축성 및 연금보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자율성도 확대되었다. 주식, 채권, 해외투자 등의 자산운용 비중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국공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판매채널의 경우에는 과거 공급자 중심의 판매채널에서 소비자 중심의 판매채널로 변화하였다. 2003년 방카슈랑스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교차판매가 허용되었다. 최근에는 마트슈랑스(Mart-surance)와 같은 다양한 판매채널이 소개되고 있으나 판매채널의 자율

성이 확대되는 만큼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전적인 규제완화와 자율성 확대는 시장을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효율성을 증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 측면에서 소비자보호와 보험회사 건전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율하기 위한 사후적인 감독제도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행사명 : 2012 보험연구원 국제세미나 | 주관행사

174

행사개요

- 일시 : 2012.10.19.(금) 09:00
- 장소 : 조선포텔 그랜드볼룸(1층)
- 주제 :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 발표 및 토론
 - o 개회사 :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
 - o 축 사 :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 o 사 회 : 김현수 교수(순천향대학교)
 - o 제1주제
 - 건강보험시장에서의 경쟁, 유인, 그리고 규제 (Prof. Randall P. Ellis, Boston University, US)
 - o 제2주제
 - 일본의 건강보험체계와 생손보의 융합(Prof. HongMu Lee, Waseda University, Japan)
 - o 제3주제
 - 북유럽의 복지개혁 : 인구고령화 그리고 건강보험과 공공보건의 이중성(Prof. Sven E.O. Hort, Linnaeus University, Sweden, & Seoul National University)
 - o 제4주제
 - 건강보험의 기능과 발전방향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 o 제5주제
 -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o 100분 토론

- 김대환 실장(보험연구원)
- 김진현 교수(서울대학교)
- 박민수 과장(보건복지부)
- 정기택 교수(경희대학교)
- 이기효 원장(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이윤수 과장(금융위원회)
- 조경애 대표(건강세상네트웍스)
- 최재욱 소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개최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및 사회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건강과 소득은 노후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사연금의 역할과 달리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와 의료비 증가가 시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금체계와 달리 건강보험 체계는 정부, 보험회사, 소비자뿐만 아니라 의료계라는 또 다른 경제주체의 역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의료 및 건강보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을 논의·제시하기 위해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미국은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익체계 또는 수가체계를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일본은 1973년 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무상의료제도를 도입한 결과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했고 재정이 악화되어 10년 뒤인 1982년에 무상의료제도가 폐지되었다.

제1주제

현재 미국보건경제학회 학회장인 보스턴 대학의 Randall P.

Ellis 교수는 제1주제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보장 역할을 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유인하는 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너무 높으면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보장성이 너무 낮을 경우 의료비 리스크에 노출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익체계 또는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제2주제

제2주제 발표에 나선 일본 와세다대학교의 HongMu Lee 교수

는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무상의료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일본은 과거 고도의 경제성장하에서 ‘성장인가 복지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놓였고, 결국 정부 중심의 복지확대정책을 선택하였다. 특히 1973년 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무상의료제도를 도입한 결과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했고 재정이 악화되어 10년 뒤인 1982년에 무상의료제도가 폐지되었다.

제3주제 발표에 나선 스웨덴의 Sven E.O. Hort 교수는 스웨덴의 인구고령화와 건강보험의 개혁 사례를 소개하였다. 1991년 이후 스웨덴은 복지개혁을 통해 교육, 보건 등에서 재원은 공적재원에 의존하되 시장경쟁에 의존하는 민간 복지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장 중심의 복지체계는 과거의 공적 복지체계를 대체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제4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의 김진현 교수는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장단점을 소개하면서 공적건강보험의 역할 강화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공적건강보험은 민영건강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낮아 효율성이 높고 저소득층의 의료

스웨덴은 복지개혁을 통해 교육, 보건 등에서 재원은 공적 재원에 의존하되 시장경쟁에 의존하는 민간 복지체계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적건강보험은 민영건강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낮아 효율성이 높고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반면,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에 비해 환자의 선택권이 넓고 환자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높으며 진료대기 시간도 짧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반면,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에 비해 환자의 선택권이 넓고 환자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높으며 진료대기 시간도 짧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해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이므로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대폭 인상하여 현재 62.7%에 머물러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84%까지 높여야 한다.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따라 담배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세나 비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직장과 지역의 이원화된 부담체계를 단일체제로 개편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상한선을 폐지하며, 금융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수가 체계에 대해서는 현 후불제 형식의 행위별수가제를 총액제와 같은 선불제로 변경해야 한다.



제5주제

제5주제 발표에 나선 보험연구

원 김대환 실장은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공보험과 사보험 간 역할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공사건강보험 간 역할체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사실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보장률이 낮더라도 공보험이 소외계층의 의료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주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공보험과 사보험 간 역할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보장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소외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충분히 높지 않고, 소득이 낮으면서도 건강위험이 높은 계층이 민영건강보험에 맡겨져 있는 현재의 공사건강보험체계가 더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10% 남짓한 노인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1/3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머지않아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근로계층의 보험료로 노인계층의 의료비를 보장해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저출산과 미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장률을 높게 유지하고, 지금보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을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

야 하는 부과방식 때문에 재정악화를 비롯한 다양한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증세는 상징성만 있을 뿐 결국 모든 국민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그 부담수준도 생각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생각처럼 높지 않고 무상의료는 포퓰리즘이라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공보험과 사보험의 공조체계가 필요하다. 즉, 공적 안전망과 사적 안전망의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공사건강보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저출산과 미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장률을 높게 유지하고, 지금보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을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통합상품 형태로 비교용이성과 투명성이 높지 않아 보험회사들이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시장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민영건강보험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현재 보장성보험에 제공되고 있는 세제혜택의 풀(Pool)에서 건강보험을 분리

시킬 필요가 있다.

공사건강보험체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광범위한 비급여의료 중 수요가 많은 의료들은 급여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비 관리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료 인상으로 보장률을 확대하기에 앞서 자영업자의 소득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를 경감시켜야 하며, 예방기능을 강화하여 의료비 지출 자체를 경감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보장성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험료 인상은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성장과 복지가 병행될 수 있을 것이다.

100분 토론

특히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보험회사,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들이 한곳에 모여 100분 토론을 통해 공사건강보험에 대해 진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새 금융질서에 따른 보험산업의 신성장 방안

행사명 : 제5회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 주관행사

178

행사개요

□ 일시 : 2012.10.30.(화) 09:00

□ 장소 : 조선포텔 그랜드볼룸(1층)

□ 개막식

○ 개막사 : 권성철 파이낸셜뉴스 사장

○ 환영사 :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

○ 기조연설 : 권혁세 금융감독원 원장
요시히로 가와이 IAIS 사무총장

□ 제1세션 : 글로벌 보험산업의 메가트렌드
(주요 국가별 뉴트렌드 진단)

○ 제1주제

- Mega Trends in the Global Insurance Industry: the United States
(스티븐 와이스바트 미국 보험정보연구소 부사장)

○ 제2주제

- Mega Trends in the Global Insurance Industry: Recent Trends by Countries
(헬게 하티크 독일 GDV 수석법률자문)

○ 제3주제

- Mega Trends of the Global Insurance Industry: Consumer Protection in Australia
(마크 소퍼 RGA 홍콩&동남아시아 계리인)

○ 제4주제

- 경제민주화, 보험산업 전략방향
(진익 보험연구원 경영전략실장)

○ 패널토론

- 좌장 : 김두철 교수(상명대학교, 보험학회장)
- 스티븐 와이스바트 부사장
- 헬게 하티그 수석법률자문
- 진익 경영전략실장(보험연구원)
- 이윤수 보험과장(금융위원회)

□ 제2세션 : 리스크관리를 통한 보험회사의
지속성장 전략

○ 제5주제

- How is ERM Helping AIG to Grow Profitably
(리처드 오브라이언 차티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 제6주제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리스크 프라이싱
(장이규 보험개발원 팀장)

○ 제7주제

- 보험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리스크관리 감독
방향(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장)

○ 패널토론

- 좌장: 오창수 교수(한양대, 리스크관리학회장)
- 요시히로 가와이 IAIS 사무총장
- 리처드 오브라이언
- 장이규 팀장(보험개발원)
- 진태국 실장(금융감독원)
- 이봉주 교수(경희대)



미국에서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건강보험시장이 성장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로 은퇴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은퇴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텔레매틱스에 기반한 자동차 보험시장이 성장이 예상된다. 유럽 보험업계는 금융위기로 소비자 권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후, 감독 기관 출범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최배경

최근 글로벌 보험산업에서 신상품,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공정위의 변액보험 수익률 컨슈머리포트 발표 등으로 어느 때보다 보험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금융, 특히 장기 자산 운용해야 하는 보험산업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를 겪으며 무리한 자산운용으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그린손보가 결국 공개매각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 역시 위험기준가지자본제도(RBC제도), 보험그룹을 위한 공통감독체계 등 리스크 관리를 최대 현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 선진국 보험업계 관계자, 국제보험감독자협회 관계자 등의 주제발표 및 토의를 통해 글로벌 보험산업의 메가트렌드를 살펴보고, 향후의 리스크 관리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 보고자 파이낸셜뉴스와 공동으로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제1주제

스티븐 와이스바트 미국 보험정보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보험시장의 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오는 2014년부터 실행되는 건강보험개혁법

에 따라 건강보험시장이 성장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로 은퇴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은퇴보험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향후 2년 내 미국 민간 보험시장은 확대될 것이다. 포화 상태에 놓인 자동차 보험시장에서는 텔레매틱스에 기반한 보험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기존 자동차보험료 책정기준은 학력, 신용도 등에 기반하는 등 정확하지 않지만, 텔레매틱스는 운전습관을 정보로 활용하고 보험료도 25~30% 할인되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텔레매틱스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상품 구매 의사가 53%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으므로 앞으로 미국 내에서 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주제

헬게 하티크 독일 GDV(독일 보험자협회) 수석법률자문은 금융위기로 소비자 권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후, 유럽 보험업계는 감독 기관 출범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유럽 보험산업의 최근 트렌드를 말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 보험금지급률을 올리기 위한 제도인 유럽연합(EU)의 유럽 보험사 지급여력제도(Solvency II)가 가장 화두가 되고 있다. 2~3년 내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Solvency II는 개인보험가입자가 아닌 가입자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이를 보호

호주에서는 2011년 나뉘어져 있던 20개에 달하던 연방법을 하나로 합쳐 모든 주와 지역에 적용되는 전국가적인 소비자 법인 호주소비자보호법(ACL)을 제정하였다. 호주 금융보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장통합을 통한 보험 소비자 보호는 필수적이다.



하는 목적하에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현재 유럽 보험업계에서 보험중계지침(IMD2)과 패키지소매투자상품(PRIP's), 보험보장제도(IGS) 등의 주요 개혁 프로젝트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의 목표는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러 툴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비 계산에서 보험사들의 투명성 및 불건정성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하기도 할 것이다. 특히 그는 "IGS의 경우 금융위기 후 EU 내에서 어떤 식으로 보험보장 체계를 일관화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이다.

독일의 경우 금융안정위원회가 보험업계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관련 자문패널을 구축해 상품을 분석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뿐 만 아니라 새로운 법이 마련되면 법의 여파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한다. 최근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체의 보험업계에서 소비자보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고, 유럽의 프로젝트들은 독일과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독일의 보험협회도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건전한 발전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고 있다.

제3주제 마크 소퍼 RGA 홍콩 & 동남아시아 지역 마케팅 제리인은 호주

의 소비자 보호 역사와 함께 작년에 제정된 호주소비자보호법(ACL)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ACL은 나뉘어져 있던 20개에 달하던 연방법을 하나로 합쳐 만든 것으로 모든 주와 지역에 적용되는 전국가적인 소비자법이다. 호주는 1974년 이전만 하더라도 주별로 연방법을 따로 갖고 있었다. 하지만 호주는 1974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첫 공통법인 무역관습법(TPA)을 도입했으나 이는 연방법과 별개로 돌아갔다. 그러자 2011년 TPA를 경쟁소비자법(CCA)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통합법인 ACL을 만들었다. 이로써 호주정부는 20개에 달하는 연방법을 하나의 법으로 묶는 효과를 얻게 됐다. ACL은 이해하기 쉬운 법으로 ACL 체제하에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더 명확한 권리로 이득을 얻을 것이며 호주 소비자 보호 당국은 보험사들의 의무조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6가지 가이드를 만들었다.

호주정부는 특정 산업을 위해 포괄적인 ACL 보충조항도 마련했다. 연방 차원에서 특정 조항에 영향을 받는 분야로는 금융서비스, 전기통신, 식품안전, 의약품 등이다. 그 외에도 투자, 연금 등 보험·신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이와 관련한 업무들을 관장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합법의 사례로 2010~2011년 퀸즈랜드의 홍수피해를 들 수 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결과의 평등 제고를 지향하는 복지 확대나 사회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공공성을 강화한 포괄적 소득보장서비스와 금융소비자 만족 지향 개방형 네트워크 모색, 시장경쟁 촉진에 부합하는 능동적 자산부채종합관리와 경제민주화에 보다 적합한 사업모형으로 전환 등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가치창출 기회를 탐색하여야 한다.

2010년 12월 시작된 대형 홍수는 퀸즈랜드주를 강타하며 최소 마을 70곳, 2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대형 자연재해였다. 피해액만 해도 30억 달러로 추정됐다. 이후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와 보험업계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보상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11년 자연재해 보험 리뷰 보고서를 발간하고 보험업계를 상대로 보험업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을 요구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호주 금융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장통합을 통한 보험 소비자 보호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주제 진익 보험연구원 경영전략실장은 보험산업이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사회안전망 기능 확대를 통해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 기원이나 발전 경로를 볼 때 보험은 사후적인 결과의 평등에 보다 친숙하다. 경제민주화의 목표 중 하나인 “결과의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결과의 평등 제고를 지향하는 복지 확대나 사회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산업의 현재 모습을 보면 금융소

비자, 정책당국,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 보험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위험인수를 최소화하는 수동적 전략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장기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보다 능동적인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보험산업은 금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립을 해주면서도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고, 위험노출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수익 및 성장 목표를 달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수익 실현과 자본 성장이 가능하였지만, 저성장·고실업·저금리로 대표되는 뉴노멀, 자기자본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행동주의 확산, 회계 투명성 강화, 경제민주화 추세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기존 사업모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방향, 즉 ① 공공성을 강화한 포괄적 소득보장서비스 모색, ② 금융소비자 만족 지향 개방형 네트워크 모색, ③ 시장경쟁 촉진에 부합하는 능동적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모색, ④ 경제민주화에 보다 적합한 사업모형으로 전환 등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가치창출 기회를 탐색해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ERM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보험료 산정뿐만 아니라 상품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별 대응책을 담은 리스크 프라이싱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통계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주제 리처드 오브라이언 차티스 아시아·태평양지역 리스크 매니저먼트 총괄 최고책임자(CRO)는 리스크관리 수단과 관련 ERM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장기운영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리스크관리에 실패한 사례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리스크관리 가능성이 지속가능 성장에 중요하다.

지난 몇 년간 많은 국가의 금융당국에서 ERM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런 국가들의 규제나 자본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ERM이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6주제 보험개발원 장이규 계리리스크 서비스팀 팀장은 보험료 산정뿐만 아니라 상품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별 대응책을 담은 리스크 프라이싱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통계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상품은 한번 판매하고 나면 무를 수 없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만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리스크 프라이싱이 이뤄져야 한다. 리스크 프라이싱은 가격책정이라는 협의의 뜻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 성

장성, 안정성 등 경영전략을 고려한 회사 차원의 리스크 평가라는 광의로 정의해야 한다. 리스크 프라이싱 정의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상품을 설계할 때부터 회사에 대한 경영전략을 고려해 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 리스크 프라이싱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회사별 주요 리스크에 대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해 산출할 수 있다. 변동성 리스크나 투자 리스크, 계약자행동 리스크 등 각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리스크를 통합해 관리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리스크를 크게 변동성 리스크, 투자 리스크, 계약자행동 리스크로 나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라 투자상품을 선호하게 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변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통합(pooling)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내재돼 있는 옵션이나 보증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모두 평가해야 한다. 내재 옵션 및 보증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다수의 시나리오를 통한 확률론적 시뮬레이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계약자행동 리스크는 쉽게 평가할 수 없어 경험 통계 정비 및 추정기법을 고도화해 예측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교한 가장 및 시나리오 점검 등이 중요하다. 주가, 금리 등의 장기전망을 하기 위해서



리스크 중심 경영체계 개선 유도, 저금리 등 위험요인에 대비해 재무건전성 제고, 새로운 리스크에 선제 대응, 신상품·신시장 개척 등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가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주요 감독과제이다.

는 50년짜리 모델이 필요한데 5년 등 단기모델이 주를 이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장기 전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제7주제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장은 세계 경제 둔화세와 함께 저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되며 보험사의 역마진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위험에 대비한 재무건전성 제고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다짐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 보험사가 56개사에 달하고 시장 규모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8위 시장으로 성장, 국내 금융산업의 21.5%를 차지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지급여력비율이 304.3%에 달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높게 나타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금융환경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선진국은 민간의 자생적 회복세가 미약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여력이 부족한데다 신흥국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저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채권 등 금리 민감자산 위주로 투자하는 보험회사의 역마진 심화가 우려된다. 최근의 의료비 증가, 지진이나 기상이변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빈도와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6%를 넘어 사실상 포화 상태에 근접했고 각종 민원 등으로 추락한 신뢰도 제고 역시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선진화를 위한 방향으로 5가지 과제를 중점으로 감독을 해 나갈 예정이다. 리스크 중심 경영체계 개선 유도, 저금리 등 위험요인에 대비해 재무건전성 제고, 새로운 리스크에 선제 대응, 신상품·신시장 개척 등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가 그것이다. 특히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고 보험감독 체계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 또 책임준비금 등 계리관련 제도도 보완하고 일시적 이익은 향후 상황에 대비, 회사에 유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 신뢰도 제고를 위해 컨슈머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보험사가 고객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감독과 감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Chapter

4

사원사 연구직원 및 출입기자단 세미나

- 민원동향과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 보험산업의 현안과제와 향후 정책방향
- 보험산업 발전방안과 보험연구원 역할

민원동향과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행사명 : 제1회 사원사 연구직원 및 출입기자단 세미나 | 주관행사

186

행사개요

- 일시 : 2012.5.23.(수) 11:3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민원동향과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 발표 및 토론
 - 발 표 : 정원석 팀장(금융감독원)
 - 토 론 : 김철호 박사(삼성생명 금융보험 연구소), 이은영 박사(삼성화재 금융보험연구소)
 - 사 회 : 안철경 부원장(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경향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업무를 소개하고 최근 민원동향에 대해서 보험업계 연구직원과 출입기자단의 이해를 돕고자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2011년 중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상담 및 민원 등은 총 520,516건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하였고 2012년 중에도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급증하였다. 금융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4.2% 증가하였는데 주로 통합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접근편의성이 제고되고,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문의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또한 금융민원이 17.4% 증가했는데, 이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민원과

보이스피싱 카드로 피해, 가맹점 수수료 불만 등 신용카드관련 민원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증가 추세이며,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접근편의성이 증가되고 저축은행 영업정지, 보이스피싱 카드로 피해, 가맹점 수수료 불만 등 신용카드관련 민원이 증가된데 크게 기인한다.

2012년 5월 금감원 조직개편 시 금감원 내 원장직속의 준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된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각적인 소비자보호방안을 추진하며, 그 방향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유도, 민원관련 공시 확대로 민원 감축 유도, 컨슈머리포트 발간 등을 통한 소비자정보제공 확대,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에 대한 점검 및 시정 강화, 금융회사 경영진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소비자보호서비스 강화, 금융수요자 중심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보험산업의 현안과제와 향후 정책방향

행사명 : 제2회 사원사 연구직원 및 출입기자단 세미나 | 주관행사

187

행사개요

- 일시 : 2012.9.19.(수) 11:3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보험산업 현황과 주요 정책이슈
- 발표 및 토론
 - 발 표 : 제중옥 사무관(금융위원회)
 - 사 회 : 안철경 부원장(보험연구원)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2012년 상반기 보험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이슈에 대해 정책당국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서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연구직원과 출입기자단의 이해를 돕고자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2012년 보험산업에 대한 주요 감독방향은 소비자보호 강화, 저금리하의 재무건전성 감독강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인허가정책, 보험상품 가격정책, 보험사기 대응이라는 5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소비자보호 측면의 주안점은 공시 강화로, 연금저축 등 은행·보험·증권이 함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또한 변액보험 등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준비금 적립의 경우 현행 표준이율·보증준비

금 등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며, RBC비율 단계적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판매비용이 저렴한 채널(인터넷 등) 확대를 위해 판매채널 전업사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 채널선택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업비가 상이한 채널별 가격차별화에 대해 재검토 중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 변경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산업평균 보험료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상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한다.



2012년 보험산업에 대한 주요 감독방향은 소비자보호 강화,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소비자 선택권강화를 위한 인허가정책, 보험상품가격 정책, 보험사기 대응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정보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험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보험산업의 발전방안과 보험연구원의 역할

행사명 : 제3회 사원사 연구직원 및 출입기자단 세미나 | 주관행사

188

행사개요

- 일시 : 2012.12.11.(화) 11:30
-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 주제 :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과제
- 발표 및 토론
 - 발 표 :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
 - 사 회 :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개최배경 본 세미나는 내수 부족과 신상품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인식 및 역할제고 노력에 대해 보험업계 연구직원과 출입기자단에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기획되었다.

주제발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전체 보험료규모는 2011년 세계 8위를 차지하고 가구당 가입률도 87.3%에 육박하는 등 기존시장은 포화수준에 있다. 또한 보험산업의 구조도 대형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기존시장을 대상으로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타금융산업보다 겸업화, 종합화에도 뒤지고 있고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도 답보상태에 있어 향후 성장성이 어둡다. 보험산업의 경영환경 또한 녹록치 않아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의 탐색, 사업모형 및 관행의 전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시장포화와 함께 타금융산업 겸업화 및 해외시장진출 등도 지지부진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 기초인프라로 보험정책개발센터, 보험정책-회사-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센터, 보험/금융 글로벌 R&D 구축, 정보통계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의 기초인프라가 필요한 데, 즉 금융산업 내 보험정책개발센터, 보험정책-회사-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센터, 보험/금융 글로벌 R&D 구축, 정보통계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보험연구원은 금융산업 내 보험정책개발센터가 되고자 독립된 이후 성과급체제를 개편하고 연구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Chapter

5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SIFI 논의와 국내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 보험사 선진리스크 관리전략
-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체제의 선진화 방안

SIFI 논의와 국내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행사명 : 제2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190

행사개요

- ☐ 일시 : 2012.4.13.(금) 16:00
- ☐ 장소 : 보험연구원 대회의실(12층)
- ☐ 주제 : SIFI 논의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 ☐ 발표 및 토론
 - o 환 영 사 :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 o 사 회 : 전용식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o 제1주제 : SIFI 논의와 국내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이상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o 제2주제 :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구도 변화 : M&A(정형진 골드만삭스은행 전무이사)
 - o 토론 : 임준환 선임연구위원(보험연구원)
구분재 Oliver Wyman 공동대표

제1주제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G_SII)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과 향후 일정을 살펴보고 국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2주제

우리나라 보험회사 M&A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M&A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최배경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 등을 위해 제2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보험사 선진리스크 관리전략

행사명 : 제3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191

행사개요

- 일시 : 2012.6.12.(화) 15:00
- 장소 : 보험연구원 대회의실(12층)
- 주제 : 보험사 선진리스크 관리전략
- 발표 및 토론
 - 사회 : 전용식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제1주제 : 보험사 선진리스크 관리전략
(권일동 Oliver Wyman 이사)
 - 제2주제 : ERM—Creating a Risk Intelligent Insurer(Gavin Maistry Munich Re Asia Chief Actuary)
 - 토론 : 정신동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개최배경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제3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주제

선진보험회사들의 ‘Enterprise Risk Management’(ERM) 체계를 살펴 보고 ERM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조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주제

ERM체계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ERM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체제의 선진화 방안

행사명 : 제4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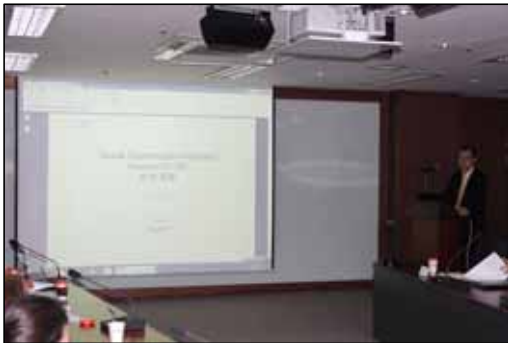
192

행사개요

- 일시 : 2012.9.27.(목) 16:00
- 장소 : 보험연구원 대회의실(12층)
- 주제 :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체제의 선진화 방안
- 발표 및 토론
 - 사회 : 조재린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주제 :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체제의 선진화 방안
(정신동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토론 : 이항석 교수(성균관대학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보험연구원)

주제발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리스크 관리조직 현황, 리스크 측정 현황 등 리스크관리 수준을 살펴보고 감독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개최배경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위해 제4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Chapter

기타 연구행사

- 보험분야에서 신용정보 활용현황과 이슈
- 지급능력 및 시스템위험 대응 관련 IAIS 주요 현안
- 정책토론회

보험분야에서 신용정보 활용현황과 이슈

행사명 : 금융정책포럼 | 주관행사

194

행사개요

- ☐ 일시 : 2012.10.24.(수) 14:00
- ☐ 장소 : 보험연구원 대회의실(12층)
- ☐ 주제 : 보험분야에서 신용정보 활용현황과 이슈
- ☐ 발표
 - o 사회 : 기승도 수석연구원
 - o 발표 : 장운상 전문연구원, 조현철 실장

개최배경

금융 신용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위험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의 사고위험도가 평균인 사람보다 약 50%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이에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신용도에 따른 위험도 차이를 보험 요율산출 요소, 언더라이팅 요소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신용사회로 점진적으로 나아감에 따라 신용정도의 차이를 보험의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신용정보를 관리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 KCB와 공동으로 신용정보의 활용가능 분야 등을 탐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제발표

KCB에 따르면 금융신용정보에 따라 사고위험도가 높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들이 있다고 한다. 이에 미국 등에서는 신용정보를 (자동차보험 등)보험료 산출 및 언더라이팅 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회사는 그렇지 못한 회사에 비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

토론내용

KCB의 발표에 대하여 포럼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우선 신용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신용정보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신용정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가입자가 신용도가 높은 가입자에 비하여 더 높은 보험료를 낼 개연성이 있다. 신용도가 낮은 가입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속할 개연성이 높는데, 이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할 경우 이들 계층이 수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자신의 노력도 있지만 사회적 시스템의 결과일 수 있는데, 경제적 위험도 차이를 보험료 차이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신용정도에 따라 위험도 차이가 있다고 하나, 그 신용정도가 위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인과관계가 있다)는

금융 신용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위험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신용도에 따른 위험도 차이를 보험 요율산출 요소, 언더라이팅 요소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용사회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므로 신용정보를 보험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선제적·학술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용정보를 요율산출 및 언더라이팅에 적용할 경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용정보를 보험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산출 및 언더라이팅 분야보다는 보험사기 분야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보인다.

둘째는 신용정도를 보험분야에 도입할 경우 사회적 후생이 늘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신용도를 활용하는 주요 목적이 단지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적용만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사회적 후생을 늘이거나 사회적 비효율, 즉 자동차보험분야를 예로 들 경우 사고발생률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겐 보험료를 더 부과하거나 인수를 거절할 경우 이들의 사고발생률이 줄어들까 또는 이들이 안전운전을 하려고 노력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경제적 상태가 개선되기까지 즉, 신용도가 높아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개연성이 큰데 이들에게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더 높게 부과할 경우 사고발생률이 개선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셋째, 신용정보가 보험분야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가 신용도에 따라 모든 것(금융대출 등)이 이루어지는 신용사회로 변화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포럼참가자들은 신용정보를 보험분야에 적용할 경우 극복해야 할 여러 장애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점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신용사회로 변화될 것이므로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분야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그리고 학술적으로 신용정보를 보험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대두되었다.

지급능력 및 시스템위험 대응 관련 IAIS 주요 현안

행사명 : IAIS 한국포럼 | 주관행사

196

행사개요

- 일시 : 격월 금요일(2주차) 개최 원칙
- 장소 : 보험연구원
- 주제 : 보험회사 지급능력과 시스템위험 대응방안 관련 IAIS 주요 현안
- 논의 주제 및 발표

2012	주제
4.9 (3차)	○ 최수현 금감원부원장 격려사 ○ Solvency 2 시사점 - 오창수 교수(한양대학교) ○ 미국 AIG 사례 연구 - 임준환 선임연구원(보험연구원) ○ ICP 16, 17 갭 분석 - 박경국 선임조사역(금융감독원) ○ ERM 구축/운영사례 - 윤민영 차장(현대해상) ○ IAIS 브리핑 - 이준교 수석조사역(금융감독원)
6.8 (4차)	○ 강영구 보험개발원장 격려사 ○ IFRS 4의 영향 (1) - 정근환 파트장(보험개발원) ○ IAIS 브리핑 - 이준교 수석조사역(금융감독원)
7.6 (5차)	○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격려사 ○ IFRS 4의 영향 (2) - 정근환 파트장(보험개발원) ○ ERM 기반 내부모형 - 조은영 과장(삼성화재) ○ ICP 갭 분석 추진방안 - 박종수 IAIST팀장(금융감독원) ○ IAIS 브리핑 - 이은주 선임조사역(금융감독원)

2012	주제
9.21 (6차)	○ 이종욱 IAIS 집행위원 격려사 ○ D-SII 관련 이슈 - 임준환 선임연구원(보험연구원) ○ 그룹감독과 그룹의 범위 - 민세진 교수(동국대학교) ○ IAIS 브리핑 - 이은주 선임조사역(금융감독원)
11.23 (7차)	○ 오수상 생협부회장 격려사 ○ SIB 규제 논의와 은행산업 - 김병덕 선임연구원(금융연구원) ○ 국내 시스템리스크 감독방안 - 김태진 팀장(금융감독원) ○ IAIS 브리핑 - 김해식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이은주 선임조사역(금융감독원)

개최배경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의 활동이 보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에 보험연구원과 금융감독원은 보험 업계 및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IAIS 한국포럼”을 2012년 2월 7일 창설하여 보험산업의 국제화와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격월 주기로 개최하고 있다.

제 3 차

보험그룹 감독에 관한 논의와 보험업 자본규제에 관한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보험그룹과 관련하여 IAIS의 다국적 보험그룹에 관한 감독 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활동이 보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에 보험연구원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의 국제화와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 2월 7일 보험 업계 및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IAIS 한국포럼"을 구성, 격월 주기로 개최하고 있다.

(ComFrame)에 관한 논의 경과와 AIG그룹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또한 보험업 자본규제와 관련하여 주요 벤치마크인 유럽연합의 Solvency II의 계량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자본규제의 틀과 IAIS의 전사적위험관리(ERM) 및 자본규제 원칙(ICP 16, ICP 17)과 국내 감독규정 간의 갭 현황과 갭 축소 방향이 논의되었으며, 국내 보험회사의 ERM 구축 사례가 소개되었다.



제 4,5차 IAIS가 제시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가치평가기준에 관한 보험핵심원칙(ICP 14)과 관련하여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제안하고 있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2단계 논의 경과와 향후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이 제4차와 제5차 포럼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으로 IAIS 담당 조직이 기존 T/F 형태에서 상설조직으로 재탄생함에 따라 IAIS 팀에 대한 소개(제4차 포럼)가 이루어지고, IAIS팀의 향후 ICP 갭 분석 방안

에 대한 계획도 제시하였다(제5차 포럼). 제3차에 이어 국내 보험회사의 ERM 구축 사례가 소개되었다.

제 6 차 금융산업 시스템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시스템위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보험회사(Global Systematically Important Insurers)에 대한 IAIS의 규제 기준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이에 대한 IAIS의 최근 논의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향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보험회사(Domestic Systematically Important Insurers)의 선정 이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보험그룹감독과 관련하여 국내 보험산업에서 보험그룹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제 7 차 보험산업의 D-SII 논의의 벤치마크가 될 만한 은행산업의 D-SIB (Domestic Systematically Important Banks) 규제에 대하여 금융연구원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의 견해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정책토론회

행사명 : 비공개 정책토론회 | 주관행사

198

행사개요

정책토론회는 보험산업의 정책관련 현안에 대해 정책당국자와 업계실무자들이 보험연구원에서 실무적 의견을 나누는 비정기적 토론회이다.

개최배경

본 정책토론회는 보험산업의 현안에 대해 보험업계 실무자들의 현안관련 실무적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책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토론함으로써 관계자들의 보험산업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정교화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주 제

- 제1차 : 인터넷 보험사 도입방안(7/24)
- 제2차 :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7/27)
- 제3차 : 생명보험 자살면책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8/29)
- 제4차 :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개선방안(9/19)
- 제5차 : 휴대폰보험 개선방안(10/11)
- 제6차 : 저금리 지속에 따른 보험산업 잠재위험요인(11/8)



III.

FY2013 주요 연구 계획

경영 효율화

리스크관리 선진화

고령화와 신성장

금융보험 법제개선

Chapter 1

경영 효율화

- 거시계량모형 개발
- 지속성장을 위한 금융상품 수수료 체계 연구
- 저성장·저금리 시대 금융산업 대응전략
- 보험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거시계량모형 개발

전성주(연구위원)·전용식(연구위원) | 보고서

202

연구배경

최근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거시경제의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모형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 거시계량모형은 경제이론과 거시적인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경제 각 부문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현재 KDI, 한국은행 등 많은 기관에서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각 산업에 대한 경제전망과 거시경제 변화의 파급효과 분석을 하고 있는 반면 보험산업을 포괄하여 경제전망 및 파급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모형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생적인 거시경제 변수들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거시계량모형의 기본구조를 수립하고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기존의 모형들에서 다루고 있는 총공급, 총수요, 국제수지, 물가, 노동, 금융 등의 부문에 보험산업을 포함한 모형을 개발하여 보험산업을 포괄하는 거시경제계량모형을 수립한다.

거시경제 연립방정식 모형의 설정(specification) 및 추정(estimation), 모의실험(simulation)의 과

정을 반복하여 보험산업 전망을 위한 적절한 모형의 수립을 모색하고 보험산업을 둘러싼 정책변수와 거시경제적인 외생변수들의 변화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보험산업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인 수입보험료와 원수보험료 등 대내외 경제충격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계량경제모형을 개발할 예정으로 보험산업을 포함한 거시경제계량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대내외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충격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보험산업 경제전망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시경제계량모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속성장을 위한 금융상품 수수료 체계 연구

경영전략실 | 보고서

203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수수료 수준을 경감하려는 움직임과 수수료 구조를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특히, 보험상품은 조기 해지 시 환급률이 낮고 판매수당 비중이 높으며 판매에만 집중하는 영업 관행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사후유지·관리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여 금융소비자 만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의 정립을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산업 관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금융상품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방향을 참조하여 소비자보호와 유지·관리서비스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를 탐색하고 금융소비자 만족 및 금융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경영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판매수수료 지급 실태를 업권별, 채널별, 상품별로 조사하고 금융업권별로 판매수수료 체계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선진국들의 금융상품 수수료 체계 현황, 제도 개선 추진 현황을 조사하여 판매수수료 지급 및 환수 관련 법규,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검토하여 해외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체계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특히, 수수료 선취방식과 후취방식 간의 장단점을 금융소비자 관점과 금융회사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수료 지급 체계를 제시하고 또한 이에 대응하는 금융회사의 경영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각종 패러다임 변화, 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만족과 금융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수수료 체계를 모색하고 또한 각 체계에 적합한 경영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이해를 촉진 및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금융산업 대응전략

전용식(연구위원) | 보고서

204

연구배경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와 이로 인한 저금리는 통화·재정정책, 국민경제의 총수요·총공급, 가계의 자산구성, 그리고 이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 동인이다.

- 그럼에도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이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저성장·저금리와 인구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 등의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국민경제와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의 변화방향을 예측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일본의 저성장·저금리의 원인인 버블붕괴의 원인과 일본 정부의 대응을 검토하여 버블붕괴 전후의 일본 거시경제의 전개 과정과 재정·금융정책의 기초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버블붕괴 이후 은행·보험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분석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진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일본의 은행과 보험회사들의 상품·판매채널, 경영전략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경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일본 정책당국의 금융·보험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고 정책변화에 대한 금융·보험산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에 국한하지 않고 가능하면 저성장·저금리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주요국의 경험도 분석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영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보험산업의 구조변화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이점이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환경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하에서 금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금융산업 구조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금융회사의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험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황진태(연구위원) | 보고서

205

연구배경 최근 들어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다양한 보험유통채널이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보험유통채널의 다변화로 채널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채널 간 역할분담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채널별 영업행위규제의 정립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다변화된 보험유통채널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향후 채널별 성장전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내용 채널별 실적추이 및 발생한 문제점을 조망하고 주요 채널별로 비용, 관리, 인력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측정된 효율성 정도가 해당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채널별 성장성을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보험회사의 채널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래 채널환경에 적합한 채널별 영업행위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당국의 채널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기존 연구와 달리 보험유통채널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측정하고,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보험회사의 채널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채널별 성장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유통채널별 현황 및 제도,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고 채널별 효율성과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채널별로 영업행위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당국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hapter

2

리스크관리 선진화

• 경영정보의 생산 및 공시 체계 개선방안

경영정보의 생산 및 공시 체계 개선방안

김해식(연구위원) | 보고서

208

연구배경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가격을 현행보다 자유롭게 산출할 수 있는 현금흐름방식(CFP)을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험손익 정보 등에 대한 시장의 공시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늦어도 2018년부터 보험회사는 자산과 부채 모두에 대해 새 금융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보험료 결정 및 보험금원가 정보의 생산체계가 모두 변화함에 따라 보험회사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정보의 생산과 공시체계에 대한 장·단기적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내용 준비금 시가평가를 다루는 보험 회계기준은 1차 공개(2010)를 거쳐 2차 초안(ED2)이 2013년에 공개되고, 2014년에 최종기준서로 확정될 것으로 예정되나 새 회계기준이 건전성 감독에 요구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시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대한 일반회계(재무회계)와 감독회계 간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국제보험회계기준 2차 초안(ED2)과 단일 또는 이원화된 회계체계에 대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자산과 부채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과 유럽, 북미의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운영 현황을 분석·비교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의 Solvency 2, 미국 및 캐나다의 운영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대효과 향후 건전성 감독의 정보 수요와 재무회계에서 생산된 정보의 활용에 관한 연구로서 부분적으로 접근한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것으로 본다.

현 시기는 기존 회계제도가 새 회계제도로 이행하는 시기인 만큼 새로운 환경의 건전성 감독에 맞는 정보생산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Chapter

3

고령화와 신성장

-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금융산업의 역할제고 방안
- 소득수준을 고려한 연금세제 연구
-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위한 의료보장체계 연구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금융산업의 역할제고 방안

고령화연구실 | 보고서

210

연구배경

보험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인구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위기이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구고령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중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보험산업 및 금융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인구고령화하에서 보험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복지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우선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보험산업 및 금융산업의 현황을 진단한다.

이미 인구고령화가 진전된 국가들의 사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내 보험산업과 금융산업의 변화를 예상한다.

금융산업 내에서 보험산업이 인구고령화를 지속성장 및 신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보험산업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가 마련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선행연구들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과 그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안 및 금융산업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에 집중하여 경영진의 경영전략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인구고령화를 지속 성장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며, 인구고령화하에서 보험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논리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수준을 고려한 연금세제 연구

정원석(연구위원) | 보고서

211

연구배경 다층 보장체계의 지원책으로서 개인과 퇴직연금저축에 대한 세 제지원(소득공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소득공제제도하에서는 소득공제의 혜택이 누진세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중·저 소득층에는 세제지원 효과가 적고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본 연구는 연금저축 소득공제제도하에서 소득수준별로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더 많은 정책의 혜택을 얻게 되는지, 또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연금저축 소득공제제도하에서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그룹과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변화했을 때 효과도 분석할 것이다.

그 외에도 연금저축 장려를 위한 해외의 제도 및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한 후, 국내의 연금저축 장려를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과거의 연금저축세제지원은 단순한 금액에 관한 논의만 있을 뿐 효율적인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에 비해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정부가 더 적은 재정지출로 더 높은 후생수준을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보험업계도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 제도가 정책화된다면, 연금저축에 대한 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통해 정부, 연금저축 소비자, 보험회사 모두 더 높은 후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위한 의료보장체계 연구

고령화연구실 | 보고서

212

연구배경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율은 공사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경제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 민영건강보험이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민영건강보험의 유용성마저 지적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이 실제로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상품구조 및 보장체계 때문인지 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위한 의료보장체계는 어떤 것인지 밝혀 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실태 및 상품설계상의 문제점 분석하고자 정액 및 실손담보별 가입 현황을 진단해 볼 것이다.

또한 민영건강보험의 상품구조 또는 보장체계가 도덕적 해이 및 유인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정성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민영건강보험과 의료비 지출과의 관계를 피보험자(환자)와 의료공급자 차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 및 의료기관의 유인수요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해외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 해외의 민영건강보험상품을 비교 검토한 이후, 실증분석 등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및 상품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위한 의료보장체계도 모색해 볼 예정이다.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민영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련한 경제주체의 행태분석을 통해 상품 차원 및 제도적 차원의 개선방안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즉, 민영건강보험으로 인한 잠재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인구고령화하에서 민영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hapter

4

금융보험 법제개선

- 보험법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 보험고객정보 처리 범위와 절차 연구

보험법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금융정책실 | 보고서

214

연구배경

보험업을 규율하는 보험법제는 기존의 법제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규제를 추가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시장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또한 현재의 보험법제는 과거 전통적인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에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진화되고 발전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에는 부적합한 내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장래의 보험업의 기능과 역할제고를 위해 보험법제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우선 보험계약법과 보업업법, 보험업법과 감독규정, 보험법규와 관련법(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금산법 등) 등 법적용상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현재의 보험법제에 대해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유럽의 보험법제(EU와 독일), 미국 뉴욕주, 일본을 대상으로 주요국의 보험법제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법제의 구조와 상호 연계성, 보험업 부분별 법규는 해당국가 감독기구의 자료를 조사 연구하고 미진한 법제 부

분에 대해서는 주요국에 대해 해외 출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보험법제의 발전방향을 국제적 정합성, 국내 보험시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보험관련 법제의 통합화 및 일원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보험업에 대한 정의와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을 획정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그간 시장개방과 규제완화의 흐름하에 선택적으로 도입된 각종 법규에 대한 평가를 해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보험회사 사업모형에 부합한 법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보험업에 이해촉진과 보험상품 활용도를 제고하여 보험신뢰도 고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고객정보 처리 범위와 절차 연구

송운아(연구위원) | 보고서

215

연구배경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등 불완전정보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집중·이용·제3자 제공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또는 기왕증에 대한 정보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정보 및 교통법규위반정보 등이 보험제도의 적정운용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나 보험고객정보 처리범위 및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인수 및 지급 심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에는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므로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양 측면을 고려하여 보험고객정보 처리 범위와 절차를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석을 할 예정이다.

하나는 보험고객 정보 현황과 문제점을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주요국의 보험고객정보 처리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둘째는 보험고객정보 처리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할 예정이다.

보험고객정보 처리 현황은 보험고객정보 처리에 대한 법규, 처리 실태(범위 및 기준의 양적 측면과 투명성, 접근성, 통제성, 보안 등의 질적 측면)를 살펴보고, 보험고객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식과 태도를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보험고객정보 처리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과 편익/비용 분석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보험감독 및 정책당국의 개인정보보호 측면을 고려한 보험고객정보 처리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FY2012 연구 관련 활동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고령화리뷰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보험·금융 도서 정보제공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금융연구』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학술지’로, 2006년 1월부터는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발간 초기에는 민영보험 분야에 국한된 학술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2005년부터는 금융 및 사회보험 분야로 게재 범위를 넓혔으며, 2008년 보험연구원 출범 이후에는 공사보험과 금융전반을 아우르는 보험금융 분야 전문학술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연구윤리 기준’을 시행함으로써 논문의 작성 및 심사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투고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연간 발간 횟수를 3회(3월, 7월, 11월)에서 4회(2월, 5월, 8월, 11월)로 조정하였다. 『보험금융연구』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보험·금융 전공 교수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연구원에서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2012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1호 (2012년 2월)	제 목	저 자
	변액보험의 보증준비금 평가시 확률변동성 특성을 통한 주식수익률 시나리오 적용 연구	노건엽
	불연속시간체계에서 접근한 예금보험 가격결정모형	오기석
	자동차보험의 확률론적 통합보험리스크 실증분석	조용운, 조재린
	즉시연금보험의 특성과 가입자 선택행동 분석	이경희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2호 (2012년 5월)	제 목	저 자
	소파동(Wavelet)분석을 활용한 정책금리와 수익률곡선 간 관계 분석	박창균, 허석균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지정가 주문의 체결과 취소에 대한 생존분석	한상범
	확률모형을 활용한 교통사고 유자녀 수 추정	조재린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3호 (2012년 8월)	흡연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건강보험에 대한 시사점	김대환, 이기호, 정기택
	제 목	저 자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보험영업 효율성 분석 :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중심으로	서대교, 황진태
	생명보험시장에서 광고가 가격민감도에 미치는 영향	최영목, 김동겸
	개인연금자산의 수요와 적정성에 관한 분석	여윤경, 이남희
보험금융연구 제23권 제4호 (2012년 11월)	경영진의 주가연계보상이 부채의 만기구조에 미치는 영향	박영호, 박대근, 윤정선
	제 목	저 자
	경제변수가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해약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권용재, 윤정선, 이재민
	음이항회귀모형을 이용한 보험설계사들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전희주, 안철경
	효율적 다층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위한 국민연금 구조개선 방향	김원식
	주가지수익률 추정 모델 선택에 따른 변액 연금 최저보증준비금 분석	김용희, 김창기
	보험그룹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민세진, 김현수

2. 국내외 경제·금융·보험 동향 정보제공

동향분석실은 년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보험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동향』은 테마진단, 경제금융 동향, 국내보험시장 동향, 해외보험시장 동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마진단은 보험산업과 관련한 현안 이슈를 발굴하여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금융 동향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변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국내보험시장 동향은 보험회사들의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집계하여 종목별 보험료, 상품 구성비,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판매채널, 경영수지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변화 원인 등의 분석을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다. 해외보험시장 동향은 글로벌 보험시장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주요국의 보험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요국에는 데이터 집적이 가능한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동향분석실이 주관하고 있는 『KiRi Weekly』는 경제·보험·금융 전반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국내외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간 웹저널인 주간이슈, 주간포커스, 글로벌 이슈,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주간이슈는 세계경제 및 보험·금융권의 변화를 시의 적절하게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working paper 형태로 금융·보험 및 실물경제에 관한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4월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총 222호가 발표되었다. 주간포커스는 전·금주 발생한 경제·금융 일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배경, 진행, 전망 및 시사점 등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며, 2010년 5월부터 추가되었다. 글로벌 이슈는 국내외 경제, 금융,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연구소재 발굴과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 등에 도움을 주고자 기존의 해외금융뉴스와 국내금융뉴스를 통합하여 2013년 1월부터 추가되었다. 기존의 해외금융뉴스는 북미·유럽·일본 및 중국지역의 주요 경제, 금융, 보험 뉴스와 정보를 연구기관과 정책·감독 당국자 및 보험회사에게 신속하게 요약·전달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국내금융뉴스는 한 주간에 발생한 국내 주요 금융·보험 시장 관련 동향과 법규·제도·감독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외 금융시장 주요지표는 국내외 금리·환율·주가·국제유가 및 금 시세의 추이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하여 현재 금융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동향분석실은 보험시장을 둘러싼 금융·경제 환경변화 및 보험시장의 변화 등을 영문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를 분기별 1회, 『Korean Insurance Industry』를 년 1회 제공하고 있다.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는 보험회사들의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경영수지, 보험료 변화, 상품 구성비,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투자수익, 판매채널 등을 간략히 분석하여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Korean Insurance Industry』는 보험산업과 관련한 1년 동안의 국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 및 보험산업 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보험산업의 재무상태, 보험료, 수익·비용, 판매채널 등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년 1회 영문보고서로 발간하며, 영문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3.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은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행태와 향후 보험수요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 상품개발, 영업정책, 채널활용 등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감독당국의 정책수립 시 요구되는 자료를 집적·분석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입수된 데이터 및 통계치는 보험회사의 영업기획 및 판매실무 분석 자료로 재활용되며, 각종 정책수립 및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제공되고 있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2001~2012년 동안 총 1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설문지 작성을 위한 T/F가 보험연구원 내 구성 중에 있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가입 실태 및 소비자 수요파악을 목적으로 하여 매년 동일하게 시행되는 기본조사와 해당 연도에 보험업계의 이슈가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시행되는 이슈별 조사로 구성된다.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일반인(세대주 포함) 총 1,2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법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며, 표본추출방법은 인구통계변수인 연령·성별·지역·수입규모·결혼유무 등을 기준으로 전국 비례별로 층화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2012년 2월 조사대행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조사대행기관의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기본조사 항목인 보험가입률, 가입건수, 가입경로, 가입이유, 가입상품 만족도 및 보험가입 회사에 대한 조사, 향후 상품 및 채널별 가입의향, 선호 가입채널 및 그 이유, 금융기관 선호도 및 보험가입 희망회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슈별 조사 항목으로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상품 선택, 보험회사 신뢰도 및 충성도, 가격경쟁 방식, 판매채널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고령화,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조사가 고려되고 있다.

이슈별 설문내용 (2001~2012)	연 도	주요 이슈
	2001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2년	자동차보험 갱신, 건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2003년	주5일 근무제도에 따른 보험상품 선호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외국계 보험회사 선호도
	2004년	자동차보험 선호도, 종신보험, 민영건강보험, 연금보험상품
	2005년	건강 및 간병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방법, 채널만족 및 방카슈랑스 관련, 자산관리서비스
	2006년	민영건강보험, 고령화 및 연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보험회사 브랜드, 교차모집, 보험사기
	2007년	보험회사 이미지 및 영향 매체,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 보험소비자지수 관련
	2008년	보험회사 및 판매자 신뢰도와 만족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보험광고
	2009년	자동차보험제도,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가계위험, 보험사기
	2010년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대비, 건강보험(실손의료형보험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실태, 농협보험, TV 홈쇼핑 보험가입 의향, 금융소외(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서비스 및 대출 관련)
	2011년	연금, 고령화, 건강보험, 보험금 지급방법, 보험회사 및 설계사 이미지
	2012년	경제환경에 따른 보험상품 선택 추세 변화,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 문제, 가격경쟁 방식, 판매채널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금, 소비자보호

4. 고령화리뷰

고령화연구실이 주관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고령화 리뷰: International Ageing Trend』는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통계와 정책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인구고령화 동향지로서 고령화 진단,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관련 통계 및 정책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화 진단은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현안 이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시 논쟁할 수 있는 주기적이고 공식적인 채널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인구고령화 관련 통계 및 정책변화 부분에서는 통계가 특정 주제에만 한정되어 집적되고 있는 여타 연구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모든 통계들을 집적·비교하고 통계와 더불어 주요 정책변화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5.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5.1 국제세미나 개최

보험연구원은 선진 보험·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보험산업 종사자들의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매년 해외의 저명한 보험·금융 산업 전문가 및 학자를 초대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은 2008년에 시작되어 2012년 5회를 맞이하였다. 2010년에는 ‘보험산업의 신성장과 소비자 신뢰 강화’라는 주제, 2011년에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 보험산업의 해외진출과 신성장’, 2012년에는 ‘새 금융질서에 따른 보험산업의 신성장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보험산업의 해외진출과 신성장	
	소주제	발표자
2012년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2011년 10월 30일)	- 글로벌 보험산업의 메가트렌드 (주요 국가별 뉴트렌드 진단) - 리스크관리를 통한 보험회사의 지속성장 전략	- 스티븐 와이스바트 미국 보험정보연구소(III)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부사장 외 - 리처드 오브라이언 차티스 아태지역 리스크 매니지먼트 총괄 최고 책임자 외

한편, ‘고령화리스크와 노후소득대책’이라는 주제로 2008년 6월 개최된 제5회 국제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보험연구원의 국제세미나가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2년 부터 다시 개최 되었으며,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연구원은 향후 각종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더욱 많은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2년
보험연구원
국제세미나
(2012년 10월 19일)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소주제	발표자
- 건강보험시장에서의 경쟁, 유인, 그리고 규제	- Prof. Randall P. Ellis, Boston University, US
- 일본의 건강보험체계와 생손보의 융합	- Prof. HongMu Lee, Waseda University, Japan)
- 북유럽의 복지개혁 : 인구고령화 그리고 건강 보험과 공공보건의 이중성	- Prof. Sven E.O. Hort, Linnaeus University, Sweden, & Seoul National University)
- 건강보험의 기능과 발전방향	-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5.2 OECD 보험 및 사적 연금위원회 참석

보험연구원은 1993년 7월부터 재무부 국제금융국 주관 OECD 보험작업반에 소속되어 관련 정책 자료 작성과 보험·사적 연금위원회(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Committee)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OECD와 관련한 일련의 회의에서 한국정부가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 한국 OECD 대표부 참사관과 협조하여 올바른 결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때나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보험정책 수립방향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작성하여 정부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1995년 6월부터 1996년 3월까지 OECD 보험위원회의 추가요청자료 작성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1996년 6월의 제57차 OECD 보험회의부터 2012년 12월의 제90차 OECD 보험회의까지 한국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2012년에는 6월에 OECD 사적연금 T/F 회의, 보험·사적 연금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며, 12월에 사적연금 T/F 회의와 보험·사적 연금위원회 회의, 테러리즘 리스크와 보험시장 회의가 개최되었다. 최근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는 금융위기 이후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및 금융시장위원회(Money Market Committee)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산업 감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향후에도 OECD 보험·사적 연금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정책연구에 적극 활용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5.3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참석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보험감독관련 최고의 국제기구로 전 세계에 걸쳐 146개 금융 및 보험감독당국이 회원(members)으로, 126개 보험관련 기관이 참관인(observers)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와 함께 금융감독관련 3대 국제기구 중 하나로 사무국은 스위스 바젤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보험

감독자협의회는 보험감독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의 제정, 각국 보험감독기구 간의 정보교환, 보험 감독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전 세계 금융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1994년에 창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원기관(Member)으로, 보험연구원을 포함하여 일부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이 참관관(Observer)으로 가입 중이다.

전문위원회와 금융안정성 위원회 등 회원에게만 참석이 허용된 회의에는 참관인의 참석이 제한되나, 전문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실무그룹 회의(Working Party Meetings)는 참석이 가능하므로 보험연구원은 이행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 및 산하 소위원회 위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2년에는 6월에 보험그룹·지급능력 실무소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영업행위·지배구조·보험그룹·지급능력 실무그룹소위원회에 각각 참석하였다.

한편 국제보험감독자협회의 활동이 보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에 보험연구원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의 국제화와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 2월 7일부터 보험 업계 및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IAIS 한국포럼”을 구성, 격월 주기로 개최하고 있다.

5.4 LIMRA-LOMA 연례전략이슈회의의 참석

LIMRA는 보험산업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회사들에 리서치, 컨설팅, 평가, 개발, 준수, 규정 서비스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LOMA**는 능력 있는 보험설계사와 같은 유능한 임직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중심으로 솔루션을 제시하는 회사이다. 이들 두 회사에서 주최하는 **LIMRA-LOMA**의 연례전략이슈회의는 아시아권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CEO, 임원, 주요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마케팅, 판매채널, 기업경영 등의 트렌드와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2012년 6월 6일(수) 개최된 제20회 LIMRA-LOMA 연례전략이슈회의는 소셜네트워크 세대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 및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 보험연구원은 향후 보험산업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판매채널 전략, 특히, 비대면 채널 발전방향 및 전략 구축에 초점을 두고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보험연구원의 판매채널 관련 연구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6. 보험·금융 도서 정보제공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보험연구원의 업무 및 조사연구 활동 지원과 보험회사 임직원 및 보험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교수들에게 도서 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보험 관련 전문도서 및 최신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정리·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에서는 국내보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NAIC, ISO, SOA, CAS, CII, A.M. Best, LOMA, LIMRA, ABI,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일본손해보험협회, 일본생명보험협회 등

해외 주요 보험 관련 단체들의 보고서와 단행본, 통계자료, 법률서적 등을 1970년대 초반부터 최신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소장하고 있어 보험지식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Maestro-Y」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보험연구원 외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실은 2013년 2월 말 현재 단행본 23,900여 권, 학위논문 1,500여 권, 정기간행물 260여 종, 세미나 자료 및 보고서 2,300여 종, 비도서 자료 11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V.

일반 현황

경영비전

연혁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임직원 현황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1. 경영비전

보험연구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보험연구원은 세계화·융합화·겸업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물론이고 국내외 금융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금융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2. 연혁

보험연구원은 2008년 2월 26일 개원한 이후 2008년을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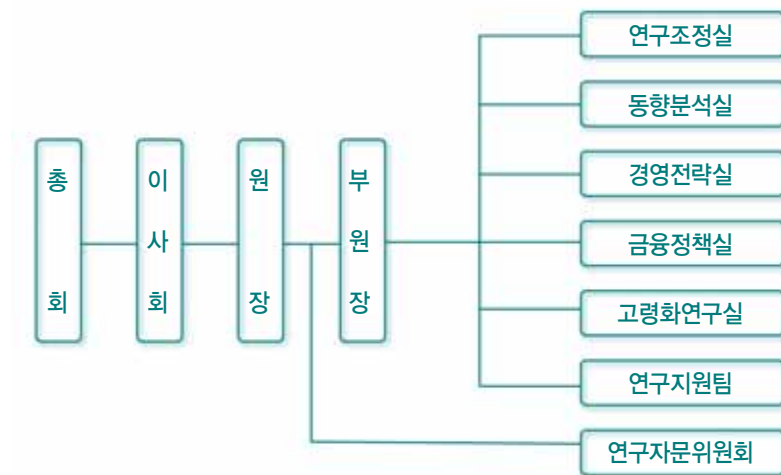
2대 김대식 원장 취임 이후에는 보험산업의 장기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를 위해 현안연구 외에도 고령화 연구와 장기 발전 방향 연구를 장기연구분야로 정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연구기관에 걸맞은 유연한 고용 및 성과시스템 아래 유능한 연구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연구직군에 대해서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한 재임용제도를 구축하고, 연구직군과 행정직군을 포함한 전직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연구기관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보험연구원은 현재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주요 연혁	일 자	주요 내용
	1995년 9월	보험연구소 설치
	1996년 9월	인터넷 문헌정보 서비스 개시
	1999년 9월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
	2004년 7월	제1회 국제세미나 개최
	2006년 1월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 선정
	2007년 12월	보험연구원 설립 금감위 승인
	2008년 2월	보험연구원 개원, 초대 나동민 연구원장 취임
	2009년 2월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 제호 변경
	2010년 4월	2대 김대식 연구원장 취임
	2010년 11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창립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3.1 조직도



3.2 총회

보험연구원은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직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013년 2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24개사, 손해보험회사 19개사가 보험연구원 사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기총회는 년 1회 매회계년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안전발생 시 의장이 소집한다. FY2012에는 2012년 5월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총 6회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3.3 이사회

보험연구원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보험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기타 보험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장 2인), 원장, 사원대표이사(생명보험대표 5인, 손해보험대표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FY2012에는 2012년 5월 제1차 이사회를 시작으로 총 4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3.4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가 1년인 연구자문위원은 보험·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택된다. 보험연구원장은 연구자문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된다. FY2012년 연구자문위원회는 연구사업 선정에 대한 자문을 안건으로 2013년 1월에 개최되었다.

4. 임직원 현황

(2013. 2월 말 현재)

구분		임원	연구조정실	동향분석실	경영전략실	금융정책실	고령화연구실	연구지원팀	계
원 장		1							1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1	1		2	1		5
	연구위원		1	1	7	4	5		18
	수석연구원			1	1	1	1		4
	선임연구원			4		1	1		6
	연구원			5	1	2	1		9
	연구조원		1		1	1	1		4
행정원			2					5	7
계		1	5	12	10	11	10	5	54

5. 실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연구조정실

- | 연구사업계획의 기획 및 수립
- | 연구사업계획의 일정 및 실적 관리
- | 연구관련 대외업무 및 직원의 대외활동 관리
-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기획
- | 연구관리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등 각종 연구 관련 위원회의 주관
- | 신규연구사업 개발 및 업무 조정
- | 대내외 연구원 홍보 및 소통
- | 발간물의 편집 및 교열
- | 기타 연구 관련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안철경	부원장/실장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마케팅, 판매채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거시경제, 계량경제, 금융
김세환	부장	서강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재무 및 보험
김진익	수석담당역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재무관리
정진영	연구조원	국민대학교 국어교육학 석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동향분석실

- | 국내외 경제, 금융동향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 | 국내 보험시장 동향분석 및 전망
- | 해외 보험시장 정보의 조사 및 분석
- | 금융 및 경제 관련 주요 통계의 집적관리
- | 보험수요 예측모델 개발
- | 보험가입성향 등 수요자 동향에 대한 조사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실장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화폐금융, 국제경제, 응용미시
전용식	부실장/센터장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계량경제, 금융경제, 환경경제
장동식	수석연구원	고려대학교 통계학 석사	리스크 감독, 생명보험
이정환	선임연구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거시경제, 계량경제
최원	선임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리스크관리, 보험경영
박정희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마케팅
김세중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금융경제
이경아	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이혜은	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김혜란	연구원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채원영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석사	응용통계
이소양	연구원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경영전략실

- |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및 보험사기 연구
- | 자산운용 및 자산부채종합관리 연구
- | 위험관리 및 재무건전성 연구
- |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 보험회계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진익	연구위원/실장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자산운용, 헤지펀드, 파생상품
김소연	연구위원	University of Waterloo 보험계리학 박사	Ruin Theory, 손해보험
조재린	연구위원	Queen's University 통계학 박사	통계학, 리스크관리
김해식	연구위원	St. John's University 리스크 관리학 석사	리스크관리, 보험회계
변혜원	연구위원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응용미시
조영현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재무관리
전성주	연구위원	Bos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재무계량경제, 시계열계량경제
기승도	수석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 박사	통계학, 자동차보험
오병국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응용미시
정민지	연구조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금융정책실

- | 보험산업 정책 및 제도개선과제 개발연구 및 지원
- | 보험회사 합병, 겸업화, 진입·퇴출 등 보험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 | 보험모집 및 채널에 관한 연구
- | 업무행위규제,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지배구조, 자율규제 등에 관한 연구
- |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하부구조에 관한 연구
- |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에 관한 연구
- |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 | OECD 등 국제기구와 관련한 연구 및 지원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이기형	실장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경영, 보험정책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국제금융, 파생금융
황진태	연구위원	Clems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계량경제, 경제성장
송윤아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경제학 박사	응용미시, 산업조직, 지배구조
이승준	연구위원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기업금융, 응용미시
박선영	연구위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투자론, 부동산금융, 국제재무, 자본시장
김경환	수석연구위원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정책, 보험 관련 법규
강민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보험관련법
권오경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회계학
정인영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김영주	연구조원	단국대학교 행정학 학사	보험금융연구 편집, 연구보조업무

고령화연구실

- |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공사 연금에 관한 연구
- | 의료실손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공사 건강보험에 관한 연구
- |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제반 이슈 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김대환	실장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박사	계량경제, 보건경제, 산업조직, 노동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생명보험, 리스크관리, 퇴직연금
조용운	연구위원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건경제, 계량경제, 보험경제
이창우	연구위원	Bos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노동경제, 보건경제
윤상호	연구위원	George Mas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국제금융, 파생금융
정원석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산업조직, 게임이론
이상우	수석연구위원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 박사과정 수료	생명보험, 일본금융보험 동향
김동겸	선임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재무관리
김미화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김미현	연구조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경영학 석사	교정 및 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연구지원팀

- | 연구원 경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및 관리
- | 일반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 보험금융연구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출판관리
- | 각종 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의 행사 운영
- | 각종 계약 체결 및 관리
- | 사무실 비품, 물품, 차량의 조달 및 관리
- | 결산, 인사, 교육, 복리후생제도 기획 및 입안
- | 예산의 수립·운영 및 통제
- | 의전 및 비서업무
- |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 홈페이지, 인터넷, 사무관리전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 도서·자료의 수집, 구입, 관리 및 해외연수·출장자료의 관리
- | 연구조사정보 DB의 구축 및 도서회원제 운영 및 관리
- | 문서수발, 통제, 보존 및 관리
- | 기타 연구원 내 사업추진과 관련한 일반업무 및 행정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업무분야
김선아	팀장	연구지원 업무 총괄
홍성연	수석담당역	회계, 세무, 교육, 급여 업무
변철성	수석담당역	기획, 행사 업무
이상윤	선임담당역	총무, 서무, 출판관리 업무
김형진	선임담당역	인사, 예산 업무

6. 정기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정기간행물	간행물 명	발간 주기	주 관
	보험금융연구	연 4회(2, 5, 8, 11월)	연구조정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연간(3월)	동향분석실
	Korean Insurance Industry	연간(7월)	동향분석실
	보험동향	계간(3, 6, 9, 12월)	동향분석실
	KiRi Weekly	주간	동향분석실
	고령화리뷰	연간(3월)	고령화연구실

용역보고서	보고서 명	저 자
	PL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연구	조재린 외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 기본방안	이기형 외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방식 개선방안	임준환 외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김대환 외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류건식 외
	자연재해보험 진흥을 위한 기본연구	이기형 외
	보험회사 손익분석과 이익처분에 관한 연구	김해식 외
	ERD 평가모형개발 적정성 검토	조재린 외

2012 연차보고서

발 행 인 김대식
편집위원장 안철경
편 집 위 원 김세환, 김진억
편 집 실 무 정진영
제 작 경성문화사 (786-2999)
발 행 일 2013. 3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